

박사학위 청구논문

지도교수 이 용 훈

경 제 적 신 자 유 주 의 에 대 한
사 회 교 리 적 대 안

- ‘공유경제’를 중심으로 -

<A Study on a Social Doctrine Plan as an
Alternative to Economic Neo-Liberalism>

- with Focus on the Economy of
Communion -

2009년 8월

수 원 가 톨 릭 대 학 교 대 학 원

신 학 과 실 천 신 학 전 공

박 영 봉

경 제 적 신 자 유 주 의 에 대 한
사 회 교 리 적 대 안
- ‘공 유 경 제’를 중 심 으 로 -

<A Study on a Social Doctrine Plan as an
Alternative to Economic Neo-Liberalism>
- with Focus on the Economy of
Communion -

지 도 교 수 : 이 용 훈

이 논 문 을 신 학 박 사 학 위 논 문 으 로 제 출 함.

2009년 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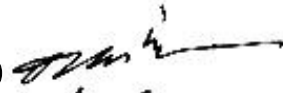
수 원 가 톨 릭 대 학 교 대 학 원
신 학 과 실 천 신 학 전 공
박 영 봉

박영봉의 신학박사 학위 논문을
인 준 함

2009년 6월

심 사 위원장 : 이 성 호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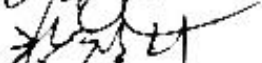
심 사 위 원 : 이 동 호

(인)



심 사 위 원 : 황 창 희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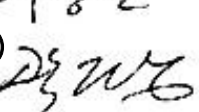
제1지도 교수 : 이 용 훈

(인)



제2지도 교수 : 곽 진 상

(인)



수 원 가 톨 릭 대 학 교 대 학 원

【약 어 표】

1.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사목헌장: 바오로 6세, 현대 세계의 교회에 관한 사목헌장, 1965. 12. 7,

2. 교황 및 교황청 문헌

새로운 사태: 레오 13세, 새로운 사태, 1891. 5.15,

사십주년: 비오 11세, 사십주년, 1931. 5. 15,

어머니요 스승: 요한 23세, 어머니요 스승, 1961. 5. 15,

지상의 평화: 요한 23세, 지상의 평화, 1963. 4. 11,

민족들의 발전: 바오로 6세, 민족들의 발전, 1967. 3. 26,

팔십주년: 바오로 6세, 팔십주년, 1971. 5. 14,

노동하는 인간: 요한 바오로 2세, 노동하는 인간, 1981. 9. 14,

사회적 관심: 요한 바오로 2세, 사회구속적 관심, 1987. 12. 30,

자유의 자각: 교황청 신앙교리성, 자유의 자각, 1986. 3.22,

백주년: 요한 바오로 2세, 백주년, 1991. 5. 15,

아메리카 교회: 요한 바오로 2세, 아메리카 교회, 1999.

아시아 교회: 요한 바오로 2세, 아시아 교회, 2000.

가톨릭교회 교리서: 요한 바오로 2세, 가톨릭교회 교리서, 1997. 8. 15.

간추린 사회교리: 교황청 정의평화 위원회, 간추린 사회교리, 2004. 4. 2,

사제양성지침: 교황청 가톨릭 교육성, 사제 양성의 기본지침, 1985. 3. 19.

3. 기타

CCK: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Catholic Conference of Korea)

CBCK: 한국천주교주교회의(Catholic Bishops Conference of Korea)

【목 차】

I. 서 론	1
1. 문제제기	1
2. 연구목적	6
3. 연구범위	8
4. 연구방법	10
4.1. 성찰 단계	10
4.2. 판단 단계	10
4.3. 실천 단계	11
II. 본 론	12
제 1장. 경제적 자유주의에 대한 이론적 근거	12
1. 경제에 대한 신학적 이해	12
1.1. 하느님의 구원계획으로서의 경제	13
1.2. 인간을 위한 경제	13
2. 경제적 자유주의에 대한 이해	15
2.1. 자유주의의 원리와 질서	15
2.1.1. 역사적 배경	16
2.1.2. 원리	17
2.1.3. 사회질서	18
3. 경제적 자유주의의 근원	21
3.1. 고전적 자유주의(Classical liberalism)	21
3.2. 신고전자유주의(New Liberalism)	22
3.3. 질서자유주의(Order Liberalism)	24
3.4. 케인즈주의(The Keynesian)	27
3.5. 신자유주의(Neo liberalism)	29
4. 경제적 자유주의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	35
4.1. 경제적 신자유주의	35
4.2. 시장경제	36

4.3. 국가	39
4.3.1. 보조성의 원리	39
4.3.2. 공동선의 실현	40
4.4. 노동과 자본	41
5. 요약	44
 제 2장. 경제적 자유주의 현상에 대한 사회교리적 판단	45
1. 규제완화 또는 철폐현상	45
1.1. 국가의 규제 완화 또는 철폐 현상	45
1.2. 규제완화 실현	46
1.3. 규제완화의 결과	47
1.4. 국가의 규제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	48
2. 공기업의 민영화 현상	52
2.1. 민영화에 대한 찬반론	52
2.2. 민영화 실현과정	53
2.3. 민영화의 결과	55
2.4. 민영화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	55
3.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58
3.1. 구조 조정의 수단과 정책	58
3.2. 실현과정 및 결과	58
3.3. 구조조정의 영향	60
3.4. 구조조정에 의한 실업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	61
4. 긴축정책	63
4.1. 긴축정책과 복지	63
4.2. 긴축정책의 영향	63
4.3. 복지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	64
5. 노동의 유연화	67
5.1. 목적과 역사적 배경	67
5.2. 형태	68
5.3. 노동유연화가 노동자 삶에 미치는 영향	69
5.3.1. 근로자파견제가 노동자의 삶에 미치는 영향	70
5.3.2. 변형근로제가 노동자의 삶에 끼는 영향	70

5.3.3. 정리해고제가 노동자의 삶에 끼는 영향	71
5.3.4. 시간제노동이 노동자의 삶에 끼는 영향	72
5.4. 노동의 유연화에 대한 사회교리적 판단	72
5.4.1. 공동선의 원리가 실현되어야 한다.	73
5.4.2. 연대성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74
5.4.3. 보조성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75
6. 요약	77
 제 3장. 세계화(Globalization)현상과 사회교리적 판단	79
1. 의미와 역사적 배경	79
2. 원인	81
3. 특징	82
3.1. 시장의 세계화	82
3.2. 생산의 세계화	83
3.3. 금융의 세계화	83
4. 결과와 영향	84
4.1. 결과	84
4.2. 영향	85
5. 세계화에 대한 사회교리적 판단	87
5.1. 세계화의 현실과 조건	87
5.2. 세계화에 대한 가톨릭교회의 가르침	88
5.3. 세계화에 대한 사회교리적 판단	89
6. 요약	93
 제 4장. 물신화(Fetishism) 현상과 사회교리적 판단	94
1. 물신에 대한 이해	94
2. 상품, 화폐, 자본의 물신화 과정	96
2.1. 상품의 물신화 과정	96
2.2. 화폐의 물신화 과정	97
2.3. 자본의 물신화 과정	98
3. 자본의 물신화 영향	100
3.1.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의 물신화	101

3.2. 시장경제 물신숭배의 영향	102
4. 물신화에 대한 사회교리적 판단	104
4.1. 신자유주의 물신화와 성경상의 우상화	104
4.2. 신자유주의적 물신화에 대한 사회교리적 판단	106
4.3. 물신화에 대한 사회교리적 판단	110
4.3.1. 자본의 물신화에 대한 판단	110
4.3.2. 시장경제의 물신화에 대한 판단	112
5. 요약	115
 제 5장. 실천적 대안으로서의 ‘공유경제’	117
1. ‘공유경제’의 형성과 동향	117
1.1. 형성과정	117
1.2. 발전과정	119
1.3. 목표	122
1.4. 특성	125
1.5. 연구 동향	128
2. ‘공유경제’에 대한 가톨릭교회의 가르침	131
2.1. 성경과 교부들의 가르침	131
2.2. 현대교회 문헌	135
3. ‘공유경제’의 원리인 ‘주는 문화’	138
3.1. ‘주는 문화’에 대한 이해	138
3.2. ‘공유경제’와 ‘주는 문화’의 관계성	139
4. ‘공유경제’가 제시하는 경제활동	142
4.1. 공유경제 실천방법	142
4.2. 공유경제의 분배와 소유	143
4.3. 공유경제의 저축과 소비	148
5. ‘공유경제’의 전망과 과제	150
5.1. 전망	150
5.1.1. 나누는 문화를 형성해야 한다.	151
5.1.2. ‘소도시’를 형성해야 한다.	151
5.1.3. 새로운 사람을 양성해야 한다.	152
5.2. ‘공유경제’의 과제	154

5.2.1. 경제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154
5.2.2. 새로운 기업경영의 노선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	154
5.2.3. 양성학교를 통한 새로운 사람을 양성해야 한다.	155
5.2.4. 노동에 대한 영적인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	155
5.2.5. 친교의 공동체를 건설해야 한다.	157
5.2.6. ‘복음적인 범람’이 계속적으로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	157
6. 요약	159
 III. 결 론	 160
 참고문헌	 164
 ABSTRACT	 170

【표 차 례】

표-1 소득계층별 비중추이	1
표-2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추이	2
표-3 신용불량자 및 개인파산 신청추이	3
표-4 빈곤율 변화추이	3
표-5 빈곤격차비율 변화추이	4
표-6 연도별 규제현황	47
표-7 민영화된 공기업의 주요 경영변수 평균값	54
표-8 임금근로자 종사자지위별 취업자추이	68
표-9 대륙별 ‘공유경제’사업체 현황	121
표-10 ‘공유경제’ 사업체 분야별 현황	122

I. 서론

1. 문제제기

오늘날 우리나라에 만연되어 있는 경제적 신자유주의는 이 세상을 자본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자본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므로 자본이 있는 자들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어서 빈부격차가 생겨나고 가난한 자와 부자들 간의 양극화 현상을 초래한다.¹⁾ 빈부의 격차와 그로인한 양극화 현상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시킨다. 빈부격차, 양극화 현상, 인간 존엄성의 파괴 등의 현상 앞에서 여러 물음들이 제기된다. 왜 빈부의 격차가 생겨나는가?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사람은 있는 자이거나 없는 자이거나 똑같이 하느님의 모상(imago Dei)으로 창조된 존엄한 인간이건만, 왜 소수의 부자는 존경받고 대다수의 가난한자는 대우받지 못하며 살아가는가? 근본적으로 무엇이 이러한 현상을 발생시키는가?

이러한 물음들에 직면하여 논자는 먼저 현상학적 측면에서 이러한 현상들을 고찰하고, 이어서 그 원인에 대해 살핀다. 물론 빈부의 격차, 양극화 현상 그리고 인간 존엄성의 파괴 현상이 여러 가지 원인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논자는 무엇보다도 경제적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그 주요원인으로 생각한다. 왜냐하면 경제적 신자유주의는 자유경쟁을 원칙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본을 획득하고자하는 경제정책이기 때문이다. 경제적 신자유주의를 내세우는 경제정책은 자본이 있는 자들에게 유리하며, 자유경쟁이라는 미명 아래

1) 소득계층별 비중추이를 살펴볼 때, 상위층과 하위층은 각각 1.7%p와 3.7%p의 증가를 가져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상위층의 점유율 증가보다는 하위층 점유율 증가가 배 이상 높게 나타나 부익부 현상보다는 빈익빈 현상이 더욱 심화되는 현상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중산층 감소가 상위층으로의 상향이동 보다는 빈곤층으로의 하향이동이 중산층 감소에 더 크게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참조: 삼성경제연구소, 소득양극화의 현상과 원인, 2006, 6.)

표- 1 소득계층별 비중추이 (단위:%)

	하위층	중산층	상위층
1997	13.4	64.8	21.8
2000	14.9	61.9	23.2
2005	17.1	59.5	23.5

경쟁력이 있는 자들만 살아남고, 경쟁력이 없는 자들은 자연히 도태하게 만든다. 자본이 있는 이들은 더 큰 자본을 만들게 되고, 더 큰 자본은 더욱 더 큰 자본이 되어 가지만, 자본이 없는 이들은 있는 자본마저도 빼앗기게 되어 점점 빈부격차가 생겨나고, 양극화현상을 초래하는 것이다. 더구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진전과 더불어 재화가 소수국가와 소수재벌의 수중에 집중됨으로서, 부유한 나라와 가난한 나라 사이의 갈등, 자본가와 노동자의 첨예한 대립 등은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다른 한편, 경제적 신자유주의적 사상에서 발생한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 노동의 유연화 문제 등은 중국에는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한다. 황금만능주의와 이기주의로 인해 인간의 존엄성이 파괴되고 인간의 권리가 박탈당하고 있으며, 사회질서가 파괴되어 윤리적, 도덕적 해이와 그에 대한 불감증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다. 그리하여 복잡하고 변화무쌍한 현대 사회에서 인간은 어떤 것이 참으로 가치 있는 삶인지를 알지 못하고, 희망과 불안이 엇갈리는 혼돈 속에서 방황하고 있다.²⁾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선 한국사회도 외국자본 유입으로 경제주권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20대 80’ 또는 ‘10대 90’의 사회로 불릴 만큼 수입과 소비 생활에 따른 경제활동의 빈부격차는 중산층이 몰락하고 있으며, 시간이 갈수록 불평등 구조가 심해져 가고 있다. 국내 가계의 금융부채는 320조원을 넘어섰고,³⁾ 신용불량자는 360여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⁴⁾ 생계형 자살자는 하루 평

2) 참조: 제2차바티칸공의회, 사목헌장(Gaudium et Spes), CCK, 1994, 4항.

3) 가계의 경제생활 상태를 알 수 있는 지표 중의 하나인 가계대출 현황을 살펴보면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2003년에서 2007년까지 4년 동안 무려 43.3%의 대출증가세를 나타내었으며 2005년과 2006년은 10%를 상회하는 높은 수준의 상승세를 나타내었다. 이것으로 보아 대출증가세가 경제성장률이나 소득증가율 보다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어 가계자금사정이 악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참조: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표-2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추이 (단위 : 십억원)

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
예금은행 가계대출 (증가율)	253,756.9 -	276,326.6 (8.9%)	305,513.9 (10.6%)	346,222.3 (13.3%)	363,680.9 (5.0%)

4) 신용불량자는 2000년대 들어 매년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2003년은 전년에 비해 매우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내었는데 소위 카드대란으로 일컬어지는 정부의 정책실패의 결과이다. 개인파산의 경우도 마찬가지로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증가율을 살펴보면 신용불량자 수의 증가율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 이는 실제로 신용불량자 중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질적으로 악화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지금까지 개인파

군 3명이나 되고 있다.⁵⁾ 특히 노사 간 대립이 점점 더 격화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전체 실업률은 3.5%이나 청년 실업률은 8%에 이르고 있다. 개인파산 신청자는 2003년에 3,856명이었으나, 2007년 한 해 동안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된 개인회생신청자는 5,210명으로 급증하였다. 우리나라의 빈곤층은 약 700여만 명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중소기업과 농촌경제가 파탄되어 가는 현실은 한국사회의 서민대중들의 삶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양극화 현상으로 중산층이 몰락하고 서민의 삶이 어려워져가고 있으며, 재화가 소수국가와 소수재벌의 수중에 집중됨으로서, 부유한 나라와 가난한 나라가 갈등을 겪게 되고, 노사 간 대립이 격화되고 있으며, 실업률이 늘어나고, 중소기업과 농촌경제가 파탄되고 있다는 것이다.⁶⁾

본 논문은 이러한 사회경제의 현상과 그 원인에 대한 분석에서 그치지 않고, 신학적 통찰과 판단을 거쳐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물론 위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세계의 정치·사회·경제·인종·이데올로기 등 여러 분야를 통해 접근할 수 있겠지만, 주로 경제와 그와 관련된 사회 분야의 문제에 집중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근대사회에서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재화의 활용과 경제문제가 가장 큰 사회적 쟁점으로 등장했으

산제도에 대한 인식과 활용이 낮았던 것에 기인한다.(참조: 전국은행연합, 법원행정처)

표-3 신용불량자 및 개인파산 신청추이 (단위: 명)

	2000	2001	2002	2003	2004
신용불량	2,084,000	2,450,000	2,636,000	3,720,000	3,615,000
개인파산	329	672	1,335	3,856	12,317
(%)	0.016	0.027	0.051	0.104	0.341

5) 참조: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2007년도에 자살한 사람은 12,174명이었는데, 이중 경제문제로 인하여 자살한 사람은 8.7%이므로 생계형자살자는 하루 평균 3명 이상이다.

<http://www.nso.go.kr>

6) 국민의 빈곤과 관련된 생활수준을 나타내는 빈곤율은 정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일정한 소득 기준을 정하여 이 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비율로 측정된다. 외환위기를 경험한 직후인 2000년의 빈곤율은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며, 이후에도 증가하였다. 이로 빈곤층에서 더 낮은 소득 집단의 증가가 크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빈곤양상이 양적인 증가와 함께 빈곤심도도 증가하고 있다.(참조: 통계청, 가구소비 실태조사)

표-4 빈곤율 변화추이 (단위: %)

며, 근대의 고전적 자유주의에서부터 현대의 신자유주의에 이르기까지 자유주의 하에서는 개인이나 집단이 재화의 소유와 영리추구를 최대목표로 삼기 때문이다. 특히 오늘날 경제적 신자유주의는 자본이나 그 운용이 경쟁력이 있는 소수의 부자들이나 선진국에게 유리하도록 되어있어서, 다수의 가난한 이들과 노동자들, 그리고 제 3세계의 후진국들은 종속관계 아래 놓여있기에 경제적 빈곤과 함께 인간의 존엄성마저 상실하게 되었다. 신자유주의는 기업들 사이에 경쟁력을 키우고, 적극적인 생산 활동을 통해 보다 발전된 세상을 건설하는데 이바지하는 장점도 가지고 있지만, 시장경제와 자유경쟁을 무기로 경제주체들의 인격적 관계를 가장 심하게 파괴하기 때문에, 권력과 재력을 가지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을 위한 것 일뿐, 대다수의 사람들과 후진국들을 구조적인 빈곤에 직면하게 만든다.

이러한 구조적 부조리의 진실을 파헤치고, 대다수의 가난한 이들과 열악한 환경에 처한 노동자들, 그리고 외채와 외압에 시달리는 제 3세계의 후진국 국민들의 인간 존엄성 상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가톨릭교회는 이러한 정치경제적인 면에 대해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 교회는 인간이 하느님의 모습대로 창조되었기에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기업가든 노동자든 성별, 종족, 문화의 차이를 넘어 모든 인간은 동등하게 고귀한 품위와 인간으로서의

구분	정책빈곤율	상대빈곤율		
	최저생계비	중위소득 40%	50%	60%
1996	3.1	4.6	9.0	14.7
2000	8.2	8.2	13.4	19.4
2003	10.4	10.7	16.0	21.8
2006	11.6	11.9	16.7	22.4

표-5 빈곤격차비율 변화추이 (단위: %)

구분	정책빈곤선	상대빈곤선		
	최저생계비	중위소득 40%	50%	60%
1996	27.3	30.4	27.1	26.9
2000	30.4	32.8	32.0	32.3
2003	35.4	37.4	36.8	36.8
2006	45.0	45.6	43.3	41.5

존엄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를 향유해야 할 권리가 있음을 가르친다. 만일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진리를 신앙과 이성으로 파악하려는 학문적 노력이 신학이라고 한다면, 경제적인 문제가 나은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성의 파괴문제에 신앙과 이성으로 파악해 보려는 신학적 노력은 그 정당성을 부여받는다.

그러므로 논자는 빈부격차의 문제 등 경제적인 제반 문제들을 신앙과 이성으로 파악하고자하며, 경제문제에 대한 인식과 올바른 경제구조의 실현을 과제로 삼고자한다. 그래서 경제 문제에 있어서도 복음을 바탕으로 한 가톨릭 사회교리의 가르침을 성찰하고 현실적 적용의 문제를 다룬다. 이것이 본 논문의 신학적인 문제 제기이며 이 논문을 기술하려는 배경이다.

2. 연구목적

교회의 사명은 세상의 복음화이며 무엇보다 인간의 복음화이다. 여기서 말하는 복음화란 “단순히 다 더욱 넓은 지역에서 또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교하는 것만이 아니고, 하느님의 말씀과 구원계획에 상반되는 인간의 판단 기준, 가치관, 관심의 초점, 사상의 동향, 사상의 원천, 생활양식 등에 복음의 힘으로 영향을 미쳐 그것들을 역전시키고 바로 잡는 것”⁷⁾을 의미한다. 즉 세상을 복음화 한다는 것은 이 세상을 창조주와 구원자의 뜻에 부합하도록 변화시키는 교회의 사명과 활동 전체를 말하는 것이다. 인간은 정신적이고 영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경제적·사회적 존재이다. 그러므로 교회가 세상의 복음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영적인 면뿐만 아니라 경제적·사회적인 차원까지 책임져야 하며, 하느님의 모습대로 창조된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수호해야 한다. 이집트 땅에서 사람대접을 받지 못하고 강제노역을 당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탄식하며 부르짖자, 하느님께서 그들의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 그들을 해방시키신 사건(탈출 2, 23-25)과, 복음을 가르치던 예수께서 배고픈 군중들을 배불리 먹이신 사건(요한 6, 1-14; 마태 14, 13-21)은 열악한 처지의 노동자들과 가난한 자들에 대해 교회가 그들의 인간다운 삶과 구원을 위해 책임져야 할 당위성을 말해준다.

그런데 교회는 이 세상을 효과적으로 복음화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노동과 경제 사회부문을 복음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교회가 정치, 예술, 과학 등에 앞서, 부자건 가난한 자건 모든 사람이 관계되는 재화와 용역의 생산, 분배, 교환이 이루어지는 경제체제를 복음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때, 세상을 보다 더 빨리 복음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의식주의 물질 수단을 획득하고 소비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그것이 인간 삶의 첫 번째 조건이기 때문에 그 어느 분야에 앞서 경제부문을 복음화해야 한다.

사회경제적 문제는 국가의 통치자·고용주·노동자 등 이러한 문제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이들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특히 교회가 경제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보일 때, 그 노력들은 보다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교회가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하여 복음정신에 맞는 도움과 지침을 줄 때, 세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왜냐하면 교회의 가르침과 지침은 그 시

7) 교황 바오로 6세, 현대의 복음 선교(Evangelii Nuntiandi), CCK, 1994, 19항.

대의 징표를 읽고 신중하게 발표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가톨릭 사회교리는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지만, 특히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문제와 사회구조적인 악을 해결하기 위해 경제적·사회적 측면에서 복음적 가르침과 지침을 선포하고 독려한다. 한마디로 노동자들과 가난한 자들의 인간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경제 사회의 복음화를 그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교회는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거나 갈등을 해소시키는 데에 적절한 가르침을 복음으로부터 얻어내야 하고, 수많은 유익한 제도들을 활용하고 모든 사회 계층의 여론과 역량들을 수렴하여 인간 삶의 상태를 개선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기여해야 한다.⁸⁾ 물론 교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현실적인 세상의 일에 관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나 교회는 하느님께서 주신 권위를 가지고 도덕적 행위와 양심에 관련된 세상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관여해야 한다. 그래서 사회 경제적 문제에 있어서도, 교회는 그것이 근본적 인간 활동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윤리 도덕과 양심의 차원에 대해서는 합당하고 올바른 권위를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확산으로부터 연유하는 현대사회의 문제점인 소득계층의 양극화·인권의 유린·인간의 존엄성 파괴현상을 경제적 신자유주의의 이론과 실천을 토대로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로 신자유주의의 세계화의 결과로서 온 빈곤층의 증대와 불평등 구조의 심화에 대한 교회의 판단과 대안적 가르침은 어떤 것인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셋째로 가톨릭 사회교리의 관점에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실천적 대안으로서 복음정신에 따라 모든 인간의 존엄성에 바탕을 둔 ‘공유경제’ 이론과 실천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로써 이 논문의 최종 목적은 경제활동의 각 주체들이 보편적이고 복음적인 사회정의에 따라 나눔의 정신을 실천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모든 인류가 바라는 ‘보다 더 나은 세상’을 건설할 수 있는 주체들임을 깨닫게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8) 참조: 교황 레오 13세, 새로운 사태(Rerum Novarum), CCK, 1994, 12항.

3. 연구범위

본 논문에서는 현대의 심한 빈부격차를 유발하게 된 경제적 신자유주의를 가톨릭 사회교리의 관점에서 재조명하고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오늘날 세상에 심한 빈부의 격차를 유발하는 경제적 신자유주의의 역사적 배경과 그 주된 이론들과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토대로 한 실천 결과들을 살펴 볼 것이다.

다음으로 그것들을 가톨릭 사회교리의 조명하에 판단할 것이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나타나 점차적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공유경제’라는 새로운 경제 이론과 체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복음적 사회교리의 정신에 부합하는 경제 질서의 대안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이로써 전 세계의 국가들과 기업들과 노동자들이 하느님과 복음의 정신대로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며, 누구나가 최소한의 인권을 누리고 인류 전체가 함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실천적 방법을 제시하려고 한다.

많은 이들이 경제적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을 요구한다. 이는 경제적 신자유주의가 점점 빈부격차를 벌리고, 불평등한 세상을 만들어 많은 사람들의 존엄성을 파괴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필자는 본 논문에서 경제적 신자유주의가 왜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지, 왜 빈부격차가 심하게 벌어지고 불평등한 세상이 만들어지는지 그 원인을 규명한 후, 가톨릭 사회교리에 바탕을 두면서 인류 사회의 보편적 정의에 따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서 본 논문은 제 1장에서 자유주의의 개념, 역사적 배경과 의미 등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자유주의는 시기적으로 볼 때 크게 고전적 자유주의, 케인즈주의, 신자유주의로 구분되며, 내용적으로는 철학적 자유주의, 정치적 자유주의, 경제적 자유주의, 종교적 자유주의 등으로 대별되는데, 본 논문에서는 구체적 목표에 따라 경제적 신자유주의만을 다루고자 한다.

제 2장에서는 경제적 신자유주의에 의하여 드러나는 현상들을 살펴본 후 이 현상들에 대한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을 살펴보면서, 가톨릭 사회교리를 중심으로 비판을 하게 될 것이다. 제 3장에서는 경제적 신자유주의의 진전으로 나타나는 세계화 현상과 그에 대한 사회교리적 판단을 하게 될 것이다. 제 4장에서는 물신화(物神化) 현상에 대하여 사회교리적으로 판단해 볼 것이다. 제 5장에서는 경제적 자유주의 현상에 대한 실천적 대안으로서 ‘공유경제’를 제시하

게 될 것이다. 교회는 현세질서 안에서 복음의 빛을 받아 참된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세상 사물의 전체 질서를 올바르게 세우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며 임무이기 때문이다.⁹⁾ 그런데 날로 급증하는 인구, 과학과 기술의 발달, 특히 교통수단과 정보기술 산업 등을 포함한 대중매체의 급속한 발달로 그리스도인의 사도직의 무대는 그만큼 확대되었다. 세상질서의 쇄신이라는 중대한 목표를 지향하는 사도직의 분야는 시대의 징표를 읽으면서 새롭게 적응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신앙인은 세상 안에서 어떻게 올바로 자리매김 하며 그 정체성을 확인하며 살아야 하느냐를 질문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현대인의 삶에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경제문제를 가톨릭 사회교리에 근거하여 인류 전체의 복지와 구원을 갈망하는 모든 사람들이 지향하고 실천해야 하는 ‘공유경제’의 이론과 그 실천 현황들을 살펴 볼 것이다. 바로 경제적 신자유주의에 대한 실천적 대안으로서 ‘공유경제’의 전망과 미래의 과제를 전망하여 볼 것이다.

9) 참조: H.v. Straelen외, 제2차 바티칸공의회 해설총서 4, 성바오로출판사, 1987, 152.

4. 연구방법

교회는 앞서 언급한 현대사회의 여러 가지 제 현상에 대해서 시대적 징표를 읽고 어떤 구체적인 원리를 제시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면서 그 연구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의 연구와 전개 방법은 현대 가톨릭 사회교리 연구방법, 곧 성찰, 판단, 실천의 단계이다. 이 방법은 회칙 「어머니요 스승」에서 구체화되었고, 「사목헌장」 및 그 후속 문헌들에서 결정적으로 도입하고 있다.¹⁰⁾

4.1. 성찰 단계

성찰 단계는 사회현상을 복음의 빛으로 비추어 보고 현실문제와 그 원인들을 분석하고 파악하는 과정이다. 이 단계에서는 세상의 현상을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고 일체의 선입관과 편견 없이 있는 현상과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몇몇 공산주의 국가를 제외하고 대부분 현대 국가들의 경제체제의 근간이 되고 있는 경제적 신자유주의의 이론과 실천, 그리고 드러난 문제점과 현상들을 성찰할 것이다.

4.2. 판단 단계

판단 단계는 위에서 성찰한 사회현상을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에 비추어 해석하고 윤리도덕적 판단을 내리는 과정이다. 이 세상의 모든 현상들은 완전하신 하느님의 창조질서에 따라 식별하고 반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판단의 단계에서는 오늘날의 경제사회의 현상들을 세상을 창조한 말씀이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비추어 판단할 것이다. 그것은 사회현상의 실체를 복음의 빛과 교회의 가르침에 비추어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한 후, 그릇된 것에 대해서는 정의롭게 비판하고, 옳은 것에 대해서는 기쁨과 희망으로 권장하여 사회경제 체제가 올바른 질서 안에 자리 잡게 하려는 것이다. 구체적인 판단의 원천은 사회현상에 대한 성경과 교부들의 가르침, 그리고 교도권 특히 현대 교회의 문헌들이다. 본 논문에서는 경제적 신자유주의의 이론과 제 현상들을 분석하고 판단할 것이다.

10) 가톨릭교육성, 사제양성, CCK, 1993, 414.

4.3. 실천 단계

실천 단계는 사람들로 하여금 사회현상에 대하여 성찰하고, 판단한 것을 구체적으로 행동에 옮기도록 돕고 그 실천방법을 제시하는 단계이다. 교회는 사람들이 삶의 현장에서 하느님의 뜻을 구현하기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어야 한다. 신앙인은 현세질서 안에서 복음의 빛과 교회의 정신에 인도를 받아 구체적으로 행동해야 하기 때문이다. 신앙인은 이 세상의 복음화를 위하여 각자의 능력대로 책임감을 지니고 협력해야 하며, 어디서나 모든 일에 하느님 나라의 정의를 찾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제 5장을 통하여, 앞 장들에서 성찰하고 판단한 것을 토대로 하여, 경제적 신자유주의에 의해 야기된 경제현상에 대한 새로운 실천 대안으로서 가톨릭 사회교리의 정신에 따라 인류 공통의 보편적 정의에 의한 ‘공유경제’에 대하여 살펴 볼 것이다. 이것으로 인간 삶에 가장 근본적인 사회경제 분야에서의 새로운 복음화의 길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II. 본 문

제1장 경제적 자유주의에 대한 이론적 근거

오늘날 많은 이들이 경제적 신자유주의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무시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 이유는 신자유주의의 자유경쟁 아래 경쟁력이 있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무한경쟁의 논리 때문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시장경제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자유화, 세계화, 물신화로 이어져 결국 인간의 삶을 비참하게 만든다.

이 장에서는 경제적 신자유주의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에 관하여 살펴볼 것이다. 우선 경제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과 신학적 개념을, 그리고 경제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과 현대 교황문헌에 나타난 가르침은 무엇인지를 살펴 본 후 자유주의의 역사적 배경과 이론, 그리고 경제적 신자유주의에 대한 개념과 교회의 가르침을 논할 것이다. 그 다음 경제에 대한 신학적인 접근을 시도해 보고, 가톨릭교회가 경제적 신자유주의에 의하여 발생하는 사회현상에 대하여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에 대하여 논하여 보겠다.

1. 경제에 대한 신학적 이해

경제학에서 경제란 “인간의 공동생활의 기초를 이루는 물질적 재화의 생산, 분배, 소비의 행위, 과정 및 그것을 통하여 형성되는 사람과 사람의 사회관계”¹¹⁾를 총칭한다. 사람들이 생명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식물, 의류, 주거, 연료 등의 물질적 생활수단을 생산하고 그것을 이용하는 주체적 행위를 경제 행위라고 하고, 이러한 경제행위가 일정한 조직과 규칙 아래 일정한 생산 양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총칭하여 경제라고 한다.¹²⁾

가톨릭교회는 경제에 대하여 두 가지 측면에서, 즉 하느님의 구원 계획으로서의 경제라는 측면과 인간을 위한 경제라는 측면에서 접근한다. 여기서는 경제에 대하여 가톨릭교회가 가르치는 바는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1) 신기철, 신용철(편), 새우리말 큰 사전, 서울(삼성출판사), 1983, 203.

12) 참조: 김옥근, 경제원론, 영운출판사, 1977, 11-12.

1.1. 하느님의 구원계획으로서의 경제

교회는 “인간의 경제활동이 고유의 방법과 고유의 법칙을 따르면서 윤리질서 내에서 인간에게 대한 하느님의 계획이 성취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¹³⁾고 명시하면서 경제의 본래 목적은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계획 성취라는 점을 강조한다. 원래 경제라는 말은 희랍어의 οἰκονομία(집안관리, 계획, 경륜)¹⁴⁾에서 나온 말이다. οἰκονομία란 οἶκος(집, 거처, 가족, 백성, 재산)와 νομος(법, 율법, 규칙, 법규, 원리)의 합성어로서, 어원적으로 ‘거처하는 곳의 가족이나 백성에게 무엇인가를 나누어주는 원리 또는 규칙, 그리고 재산의 법’을 의미한다. 그리스도교 차원에서 οἶκος는 포괄적인 의미로 하느님 백성 전체, 또는 인간의 삶이 이루어지는 창조세계 전체를 뜻하며, νομος는 하느님의 구원법칙, 구원경륜, 즉 하느님의 구원사업을 의미한다. 따라서 οἰκονομία는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향하여, 바로 그 세계 안에서 “하느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 즉 하느님의 구원사업 전체를 의미하며,”¹⁵⁾ “하느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시고, 당신의 생명을 주시는 모든 업적”¹⁶⁾을 일컫는다.

신앙의 과제로서의 경제는 창조와 종말 사이에서 전개되는 하느님의 계획과 그것에 참여하는 인간의 실천을 전제할 때 비로소 뚜렷이 확인된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느님께서 인간을 부르시고, 모든 피조물을 잘 다스려 그분의 주권과 영광을 드러낼 책임을 그에게 주셨다. 인간은 노동을 통하여 하느님의 계속적인 창조활동에 참여하는 협조자로 부름을 받았다. 그것은 노동을 통하여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일이다. 경제는 바로 이 창조와 종말 사이에서 인간이 하느님의 계속적인 창조활동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하느님이 인간을 불러 그분 자신과 함께 세상을 경영하는 방식, 바로 그것이 신학적 경제 개념이다.¹⁷⁾

1.2. 인간을 위한 경제

교회는 고유의 인간관 안에서 경제를 이해한다. “인간이 경제·사회 전체의

13) 사목헌장, 64항.

14) 이순환, 신약성서헬라어낱말분해사전, 한국기독교교육논문원, 1987, 197.

15) 참조: 이주연, 신앙과제로서의 경제1, 기독교사상 401, 대한기독교서회, 1992, 166.

16) 가톨릭교회 교리서,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5, 93.

17) 참조: 한국교회사연구소, 한국가톨릭대사전, 1994. 「경제윤리」

건설자요 중심이며 목적”¹⁸⁾이기 때문에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관을 주장한다. 그 바탕위에서 경제체제의 정당성과 적합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에 대한 존중을 제시한다.¹⁹⁾

또한 경제가 인간에게 봉사하게 될 때 경제활동에 임하게 되는 사람들끼리 서로간의 권리를 인정하게 되고, 서로간의 사랑을 주고받으며, 인간 노동의 품위를 지킬 수 있게 된다.²⁰⁾ 따라서 경제활동은 기본적으로 단순한 생산품의 증가나 이윤이나 경제적 지배권의 확보가 아니라 인간에 대한 봉사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

경제의 목적은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인간에게 향해야 한다. “인간은 경제-사회생활 전체의 건설자요 중심이며, 목적이기 때문에”²¹⁾ 모든 현세적 사물은 인간을 중심으로, 인간을 지향해야 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경제의 지배를 받고 있으며, 그들의 개인생활과 사회생활 전부가 경제만능주의에 물들어 있다.²²⁾ 또한 인간이 경제를 지배해야지 경제가 인간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 교회는 경제사회 생활에 있어서 많은 혁신과 모든 사람들의 태도의 전환을 요구한다.²³⁾ 교회는 경제활동이 고유의 법칙을 따르면서 윤리질서 내에서 인간에게 대한 하느님의 계획이 성취되도록 이루어져야 하며, 경제활동은 계속 증대하는 물자의 공급이 아니라 전인적인 인간의 가치에 봉사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친다.²⁴⁾

18) 사목현장, 63항.

19) 현대 경제원리가 야기 시킨 사회문제는 재검토되어야 한다. 즉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노동조건은 어떠해야 하며, 재화의 재분배가 균형 있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경제가 인간을 위한 것이 될 때 형제적 사랑이 꽃피게 되고, 사람들 사이의 구체적인 교류가 촉진될 것이기 때문이다. (참조: 교황 바오로 6세, 팔십주년(Octogesima Adveniens),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4, 7항.)

20) 참조: 팔십주년, 46항.

21) 사목현장, 63항.

22) 사목현장, 63항.

23) 생산의 기본목적은 단순한 생산품의 증가나 수익이나 지배 권력이 아니라 오직 그것은 인간에게 봉사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가르친다. 여기서 말하는 인간은 인간의 물질적 요구와 지적, 도덕적, 정신적, 종교적 생활의 요청을 포함한 인간 전체를 말하는 것이며 인종과 지역의 차별 없이 각 사람과 사람들로 구성된 모든 집단을 뜻한다. (참조: 사목현장, 64항.)

24) 참조: 요셉 회프너, 그리스도교 사회론, 박영도, 분도출판사, 1979, 164.

2. 경제적 자유주의에 대한 이해

경제적 신자유주의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자유주의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자유주의에 대한 개념은 근대 서양사회의 주류사상이기 때문에 하나의 정립된 이론으로 자유주의를 파악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자유주의란 “모든 개인이 절대적으로 소중하며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근대 시민사상으로, 억압적이고 차별적이었던 절대군주제와 전통적 계급사회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라는 근대시민사회를 건설한 근대시민들의 사상이다.”²⁵⁾ 이 사상은 르네상스, 종교개혁, 자본주의의 성장, 과학혁명 등을 통해 기존의 봉건적 질서를 해체하고, 근대적 질서를 이루어 가는 과정에서 생성되고 체계화되었다.

르네상스의 정신은 인간의 관심을 신과 천상세계로부터 현세의 삶으로 돌리게 했으며, 종교개혁은 종교적 개인주의를 낳았을 뿐만 아니라, 과학혁명을 통해 획득된 자연과학적 법칙은 인간의 정치경제적 삶에 큰 영향을 미쳤다. 화폐 경제의 일반화에 따르는 자본주의적 경제생활은 봉건 사회의 공동체 의식을 해체시키면서 개인주의적 관념과 사유재산의 관념을 낳아 자유주의의 물질적 요소를 제공하게 되었다.²⁶⁾

이장에서는 경제적 신자유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 역사적 배경과 원리를 파악할 것이다.

2.1. 자유주의의 원리와 질서

절대주의적인 권위에 대항해서 시민 층에서 형성된 자유주의는 개인의 사유(思惟)와 활동에 대하여 최대한의 자유를 주고, 간섭을 없애려는 사상이며 주장이다. 이러한 자유주의 사상이 사회적, 정치적으로는 개인의 자유권을 옹호하고 신장하며, 자본주의적인 사적 소유와 이윤추구를 보증하는 입헌정치 사상으로 표현되었다.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적인 시장경제와 자본무역을 주장하면서 자유방임주의의 이론으로 나타났으며, 문화 및 정신생활에 있어서는 종교 및 도덕으로부터의 사회생활의 완전한 독립을 요망하며,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요구하고 무조건적인 자유와 개신교도적인 예배의 자유를 주장하였

25) 이근식, 황경식, 자유주의란 무엇인가,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01, 13.

26) 참조: 노명식, 자유주의의 원리와 역사-그 비판적 논문, 서울, 민음사, 1991, 89.

다.²⁷⁾ 여기서는 신자유주의에 대하여 논하기 전에 우선 자유주의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그 역사적 배경과 원리, 그리고 자유주의가 주장하는 사회질서에 관한 내용을 통해 할 것이다.

2.1.1. 역사적 배경

서유럽은 역사적으로 중세의 봉건체제가 몰락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근대시민사회를 성립하기까지 절대 군주체제였다. 절대군주들은 각 지방의 영주들을 정복하여 지역적 통일을 이루어 근대국가를 건설하였으며, 외국과 영토전쟁을 하였다. 이러한 내부적인 통일과 외부적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군주의 권한은 절대적으로 비대해졌으며, 그 결과로 군주를 정점으로 귀족과 평민을 차별하는 상하의 신분질서가 생겨나게 되었으며, 상공인과 농민들로 구성된 평민들은 과중한 조세와 병역부담, 관헌들에 횡포에 의한 심한 고통을 겪게 되었다. 이런 가운데 도시를 중심으로 상공업이 발달하였고, 근대적 경제체제인 자본주의 경제가 점차 발전하게 되었으며, 자본주의의 주도계층인 부르주아계급이라고 부르는 중소 상공인들이 사회의 새로운 주도계층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고 주장하였고, 신분에 의한 차별을 반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권력의 횡포를 금지하기 위하여 헌법과 법으로 국가 권력을 명확히 제한하는 입헌주의와 법치주의를 주장하였다. 또한 그들은 자신들이 직접 국정에 참여하기 위해 민주주의를 주장하였으며, 자신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위해 경제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철폐하는 자유 시장경제를 주장하였다.

이들의 생업은 개인적으로 자기 책임 하에 독립적으로 영위하는 상공업이었기 때문에 개인의 권리와 책임을 강조하는 개인주의를 주장하였으며, 개인의 생명과 사유재산보장 등을 부르짖으며 자신들이 주장하는 모든 사회적 권리를 ‘자유’라는 말로 대변하였다.²⁸⁾ 또한 그들은 신분적으로는 평민계층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 정치적으로 권력자로부터 수탈을 당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러한 차별적인 신분질서에 기초한 절대군주제에 저항하고 투쟁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은 서양 근대사회발전의 주역인 시민계급을 탄생시킨 주역이라고 할

27) 참조: 자유주의, 한국가톨릭대사전, 한국가톨릭대사전편찬위원회, 1985, 992.

28) 참조: 이근식, 황경식, 자유주의란 무엇인가,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01, 17.

수 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토대로 중·소상공인들로 구성된 부르주아 계층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서양 근대사에서 군주제를 무너뜨리고 평등하고 자유로운 시민사회를 만들고자 하였으며, 그들이 군주제와 싸우는 과정에서 근대시민계급의 사상인 자유주의 사상이 대두되었다. 결국 자유주의란 서구의 근대시민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2.1.2. 원리

자유주의의 첫 번째 기본적인 원리는 개인자유와 보장이다. 인간 중심적이고, 개인의 자유와 권익을 추구하는 개인주의야말로 자유주의가 발전하는 토대이다.

개인주의는 개인만이 궁극적 가치를 가지고 있고, 국가, 조직, 이념 등은 모두 자체로서의 가치는 없으며 오직 개인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수단으로서만 가치를 갖는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자유주의는 국가나 조직이나 이념 등을 위해 개인을 수단화하여 희생시키는 것을 반대한다.

또한 국가는 개인에 우선하는 가치를 갖고 있으므로 국가를 위해 개인은 마땅히 희생해야 한다고 보는 전체주의와 집단을 통해서만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하다고 보는 집단주의에 대해서도 자유주의는 반대한다.

자유주의에서 말하는 자유는 사회적 자유이다.²⁹⁾ 사회적 자유란 무지나 탐욕, 미신으로부터의 자유처럼 타인이나 사회와 영향을 주고받지 않고, 전적으로 개인이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와 관련된 자유가 아니라, 출판, 취업, 결사, 정치 참여, 종교 선택과 같이 개인의 사회활동과 관련된 자유를 말한다. 그런데 자유는 협의의 자유와 광의의 자유로 나눌 수 있다.

협의의 자유란 강압이 없는 자유로운 상태로, 보통 말하는 종교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와 같은 선택의 자유를 말한다. 광의의 자유란 협의의 자유만이 아니라 개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보장을 모두 포함한 인간의 기본권 자체를 말한다. 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사회적 자유는 협의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권과 재산권, 저항권, 기본인권을 모두 포함한다.

자유주의의 두 번째 기본원리는 ‘평등’이다.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과 인격적인 면에서 모든 사람이 절대적으로 평등하기 때문이다. 모든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하며, 이러한 자유주의의 평등은 기회균등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직업, 교

29) 참조: 이근식, 황경식, 자유주의란 무엇인가, 19.

육, 공직출마 등 모든 사회활동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자유주의에서 말하는 기회균등에 있어서의 평등은 적지 않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직업선택과 같은 대부분의 사회생활에서의 선택기회는 실질적으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학력 등과 같은 개인 환경으로부터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특히 경제적인 분배문제는 자유주의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다. 사실상 “부르주아의 사상이었던 고전적 자유주의는 빈곤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당연시하였다.”³⁰⁾

자유주의의 세 번째 기본원리는 개인의 ‘독립성’이다. 자유주의의 기초인 개인주의는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획득한 결과물과 성과는 자신이 향유하고,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손해도 홀로 책임진다는 사고방식이기 때문이다. 개인은 국가로부터 간섭이나 지원을 받지 않고 스스로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개인주의의 원칙이자 자유주의의 입장이다.³¹⁾

개인의 독립성 주장은 자본주의 경제에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책임 하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상공인들의 생활관을 반영한 것이다. 봉건 경제하에서는 사람들이 공동 경작지에서 함께 농사를 지어 살아야 했으므로 공동체 중심의 생활이었으나, 자본주의 경제 하에서 상공인은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 하에 기업을 운영하여 이익과 손해를 모두 자신이 부담하게 된다. 개인주의는 상공인의 이런 독립적 생활양식을 반영하고 있다.

2.1.3. 사회질서

자유주의자들은 법치주의, 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확신한다. 법치주의는 법의 내용이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며, 법은 모든 이에게 동등하고 엄격하게 적용되는 조건을 충족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며, 민주주의는 실질적인 다당제(多黨制) 하에서 국민들이 국정 담당자들을 직접선거를 통해 선택할 수 있는 정치제도이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자유주의가 주장하는 사회질서인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그리고 시장경제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로 자유주의가 주장하는 사회질서는 법치주의이다. 법치주의는 법의 내

30) 이근식, 황경식, 자유주의란 무엇인가, 21.

31) 참조: 같은 책, 22.

용이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며, 법이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고 엄격하게 적용되는 제도이다.³²⁾ 이러한 법치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국가 권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등장하였다. 아담 스미스(A. Smith, 1723-1790)도 개인의 재산을 국왕과 그 부하로부터 보호하는 법치주의가 경제발전의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하였다.³³⁾ 국가 권력의 횡포를 예방하기 위해서 법으로 국가권력을 엄격하게 제한해야 했기 때문이다. 자유주의의 중요한 목적은 국가권력의 횡포를 막는 것이었다. 또한 국가권력뿐만 아니라 개인 간의 공정한 관계를 위해서라도 법치주의가 필요하다. 아무런 규칙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유가 아니기 때문이다. 타인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개인의 자유를 허용하는 것이 자유주의의 기본입장이다.³⁴⁾

둘째로 자유주의가 내세우는 사회질서는 민주주의이다. 민주주의는 근대 서구에서 자유주의를 실현하는 정치체도로 등장하였다. 민주주의가 자유주의를 전적으로 보장해주지는 않으나,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데 일반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정치체제이다.³⁵⁾ 자유주의자들은 입헌주의를 통해 법으로 절대군주의 횡포를 막고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려고 하였으나, 입헌주의의 한계를 깨닫고 국가권력의 담당자를 국민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는 민주주의 제도로 성장시켜 정착시키고자 하였다.

셋째로 자유주의가 지지하는 경제체제는 시장경제와 사유재산제도가 결합된 자본주의 경제이다. 시장경제는 개인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해 주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자유주의와 가장 부합하는 경제체제이다. 자유주의가 주장하는 시장경제는 정부에 의한 경제개입이 최소화되며, 독과점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두 조건을 충족시킨다. 자유주의자들은 사유재산제도를 주장한다. 사유재산은 자기 책임과 자기 귀속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필수적인 제도이기 때문이다. 이른바 근대 시민사회의 세 가지 질서인 민주주의, 법치주의 및 경쟁적 시장경제는 서로 상호보완적이 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법치주의가 민주주의와 경쟁적 시장경제에 필수조건이기 때문이며, 민주주의와 경쟁적 시장에 필요한 규칙들이 법으로 분명하게 제정되어 엄격하고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민주주의와 경쟁적 시장경제가 작동하기 때문이다. 경쟁적 시장경제가 이루어지기 위

32) 참조: 이근식, 황경식, 자유주의란 무엇인가, 25.

33) 참조: A.Smith, An Inquiry into Nature and Causes of Wealth of Nation, 국부론, 김수행역, 동아출판사, 1992, 108.

34) 참조: 이근식, 황경식, 자유주의란 무엇인가, 27.

35) 참조: 같은 책, 28.

해서는 민주주의가 필요하며, 경쟁적이고도 자유로운 시장경제가 발달하기 위해서는 정치권력이 자의적으로 경제에 개입하는 일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를 담당하고 민주주의가 전체주의로 흘러가는 것을 견제할 시민계층이 있어야 하는데, 이 시민 계층은 경쟁적 시장경제에서만 가장 잘 존립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와 경쟁적 시장경제는 상호보완적이다.³⁶⁾

이러한 자유주의 사상은 개인의 자유권을 옹호하고 신장하며, 자본주의적인 사적소유와 이윤추구를 보증하는 입헌 정치사상으로 표현되었고,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적인 시장경제와 자유무역을 주장하면서 자유방임주의의 이론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자유주의가 처음으로 등장할 당시에는 서구의 시민사회 형성기에 군주제에 대항하여 시민사회를 건설한 근대시민계급의 사상으로서 개인 자유보장의 원리, 평등의 원리, 개인 독립성의 원리를 주장하면서 법치주의, 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였다.

결국 자유주의는 국가가 너무 많은 힘이나 역할을 갖게 된다면 개인의 자유가 극대화되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의 역할을 제한해야 하며, 개인의 활동에 대해서 최대한의 자유를 주고, 국가의 개입과 간섭을 없애려는 주장임을 알 수 있다.

36) 참조: 이근식, 황경식, 자유주의란 무엇인가, 31.

3. 경제적 자유주의의 근원

역사적으로 자본주의 경제 질서에 대해서 많은 사상들이 나타났다. 자본주의의 경제가 빈부격차, 불황과 실업, 독점화, 환경파괴의 방치 등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점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경제학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시장의 실패라고 한다.³⁷⁾ 오랜 세월을 두고 여러 입장에서 나타난 경제적 자유주의는 모두 시장경제를 기본적으로 지지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역사적으로 시장경제의 실패가 나타날 때마다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시대적 상황에 따라 상이한 견해를 제시하였다.

여기에서는 경제적 자유주의가 어떻게 역사적으로 변천해 왔으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3.1. 고전자유주의(Classical liberalism)

근대 시민정신이었던 고전자유주의는 18-19세기에 구미에서 민주주의, 법치주의, 자유시장경제와 같은 근대적 사회질서를 건설하는데 이념적 기초를 제공하였다.

처음 발생할 당시 고전자유주의는 매우 혁명적이었고 급진적인 사상으로 받아들여졌다. 그것이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신성한 대리통치의 권리인 세습군주제를 거부하고 귀족들보다는 당시로서는 중류층이라고 할 수 있는 부르주아의 권리를 옹호한 때문이었다. 이러한 자유주의가 처음으로 드러난 것은 1688년의 영국의 명예혁명이다. 이어서 일어난 1776년의 미국혁명과 1789년의 프랑스혁명은 자유주의의 이념을 확산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고전적 자유주의 사상에서 국가는 단지 기본질서를 유지하고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방어하는 역할만을 담당하고 개인들이 자유롭게 자신들의 능력에 의해 정치, 사회, 경제활동을 하는 것을 이상으로 생각한다. 고전적 자유주의의 특징은 개인의 권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여 개인의 삶의 영역으로부터 국가의 간섭을 철저히 배제시키고 있다. 국가의 역할이 작으면 작을수록 개인에게 간섭할 여지가 줄어들게 된다. 결국 고전적 자유주의는 개인의 권리를 옹호하려는 극단적인 형태의 자유주의이다.

고전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선택을 중요시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

37) 참조: 이근식, 황경식, 자유주의란 무엇인가,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01, 32.

가의 간섭을 최소화시키려고 하였다. 그러나 고전적 자유주의는 독점의 출현과 공정경쟁의 억압, 식민지 구축, 제국주의 등장으로 서서히 종말로 치닫게 되었다.³⁸⁾ 왜냐하면 고전 자유주의는 100-200년 전의 서양사회라는 시대적 한계와 부르주아지의 계급적 한계를 갖고 있었는데, 그것은 시장경제에 대하여 지나친 신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며, 노동자와 빈민들의 빈곤에 대하여 무관심하였기 때문이다.

3.2. 신고전자유주의(New Liberalism)

19세기말에 이르러 고전자유주의와 본질적인 면에서는 공통되면서도 비본질적인 면에서는 많은 차이가 나는 사상노선이 등장하였는데, 이 사상노선을 신고전자유주의 라고 한다. 신고전자유주의의 등장은 19세기 중반까지 세계 최고의 번영을 누리던 영국경제가 1875년부터 장기적인 불황을 겪게 되고, 그에 따라 영국사회에 빈곤과 실업의 증가를 비롯한 많은 경제·사회적 문제들이 발생한 것과 관련된다. 1870년대부터 시작된 영국의 불황은 약 반세기 동안이나 지속되었으며, 그로 인해 기업 도산, 실업자 증가, 빈곤층 확대 등 심각한 경제·사회적 문제들이 발생했다. 이처럼 곤란한 경제·사회적 환경에 처하게 된 영국의 자유주의자들은 자유 경쟁적 시장이 좋은 결과만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고 깨닫게 되었다. 그로 인해 사회적 약자들의 실질적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소극적인 역할을 넘어서 민간 영역까지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게 되었다.³⁹⁾

고전자유주의가 믿었던 자유방임주의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신뢰에 바탕을 두었다. 사유재산 제도와 결합된 시장경제에 있어서는 각자 자기 일만 열심히 하면 사회도 개인도 모두 저절로 부유하게 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빈부의 격차가 생겨났으며 불황과 독점화와 같은 자본주의의 구조적 문제점이 나타나면서 자유방임주의는 비판받게 되었다. 고전자유주의는 점차 힘을 잃어가게 되었고,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에 영국에서는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자유주의를 모색하게 되었다. 이렇게 고전자유주의를 비판하면서 등장한 대표적인 새로운 사상은 마르크스의 사회주의와 첫 번째 신자유주의(New Liberalism)라고 불리는 신고전

38) 참조: 강수돌, 노동의 희망, 서울, 이후출판사, 2001, 49.

39) 참조: 양동안,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 한국자유총연맹, 자유공론, 1999, 100.

자유주의이다. 1870년 이후, 독일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국가를 부강하게 하려는 정책으로 관세장벽을 도입했고, 동시에 군사력을 강화하며 국가복지체계를 도입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영국도 독일의 전례를 따라 국가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의 힘을 강화하게 됨으로써, 자유주의는 새로운 계기를 맞게 되었다. 또한 20세기 소련의 볼셰비키 혁명 이후 사회주의와도 맞서야 했고 나치즘이나 파시즘 같은 국가 사회주의와도 싸워야 했다. 이렇게 형성된 신고전자유주의의 핵심은 ‘부자유의 제거’이다. 고전자유주의에서의 자유는 의도적으로 어떤 제약이나 강제가 부여되지 않은 상태였다면, 신고전자유주의에서 자유는 모든 가치 있는 행동에 방해가 되는 모든 부자유와 장애를 제거하는 것이다. 가치 있는 행동을 방해하는 부자유란 개인의 자유를 실현하는 데에 방해가 되는 가난이나 질병, 기근, 기아와 같은 것이다.

신고전자유주의는 국가가 이런 부자유를 제거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요구는 고전자유주의가 지향했던 ‘제한국가’라는 틀을 깨는 계기가 되었다. 국가는 국민 개개인을 질병이나 가난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사회보장이거나 의료보험과 같은 복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복지지향은 국가의 역할과 정부의 크기를 확장시켰다. 그리고 복지체계가 비대해질수록 국가도 비대해져 갔다. 이로 인해 국가는 강력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다.

자본주의 자체를 부정한 마르크스와는 달리 신고전자유주의는 자본주의체제를 기본적으로 인정하면서, 개량주의적 방법으로 소득재분배정책을 실시하여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면서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들은 토지와 상속과 고소득에 대하여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저렴한 공교육을 제공하여 기회의 균등을 마련하고, 강력한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하며 노동조합을 보호하여 노동자의 빈곤을 해결하자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입장은 시장과 정부를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고전자유주의와 대조적이다. 고전자유주의가 정부를 불신하고 시장을 신뢰하여 경제에 대한 정부 간섭을 반대하는 자유방임주의를 주장했지만, 신고전자유주의는 시장을 불신하고 정부를 신뢰하여 정부의 경제개입을 주장하였다.⁴⁰⁾

신고전자유주의는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영국 자유당의 이념으로 채택되었다. 자유당은 노동당이 등장하기 이전에는 보수당과 대립하는 진보적 정당이었으나, 노동당이 등장한 이후 1920년대에 들어서는 자본가 정당도, 노동자

40) 참조: 이근식, 황경식, 자유주의란 무엇인가, 37-41.

정당도 아닌 애매한 성격으로 인해 급속하게 쇠퇴하게 되었고 개혁 정당의 주역을 노동당에게 넘겨주었다. 이로 인해 신고전자유주의자들은 대부분 노동당으로 옮겨감으로써 신고전자유주의는 20세기에 들어와 역사의 무대 뒤로 물러나게 되었다. 그러나 신고전자유주의의 이념과 정책은 그 후에 영국 노동당과 서구의 사회민주주의 정당들, 그리고 미국의 수정자본주의에 의해 오늘날까지 그대로 계승되었으며, 현대의 복지국가 이념으로 살아있다.⁴¹⁾

한편 독일에서는 19세기 말 비스마르크의 ‘철혈정책’과 20세기 히틀러의 나치즘에 의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일반국민들을 국가권력에 예속시키려는 제국주의와 민족주의가 출현하여 경제체제에 있어서 고전자유주의는 힘을 잃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에서 히틀러의 나치즘과 제국주의의 패망으로 새로운 변화를 맞게 된다.

3.3. 질서자유주의(Order Liberalism)

19세기에 구미 각국은 자유주의 경제정책으로 경제발전을 이루었으나, 세계 최초의 대공황이 발생하자 자유주의 경제정책은 점차 후퇴하게 되었다. 그러나 서독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자유주의 경제정책을 다시 부활시켜 ‘라인강의 기적’이라는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룩하였고, 패전국에서 벗어나 구미에서 가장 튼튼한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으며, 1948년 화폐개혁을 시작한 이후 1990년 동독과의 통일을 달성할 때까지 성장률, 물가, 실업률, 국제 수지 등 모든 면에서 선진국 중 가장 훌륭한 성과를 나타냈다.

독일 사람들은 이러한 뛰어난 경제성장이 그들만의 독특한 경제체제 내지 경제정책인 사회적 시장경제 덕분이라고 자부한다.⁴²⁾ 이러한 사회적 시장경제의 중심이론은 프라이부르크학파의 질서자유주의에서 발전되었고, 이 이론은 오이켄(Walter Eucken, 1891-1950)이 완성하였다. 그는 자신의 자유주의를 신고전자유주의로 불렀으니, 이는 독일식 신고전자유주의인 셈이다.⁴³⁾ 여기서 질서자유주의에 대한 역사적 배경과 오이켄의 이론을 살펴보고 평가하고자 한다.

오이켄은 완전 경쟁시장에 필요한 조건들을 경쟁질서라 하고, 이 경쟁질서

41) 참조: 이근식, 황경식, 자유주의란 무엇인가, 40.

42) 참조: 이근식, 자유주의 사회경제사상, 한길사, 1999, 353-355.

43) 참조: 이근식, 황경식, 자유주의란 무엇인가, 42.

를 국가가 책임지고 만드는 것을 경제에 관한 헌법의 기본원칙이라고 하였으며, 경제질서와 경제과정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정부는 경제과정에 개입하지 말고 경제질서를 올바르게 만드는 것에 전념하라고 하였다.

여기서 경제과정이란 인간의 모든 경제활동을 의미하며, 경제질서란 인간의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경제과정을 규정하는 모든 법, 관습, 도덕, 국민의 의식 수준 전체를 의미한다.⁴⁴⁾ 인간의 욕망에 비하여 자원과 재화는 항상 부족하다. 오이켄은 이러한 자원의 희소성이 경제문제를 발생시키는 근본문제라고 하였으며, 이 희소성의 문제 때문에 경제과정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보았다.

오이켄은 자유방임주의 정책을 비판하였다. 그가 파악한 자유방임주의는 고전적 자유주의였다. 고전적 자유방임주의는 19세기 구미의 공업화에 결정적으로 공헌하였으나, 자본의 집중과 집적에 의해 시장에서 저절로 형성되는 독점으로 말미암아 심각한 문제들을 등장시켰다. 독점은 독점이윤을 발생시켜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의 일치라는 효율성의 조건을 파괴하고, 그 결과 비효율적인 투자를 낳게 한다. 또한 독점 하에서 고용계약을 할 때 기업들은 유리한 고지에서 협상하고 노동자들은 불평등 계약에 응하게 된다.

노동자들이 부당하게 낮은 임금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노동자들을 빈곤하게 만든다. 그리고 독점자본에 의하여 자유가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오이켄은 사유재산제도가 악이 아니라 시장독점이 악이라고 주장하면서, 공권력의 횡포를 규제하는 법치주의뿐만 아니라 사적인 권력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한 경쟁질서가 필요하다고 하였다.⁴⁵⁾

오이켄은 올바른 경쟁질서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독점을 규제하기 위한 독점 감독청을 설립해야 하며, 소득 재분배가 필요하나 투자의욕을 위축시키는 지나친 누진세는 삼가야 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기업은 규제가 필요하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최저 임금제도와 사회보장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⁴⁶⁾ 이러한 경쟁질서는 저절로 형성되는 질서가 아니라 사회가 의도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질서이다. 경쟁질서의 실현 주체는 국가이다. 국가는 경제 질서를 형성하고 관리해야 하는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국가의 정책은 경제적 권력집단을 해체하거나 그 기능을 제한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하며, 국가의 경제정책활동은 경제과정의 조정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을

44) 참조: 이근식, 자유주의 사회경제사상, 한길사, 364.

45) 참조: 같은 책, 376.

46) 참조: 같은 책, 408.

바른 경제 질서형태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⁴⁷⁾

오이켄은 정부가 경제질서를 의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스미스나 밀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시장경제질서를 형성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으나, 오이켄은 시장경제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일정한 질서를 정부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일정한 내용들로 구성되는 경제질서가 필요한데, 이러한 경제질서는 시장경제에서 저절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의도적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완전경쟁의 가격기구가 원활히 작동하는데 필요한 제도들이 정부에 의하여 만들어진 경제 질서를 오이켄은 경쟁질서라고 하였으며, 경쟁 질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물가안정과 독점규제라고 하였다.

오이켄은 현대 자유주의경제에서 정부의 역할을 분명히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는 정부가 경쟁질서의 확립에만 전념하고 경제과정에는 개입하지 말라고 하였다. 이는 자유주의 경제에서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오이켄의 질서자유주의의 주요 내용은 수입규제를 포함해 가격과 거래에 관한 모든 규제를 철폐하여 완전히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것이고, 철저하게 독점을 금지하여 경쟁시장을 만드는 것이며, 엄격한 통제관리정책을 통해 물가안정을 유지하여 가격기구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원리를 중심으로 서독은 전후 경제활동의 자유와 독점금지, 물가안정을 국가의 목표로 헌법에 명기하고 엄격히 시행하여 전후 경제부흥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오이켄의 원리는 국가가 경제질서확립을 책임지지만 경제활동에는 일체 개입하지 않고 개인의 완전한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오이켄의 질서자유주의는 국가가 독점을 금지하고, 물가안정을 유지하여 경쟁질서 확립을 책임지고, 경제활동은 개인의 자유에 일임하라는 일종의 신고전자유주의 경제이론이다. 이러한 오이켄의 원리에 따라 전후 독일은 독점 금지, 물가안정, 규제철폐를 경제정책의 기본으로 확고하게 실시하여 유럽 제일의 경제강국으로 부흥하였다.⁴⁸⁾ 그러나 오이켄의 질서자유주의는 시장가격기구를 너무 신뢰한다는 것이 문제이다. 그의 주장대로 경쟁질서가 완벽하게 실시되어 독점과 물가불안이 없어진다면, 과연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져서

47) 참조: 이근식, 자유주의 사회경제사상, 410.

48) 참조: 이근식, 황경식, 자유주의란 무엇인가, 45.

실업과 불황이 없어질 것인가는 의문이다.

역사적 경험으로 볼 때 그의 주장대로 하더라도 실업과 불황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시장가격기구로는 자원배분의 효율성만 달성시킬 뿐 분배의 공정성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불공정한 분배는 시장가격기구로는 해결할 수 없는 자본주의의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⁴⁹⁾

3.4. 케인즈주의(The Keynesian)

세계의 자본주의 경제는 1930년대 제1차 세계대전을 전환점으로 하여 자유자본주의에서 독점자본주의로 전환되면서 대량의 실업이 만성화되었고, 산업계·금융계 전반에 걸친 대공황을 초래하여 경제사회 전체를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여기서는 케인즈가 주장하는 이론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케인즈(J. M. Keynes, 1883-1946)는 1926년에 발표한 「자유방임의 종언」라는 책을 통하여 자유방임주의에 대하여 근본적인 비판을 가하는 가운데 국가가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들을 규명하였다.⁵⁰⁾ 또한 그는 실업의 원인과 해결책을 모색하면서 당시의 자본주의가 자율적 조절기능을 잃은 것으로 판단하여 대량의 실업을 해결하기 위한 완전고용을 위해서 조세정책·화폐정책·금융정책·재정정책 등을 통한 정부 당국의 인위적 간섭에 의해 유효수요를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자유방임을 지양하고 완전고용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경제활동에 능동적으로 관여해야 한다고 하였다.⁵¹⁾

특히 케인즈는 원리적인 면에서 ‘보이지 않는 손’의 개념을 부인하고 자유방임 자본주의는 끝났다고 봄으로써, 자본주의의 진화적 성격을 강조하였다. 그는 대기업이 스스로 사회화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자본주의의 오랜 제도 가운데 하나인 금본위제도(金本位制度)에 반대하였다. 또한 그는 정부의 재정정책을 중시하였다. 불황기에는 정부가 공공사업에 직접 투자함으로써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 한다. 이밖에도 정부는 사회적 서비스를 확대해야 하며, 소득세에 대하여 높은 누진세를 부과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정부는 재정의 적자 또는 흑자에 대해 개의하지 않아야 하며 화폐제도를 강력하게 실행할 것을 주장하였다.

49) 참조: 이근식, 자유주의 사회경제사상, 한길사, 423.

50) 참조: 이해주, 조준현, 근대 사회 경제 사상사의 이해, 신지서원, 2000, 192.

51) 참조: 박장환, 경제사상사의 이해, 학문사, 2000, 241.

소비성향은 소비자가 결정하는 것이므로 소비자가 수요를 만들어 내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케인즈가 제시한 정책은 결코 사회주의를 지향한 것은 아니다. 즉, 경제활동이 민간 부문의 범위 내에서 행해져야 하고, 정부의 역할은 보완적인 데 그쳐야 하며, 대신에 정부는 완전고용이 달성되도록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그는 경제성장을 위해 완만한 디스플레이션(disinflation, 통화팽창완화)보다는 완만한 인플레이션(inflation, 통화팽창)을 선호하였다.⁵²⁾

그의 주장에 의하면 고전자유주의자들의 오류는 논리의 일관성을 상당히 중시하여 수립된 이론의 상부구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론이 자리 잡고 있는 전제 조건의 불명확성과 특수성에 있다. 종래의 경제 현실에서는 명확하고 일반적이었던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1930년대에 이르러 불명확하고 특수한 사실에 불과하다는 것이 밝혀지게 된다면 그러한 이론은 현실에서 유리(遊離)될 수밖에 없다.

케인즈는 당시의 경제 사회에서 볼 수 있는 명확하고 일반적인 전제를 선택하고 이로부터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이론을 세워나갔다. 이러한 케인즈주의 운영방식은 경제차원에서 국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자본의 평균이윤을 저하는 유효수요 창출을 통해 개선될 수 있다고 본다. 그 원칙은 국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복지정책, 공공 부문에 대한 확대 등을 포함한다.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 노동자 계층에 보다 나은 개선책을 약속함으로써 사민(私民)주의적인 노동운동과의 타협을 모색한다.⁵³⁾

이러한 원칙은 전후 서구자본주의의 번영과 안정을 가져왔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 자본, 노동의 조합적 결합을 제도화시켰다. 이러한 케인즈의 경제이론은 1929년 대공황으로 인한 대량실업과 투자위축이라는 자본주의의 결정적 위기상황에서 채택되었고, 1970년 중반 이후 세계자본주의 체제가 심대한 구조적 불황에 직면하기까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케인즈의 이론은 1970년대에 침체성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현상과 유가(油價)인상, 환율구조의 불안정 등과 겹치면서 자본주의의 장기침체 경향을 막을 수 없었고, 구조적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본은 비용절감과 정치적 표현으로 쓰이는 이른바 민간의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중시하는 ‘머니테리즘(monetarism, 통화주의)’⁵⁴⁾에

52) 참조: 박장환, 경제사상사의 이해, 248.

53) 참조: 김성구, 김세균외, 자본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문화과학사, 1998, 187-188.

따른 강력한 경제 개혁인 ‘대처리즘(Thatcherism)’⁵⁵⁾이나 세출의 삭감, 소득세의 대폭감세, 기업에 대한 정부 규제의 완화, 안정적인 금융정책인 ‘레이거노믹스(Reaganomics)’⁵⁶⁾라는 대응방식을 택하게 되었다.⁵⁷⁾

3.5. 신자유주의(Neo liberalism)

1970년대 이후 장기불황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케인즈주의 경제정책의 무능력과 초국가적 자본의 세계화에 따른 민족국가 형태의 제한성을 비판하며 등장한 것이 신자유주의(Neo liberalism)이다.

신자유주의는 현재까지 전 세계를 포괄하는 하나의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로서 정치, 경제뿐만 아니라 종교, 가정생활, 문화 및 윤리, 예술을 포함한 많은 부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⁵⁸⁾ 여기서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이론과 학자들의 견해, 그리고 신자유주의의 전개과정과 현상황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신자유주의는 사회의 제 관계를 시장관계로 재편하거나 시장경제적 관계에 최대한 종속시킴으로써 자본운동의 자유를 극대화하려는 이데올로기이다.

이는 1970년대 중반 이후 세계경제가 심각한 구조적 불황에 빠져 케인즈주의 전략의 유효성이 의문시되면서 그 구조적 불황의 부담을 자국 및 제 3세계

54) 머니터리즘(monetarism)이란 화폐공급이 경제활동의 중요한 결정요인이라고 주장하는 경제사상이다.

55) 대처리즘(Thatcherism)이란 일반적으로 영국경제의 재활성화를 꾀하는 영국 대처 전 총리의 경제정책을 가리킨다. 정치면까지도 포함해 강력한 신념에 따른 행동 전체를 말하기도 한다. 대처총리는 79년 취임 이래 민간의 자유 활동을 중시하는 머니터리즘의 사고방식으로, 강력한 경제개혁을 추진했다. 구체적으로 ①공영기업의 민영화 ②노동조합의 활동제한 등이 그 주요정책.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 극복, 경기회복에는 성과가 나타났으나 실업문제는 거의 해결되지 않고 국민의 불만도 고조되었다.

56) 레이거노믹스(Reaganomics)란 미국 제40·41대 대통령 레이건(재임 1981~1989)에 의하여 추진된 경제정책을 말하며, ‘레이건’과 ‘이코노믹스’의 복합어이다. 경제의 재활성화를 통하여 ‘힘에 의한 위대한 미국’의 재건을 기한다는 국가정책이다. 구체적으로는 세출의 삭감, 소득세의 대폭감세, 기업에 대한 정부 규제의 완화, 안정적인 금융정책으로 요약된다. 과거 경제정책이나 이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J.M.케인즈의 ‘유효수요론’(케인즈경제학)에서 벗어나서 크게 관심을 모았다. 당시 미국 경제가 당면하였던 경기침체 속에서의 인플레이션의 진행, 즉 스태그플레이션을 치유하는 데는 종전의 케인즈류의 수요관리만으로는 미흡하여 좀더 적극적으로 ‘공급 측면’을 자극함으로써 파급효과가 수요의 증대로 미치게 한다는 ‘공급의 경제학’을 내세웠다.

57) 참조: 김성구·김세균외, 자본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문화과학사, 188.

58) 참조: Bernard Haring, Free and Faithful in Christ, volume 3, 소병욱(역), 바오로 딸, 1996, 356.

의 노동자 - 민중 전체에 전가시켜 해결하려고 한 선진 국가들의 독점자본의 총체적인 공세로서 출현하였다.⁵⁹⁾

특히 1979년에서 1990년까지 집권하였던 영국의 대처(Margaret Thatcher) 수상과 1980년에서 1988년까지 집권했던 미국의 레이건(Ronald Reagan) 대통령은 이러한 현대의 신자유주의에 의한 규제철폐, 공기업의 민영화, 노동시장 유연화 등의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는 세계화와 함께 현재 전 세계의 지배적인 흐름으로 등장하였다. 여기에서 핵심적인 쟁점은 화폐와 노동력에 대한 국가적 관리형태의 변화이다.

케인즈주의 정책은 화폐정책과 재정정책을 통해 국가가 화폐순환에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공황을 예방하고 완전고용을 달성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 정책은 세계경제의 불균형과 국제통화제도의 불안정성에 따른 인플레이션의 국제적 일반화와 금융공황에 의해 결정적으로 폐기되었고, 대신 자연실업률 수준의 불황을 정상적인 것으로 인정하면서 안정적 화폐공급과 국제금융에 대한 탈규제를 통해 금융공황에서 탈피하려는 화폐주의정책이 나타났다.

또한 19세기말 이후 노동자 운동에 대응하면서 전후 케인즈주의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합의체제에 의해 더욱 확고해졌던 복지국가의 사회보장제도가 공격받기 시작하였다. 동시에 완전고용과 포드주의적 노동력의 민족 국가적 관리형태가 포기되고,⁶⁰⁾ 세계적 차원에서의 비용 삭감경쟁에 따라 노동력의 범세계적 재구성과 노동력 관리의 유연화가 시도되었다.⁶¹⁾

하이에크(F. A. Hayek, 1899-1992)와 밀턴 프리드만(Milton Friedman, 1912-2006)은 신자유주의를 선도한 사람이다. 여기서는 이들의 이론들을 통하여 현대의 신자유주의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하이에크는 시장에 대한 정부의 통제와 개입은 인플레이션, 실업, 경기침체, 불황 등과 같은 경제적 불안정을 초래할 뿐이며, 궁극적으로 국가적인 재앙을

59) 참조: 김세균, 신자유주의와 정치 구조의 변화, 민주와 진보를 위한 지식인연대 편, 자본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문화과학사, 1998, 61-62.

60) 포드주의적이란 말은 1903년에 설립된 포드자동차회사에서 포드에 의해 실시된 대량생산 방법을 뜻한다. 그러나 포드주의적 방법은 생산과정에 대한 노동자의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실패했고, 노동의 파편화, 단조로움, 노동 강화 및 노동의 위계적 차별을 진전시켜 노동의 비인간화를 가져왔다. 그리고 극단적인 표준화에 의한 경직성, 부품생산과 최종조립의 불균형, 부품의 과잉생산, 노동의 세분화와 경영으로부터의 배제에 의한 노동규율의 저하를 피할 수 없었다.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구조적 위기에 빠져들었다. 이는 생산측면에서 발생한 수익성의 위기라고 할 수 있다.

61) 참조: 양동안,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 한국자유총연맹, 자유공론, 103-104.

불가피하게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⁶²⁾ 고전자유주의는 시대에 따른 변화에도 불구하고 정부권력에 대한 개인의 자유의 보장을 그 중심과제로 하고 있는데, 신자유주의 또한 이러한 맥락을 잇고 있다.

고전자유주의는 시민계급이 자신의 권익을 확보하고자 정치적 세력으로 등장하였음에 비하여 신자유주의는 자본주의의 발전과정에서 야기된 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권력의 비대화를 경고하고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려 한다.

하이에크가 정부의 경제적 역할을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그는 정부가 자발적 시장질서의 수호자로서 제한적인 강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며, 정부의 역할에는 공공재의 공급도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는 시장 실패의 가능성을 인정하기 때문이었다. 하이에크에 의하면 시장질서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 주어야 하는데, 이는 다른 사람에 의한 강압이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부는 부당한 강압을 제재하기 위해 최소한의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정부가 재산권의 보호 및 계약의 준수와 같은 자유보장의 조건들이 되는 제반제도 및 규칙을 제정하고, 이들이 준수되도록 그 위반자들을 제재·처벌하는 강제력을 행사해야 함을 의미한다.

하이에크는 이러한 법질서 뿐 아니라 공공재의 생산도 국가의 임무이므로 법질서의 유지만을 담당하는 고전적 자유주의의 작은 정부론의 주장은 현대사회에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다.⁶³⁾ 또한 그는 자발적인 교환 및 경쟁을 근간으로 하는 시장질서가 유일한 모형은 아니나 가장 일반적인 종류라고 하였으며, 따라서 현대문명에서 시장 질서를 근간으로 하는 자본주의 사회를 위대한 사회라고 간주하였다. 이러한 시장질서는 불확실성과 부족함에 의해 주도된다. 또한 구성원의 개인적인 의지로부터 생겨날 수 없으며, 이들이 전체에 대한 지식을 소유할 수도 소유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자발적인 것이다. 인간은 자신의 행동으로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이 생각할 수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예민하면서도 포괄적인 질서를 만든다.

결론적으로 시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전체에 대한 지식을 가지지 않고 있으며 질서를 주관하고, 결정하는 사람이 없어도 자발적으로 질서가 형성된다. 이러한 점에서 자발적 질서로서의 시장은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을 새

62) 참조: 브래태니커 사전, 1994, 356.

63) 참조: 조순 외, 하이에크 논문, 민음사, 1995, 86-87.

로운 관점에서 조명하고, 재해석하였다고 할 수 있다. 프리드만은 자유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1950년대 이후 독특한 이론과 방법론 및 정책을 제안하였다. 우선 무엇보다도 그는 정부의 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자유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것은 강압적인 권력이기 때문에 권력의 집중을 최대한 막아야 하며, 막을 수 없는 권력은 최대한 분산시켜야 한다. 권력집중을 막아야 하는 이유는 동일한 권력행사도 모든 사람의 자유를 증진시킬 수 없기 때문이며, 권력집중은 점차 부패해지고 자유를 침해하게 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불가피하게 권력을 행사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권력의 분화를 통해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의 폭을 확장시켜야 한다. 그리고 정부의 역할도 한정되어야 한다. 정부의 역할은 각 개인의 자유가 상충되지 않게 하기 위한 규칙을 제정하는 일, 자유시장기능이 스스로 이루지 못하는 일, 그리고 자유시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하여도 기술적으로 비용이 막대하게 드는 일 혹은 실제적으로는 불가능한 일, 나아가 자신을 책임질 수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일 등에 한정되어야 한다.⁶⁴⁾

하이에크와 프리드만의 이론에는 적지 않은 차이가 있으나, 이들의 이론을 통하여 현대의 신자유주의의 성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두 학자의 이론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과 미국과 같은 선진 민주국가에서 나타난 국가의 실패를 비판하면서 등장하였다. 국가의 실패라는 말은 경제학의 용어인 정부의 실패보다 더 넓은 개념이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정부의 실패는 정부가 경제에 개입하여 경제효율성과 형평성을 오히려 악화시키는 현상을 말한다. 그러나 국가의 실패는 이에 더하여 정치적 내지 법률적인 측면에서의 국가의 잘못까지를 포함한다. 그것은 개인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국가가 보호하지 못하거나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까지도 포함한다. 또한 정부의 실패는 행정부 문제만을 지칭하는 데에 비하여, 국가의 실패는 행정부만이 아니라, 입법부와 사법부까지 모두 포함하는 의미에서 국가의 부적절한 행태를 총칭한다. 특기할 것은 이들이 비판하는 국가의 실패는 후진국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발달한 선진국에서 발생한다는 점이다.

케인즈나 그의 지지자들은, 현대의 구미 선진국들에는 민주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어 정부는 유능하고 공평무사하게 업무를 집행할 것으로 생각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물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대략 60

64) M. Friedman and Friedman, Rose D, Capitalism and Freedom, University Chicago, 1962, 2-4.

년대까지는 정부의 개입이 전반적으로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이들 국가가 유례 없는 장기번영을 누렸음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결과는 앞에서 설명한대로 케인즈주의자들의 예상이 잘못되었음을 보여 주었다. 그리고 두 학자는 정부의 실패를 포함한 국가의 실패를 시정하기 위해 국가의 권한과 기능을 축소시키고 개인의 자유와 시장경제를 확대할 것을 주장한다. 세금을 감축하고 적자재정을 금지시키고, 정부기구를 축소하고, 재량적으로 하던 경제정책을 금지하고, 공기업을 민영화하고, 경제규제를 축소하고, 무역과 자본거래 등 대외거래를 자유화하고, 노동시장을 유연화 하도록 하였다.

신자유주의는 복지제도를 축소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선진국들은 공공복지를 꾸준히 증대시켜왔다. 현대의 신자유주의자들은 이것이 정부재정을 팽창시킬 뿐 아니라 근로의욕을 감소시키는 복지병이라는 부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복지제도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자유주의는 영국과 미국이 시작하였으나, 세계화의 물결을 타고 전 세계로 파급되었다. 그것은 소련의 몰락 이후 미국의 군사력과 경제력의 세계 지배가 더욱 강화되어 미국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신자유주의를 전 세계로 확대시켰기 때문이며, 선진국과 후진국을 막론하고 모든 나라에서 정부에 대한 실망과 불신이 컸기 때문이다. 후진국에서는 민주주의가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의 실패가 선진국에서 보다 훨씬 더 심하게 나타났다. 정경유착에 의한 권력형 비리가 만연했고, 정부와 공기업 내에 역시 비리와 비능률이 만연했다. 그 결과 비대한 정부에 대한 증오가 후진국들에서 현대의 신자유주의가 쉽게 수용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였던 것이다.⁶⁵⁾

고전자유주의는 개인적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사적소유제와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옹호하였다.⁶⁶⁾ 그런데 이런 자유주의에 대한 개념이 20세기 후반에 재등장하게 된다. 원래 신자유주의는 자본주의가 점차 독점적 성격을 띠기 시작하면서 재등장하였다.

시장은 공정하게 경쟁하는 체제를 유지해야 하는데, 독점자본이 생겨 그 체제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공정하게 경쟁하는 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신자유주의가 재등장하게 되었고, 그런 상황에서 자유주의적 경쟁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 자유주의의 한 분파가 신자유주의를 만들었다.⁶⁷⁾

65) 참조: 이근식, 황경식, 자유주의란 무엇인가, 50.

66) 참조: 강상구, 신자유주의의 역사와 진실, 문화과학사, 문화과학사, 2000, 91.

흔히 대처리즘이나 레이저노믹스를 신자유주의라고 부르는데서 알 수 있듯이, 신자유주의란 특정한 형태의 사회를 지향하는 현실적 운동 내지는 정치 이데올로기를 가리키는 측면이 강하다. 또한 ‘자유주의의 부활’이라는 단순한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엄격한 개념정립과 설정은 쉽지 않으나 신자유주의란 1970년대 이후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보수 우익세력들이 채택한 일련의 정치적·이데올로기적 조류를 뭉뚱그려서 부르는 말이다.⁶⁸⁾

현대의 신자유주의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과 미국에서 국가역할의 축소와 시장기능의 확대를 주장하며 부활하여, 전 세계로 보급되었다. 현대의 신자유주의는, 그 동안 선진국에서나 후진국에서 누적된 국가에 의한 개인자유 의 축소와 정치인과 관료들의 무능과 부패로 원만한 국가경영이 실패하였으므로, 국가의 역할을 축소하고, 경쟁시장의 효율성을 발휘시키고 개인의 자유를 증대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현대 경제적 신자유주의도 긍정적인 작용과 부정적인 작용을 함께 나타내고 있다. 긍정적인 작용이란 개인의 자유를 증대시킴으로써,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정적인 작용이란 시장의 실패, 즉 경제가 불안정해져 불황이 나타나고, 빈부격차가 심화되며, 환경의 파괴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세계화라는 현대 신자유주의로 인하여 시장의 실패가 전 세계로 확대되고 있다. 이전의 개입 단계에 있어서는 개별 국가의 정부가 경제에 대해 상당한 관리 능력을 갖고 있어 시장의 실패를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었으나 세계화로 인해서 경제에 대한 개별 정부의 장악력이 크게 축소됨으로써 시장의 실패가 그대로 표출되고 있다.⁶⁹⁾

자본의 해외이동과 자유화는 투기자본의 빈번한 이동을 초래하였고, 이로 인해 국가는 금융위기를 맞으며, 경제적 불안을 느끼게 되었다. 개별국가 내에서도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빈국과 부국 사이에 격차가 심화되고 있어서 이 과정에서 약소국 빈민들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자본주의는 원래 자본의 논리에 의해 지배된다. 자본의 논리는 이윤만을 고려할 뿐, 인간의 존엄성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신자유주의가 진행될수록 저소득층의 저항, 특히 외국 자본에 의하여 생존권이 침해당하는 약소국 빈민의 저항이 촉발되고 있는 것이다.⁷⁰⁾

67) 참조: 강상구, 신자유주의의 역사와 진실, 93.

68) 참조: Giddens, 한상진 외(역), 제3의 길, 생각의 나무, 1998, 15.

69) 참조: 이근식, 황경식, 자유주의란 무엇인가, 50.

70) 참조: 같은 책, 51.

4. 경제적 자유주의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

많은 나라들에게 있어서 자유 시장은 자원을 배분하고 인간의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자유 시장은 지불능력이 있는, 구매력을 가진 것에 대해서만, 그리고 시장에 판매될 수 있고 정당한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재원에 대해서만 그렇다.⁷¹⁾ 교회는 경제활동의 목적만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 경제체제가 인간의 창조성과 인격성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반대한다.⁷²⁾ 물론 신자유주의는 경제적 효율성을 거둘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는 연대성에 대한 배려와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⁷³⁾ 여기서는 가톨릭교회가 경제적 신자유주의에 대하여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

4.1. 경제적 신자유주의

현대경제 질서에서는 부의 축적뿐만 아니라 거대한 권력과 경제의 독재적 지배력까지도 소수의 수중에 집중된다. 이 권력의 집중은 최강자의 생존만을 허용하는 무제한 자유경쟁으로 이루어지며, 경제적으로 독점하기 위하여 투쟁하게 되고, 국가권력을 잡기 위하여 투쟁하게 되며, 국가 간에도 충돌하게 된다.⁷⁴⁾ 이런 가운데 경제 권력은 자유 시장을 휩쓸고, 이윤추구의 욕망이 야망으로 이어져 많은 사람들의 경제생활을 어렵게 만들고, 불안정하게 만든다. 특히 자유경쟁으로 인하여 자본이 없는 사람들은 스스로 파산하게 된다.⁷⁵⁾

“그리스도인들은 자유주의 사조에 대해서 지혜로운 판단을 내려야 한다.”⁷⁶⁾ 개인의 자유를 무조건 주장하는 자유주의에 동의해서는 안 된다. 자유주의는 사람들에게 사회적 유대를 맺으려고 하지 말고, 자기 이익과 권력을 찾으라고 한다. 자유주의에 의하면 사회적 유대는 개인의 노력으로 쉽게 자동적으로 얻어지는 것이지 사회조직의 목적과 규범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⁷⁷⁾

71) 참조: 백주년, 34항.

72) 참조: 사회적 관심, 15항.

73) 참조: Jean Yves Calves, *L'Eglise devant le liberalisme economique* 교회와 경제 자유주의, 추교윤(역), 가톨릭출판사, 1997, 37.

74) 참조: 사십주년, 41항.

75) 참조: 사십주년, 42항.

76) 팔십주년, 35항.

77) 참조: 팔십주년, 26항.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의 경제체제에 착취당하고 있다. 특히 새로운 방법으로 생산되는 상품들의 경쟁에 맞설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빈곤하게 살아간다. 그래서 국제적 수준에서 상호간의 교역 관계를 할 수 있는 나라들은 번영하지만, 그렇지 못한 나라들은 침체와 불경기에 빠지게 된다.⁷⁸⁾

4.2. 시장경제

오늘날 교회가 신자유주의에 대하여 비판적 입장을 취하는 것은 그것이 빈부격차를 심화시킴으로써 심각한 경제적 불평등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시장경제에 대한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자본주의가 인간의 자유로운 창의력의 기본적이고 긍정적인 역할을 인정하는 경제체제를 의미하는 면에서는 분명히 긍정적으로 평가된다.⁷⁹⁾ 그러나 그것이 경제적 자유를 인간에게 주어진 유일한 자유라고 절대화시킬 때 인간은 순전히 무제한적으로 이윤만을 추구하는 개인적이고 경제적인 존재로 전락하고 사회적 유대는 부차적인 것이 된다.⁸⁰⁾ 거기서 인간은 무제한 자유경쟁을 유일한 삶의 질서로 받아들임으로써 인간성을 파괴시키는 부정하고 가혹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즉 사회적·도덕적 측면은 망각되거나 무시당하고 경제활동에서 최강자의 생존만을 허용하는 무제한적인 자유경쟁은 부의 축적뿐만 아니라 거대한 권력과 경제의 독점적 지배력을 결국 소수의 수중에 들어가게 한다.⁸¹⁾ 이러한 편중은 경제적 불평등을 야기함으로써 자유주의 통상원칙을 무의미하게 만들고,⁸²⁾ 경제를 지배해야 할 인간과 국가,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과 가난한 국가가 오히려 경제에 예속되는 현실을 낳는다.⁸³⁾ 역사적으로 볼 때 자유주의는 경제 권력을 장악한 소수의 자본가들에 의해서만 경제의 주도권이 강화되고 보호되는 체제로서, 인간의 노동은 단지 생산의 도구이며, 자본이 생산의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요인이요 목적이라는 것을 근거로 노동자들의 권리에 대해서는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⁸⁴⁾ 신자유주의는 문제해결을 시

78) 참조: 백주년, 33항.

79) 참조: 백주년, 42항.

80) 참조: 팔십주년, 26항.

81) 참조: 사십주년, 41항.

82) 참조: 민족들의 발전, 58항.

83) 참조: 사목현장, 65항.

84) 참조: 노동하는 인간, 8항.

장 세력의 자유로운 발전에 맹목적으로 떠맡기려는 극단적 자본주의 이데올로기로 확산될 위험이 있다.⁸⁵⁾

1997년 아메리카 특별 주교 대의원회의 후속문헌도 신자유주의를 극도의 이윤 추구와 사회의 약자들을 소외시키는 이데올로기로 단정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악 영향을 시정하도록 요구하였다.⁸⁶⁾ 국제경제에서 전 인류를 위한 공동선을 추구하기 위해 개별국가들이 보다 우호적으로 연대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공동선이란 “집단이나 구성원 개개인으로 하여금 더 완전하고 더 용이하게 자기완성을 달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생활상 여러 가지 조건들의 총체”⁸⁷⁾이다. 그런데 현대에 이르러 세계가 하나로 결합되면서 공동선의 개념은 세계적 차원으로 확대되었고, 세계적 차원의 공동선을 이루어 가기 위해 개별 국가들의 연대성이 강하게 요청된다. 연대성이란 공동선에 투신하겠다는 강력하고 항속적인 결의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대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개별국가 상호간의 신뢰와 존중,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따라서 부유한 국가들은 제국주의와 패권주의를 지양하고 다른 나라에 대해 윤리적인 책임을 느낌으로써 올바른 국제체제를 건설해야 한다.⁸⁸⁾ 영국의 웨일즈 가톨릭 주교회의는 아담스미스가 주장한대로 시장의 완전 자유경쟁하에서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사회의 번영을 촉진하게 된다는 주장이 “때때로 그렇기는 하지만, 그러한 법칙이 마치 하느님께서 주신 자연법인 양 반드시 그렇다고 하는 것은 우상숭배나 하나의 경제미신과 같은 견해”⁸⁹⁾라고 비판하였다. 실제로 이윤추구, 경쟁, 사적 소유의 완전 자유방임은 결국 금융상의 제국주의와 폭군 같은 독점상태로의 변질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하느님은 인간에게 처음부터 무제한적인 자유를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⁹⁰⁾ 그러므로 국가는 최대한으로 작아져야 하고 개인의 자유는 최대한으로 커지도록 보조성의 원리를 따라야 하고,⁹¹⁾ “각자가 활동과 생활의 연대성을 형성하기로 노력하기 위한 자유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⁹²⁾

시장경제가 낳은 ‘시장 인간’은 극도로 왜곡된 인간상을 보여준다. 인간은

85) 참조: 백주년, 42항.

86) 오용석, 가톨릭시즘과 경제개발, 가톨릭사회과학논문6, 한국가톨릭사회과학논문회, 1989, 51.

87) 사목헌장, 26항.

88) 참조: 사회적관심, 38-39.

89) 영국의 웨일즈 가톨릭 주교회의, 성명서, 1996, 76.

90) 참조: 민족들의 발전, 26항.

91) 참조: 백주년, 48항.

92) 팔십주년, 47항.

탐욕의 노예가 되고, 인간의 욕망은 오직 경제적인 것만으로 채워진다. 인간의 자유는 “맹목적인 본능이나 순 외적 강박에 의하지 않고, 인격적인 내적 동기에 의하여 움직이기를 요구하지만,”⁹³⁾ 오히려 인간은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시장경제의 노예가 된다. 공동선의 실현을 위한 국가의 정당한 개입이 폐기 내지 축소되면서, 사회적 약자인 가난한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더욱더 시장경제논리에 예속되고, 인간으로서 지니는 자유를 온전히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인간의 자유는 인간의 고립된 생활이나 극도의 빈곤 속에서 위축된다. 그것은 사회생활의 속박과 인간의 연대성에서 오는 요구를 책임지고 수락하며 인간 공동체에 헌신 봉사할 때에 더욱 강해진다.⁹⁴⁾ 그러나 무제한적 자유경쟁을 자신의 존재근거로 상정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시장경제 체제는 인간의 자유를 왜곡시키고 있다. 그것은 경쟁의 자유, 시장참여의 자유를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인간의 자유가 보다 온전히 행사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는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⁹⁵⁾

이러한 자유경쟁을 토대로 한 시장경제의 절대화는 시장의 자유를 위해서 인간의 자유를 이웃과의 연대를 고려한 통제 또는 조정의 규범들과는 전혀 무관한 경제적 자유로 축소시킬 뿐만 아니라, 이러한 축소된 인간의 자유마저도 시장자유로 도구로 희생시키는 하나의 우상숭배라 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시장은 모든 이에게 개방되어 있지 않다. 다시 말해 경제의 원활한 흐름을 촉진시킬 수 있는 부를 지닌 사람들은 시장의 참여가 자유로운 반면, 소비자가 되기 위해 충분한 돈을 갖고 있지 않은 가난한 사람들은 시장에서 배제된다.⁹⁶⁾

자본의 물신성을 기초한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은 자본의 장애 없는 이윤추구의 공간과 이러한 공간 안에서의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목적으로 할 뿐, 생산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의 권리와 필요는 자유 시장 경제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여기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시장은 단순한 경제활동의 조정 또는 중재 기구로서의 기능을 초월하여 인간생활의 전 영역을 주관하는 초월적이고 전능한 존재가 된다. 신자유주의 신봉자들에게 나타나는 근본적인 문제는 시장경제의 초월화이다. 여기에서 이익추구를 토대로 한 경제적 관계가 인간의 전 실존을 관철시키는 초월적 비약이

93) 사목헌장, 17항.

94) 참조: 사목헌장, 31항.

95) 참조: 교회와 경제 자유주의, 추교윤(역), 가톨릭출판사, 1997, 68-70.

96) 참조: 성정모, 인정 없는 경제와 하느님, 김항섭(역), 가톨릭 출판사, 1995, 105.

이루어진다. 이러한 초월화는 시장의 절대화로 연결된다. 여기에서 하느님의 초월성을 부인하는 우상숭배의 한 단면을 발견하게 된다.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시장경제는 초월적인 힘에 의하여 인간을 대신해서 진정한 역사주체로 자리매김을 하게 된다. 따라서 시장경제에서는 인간이 역사의 주체로서 의식적으로 이웃과 연대하는 것, 또는 사회적·정치적 목표를 의식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⁹⁷⁾

이상과 같이 교회는 경제가 인간을 위한 경제여야 하고, 인간구원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경제적 신자유주의 정책은 인간을 위한 경제정책도 아니며, 인간의 구원을 위한 경제정책도 아니기 때문에 경제적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하여 교회는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는 반대하는 입장이다.⁹⁸⁾

4.3. 국가

자유주의자들은 국가의 간섭을 배척한다. 여기서 국가에 대하여 교회는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4.3.1. 보조성의 원리

“국가는 개인이나 가정이 자유로이 활동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하며, 사회 전체와 그 부분들을 보호해야 하지만”⁹⁹⁾ 보편적 공동선의 실현을 위한 기능만을 이행해야 한다. 국가는 그 기능을 통해 공동체와 그 성원들의 번영을 위해 노력해야 할 국가의 권리와 의무, 공동선의 요청과 제 3자의 권리 존중에 의거한 시민들과 가정들의 자유 제한, 공동체와 그 부분들의 이익을 도모해야 할 정부의 적극적 요구, 국가에 부과된 가장 약하고 가장 빈곤한 이들의 권리들을 보호해야 할 특별한 배려의 의무 등을 실행하여야 한다. 공권력의 개입은 사회집단의 구성원들을 지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돕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회문제에 있어서 국가의 모든 개입목적은 사회집단의 구성원들을 돕는 것이지 그들을 소멸시키거나 흡수하는 것이 아니다.¹⁰⁰⁾ 국가의

97) 참조: 성정모, 인정 없는 경제와 하느님, 김항섭(역), 105.

98) 참조: 사십주년, 42항.

99) 새로운 사태, 26항.

100) 참조: 사십주년, 36항.

개입은 보조성의 원리에 입각해서 개인들이 스스로 시작한 것을 좋은 결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장하고 도와주며 가능한 한 경제 발전을 책임져 주어야 한다.¹⁰¹⁾ 국가는 부유하고 유복한 이들을 돌보며 동시에 가난한 이들을 등한히 할 수 없다. 특별히 국가는 약자들과 빈자들을 보살펴야 한다. 부유한 이들은 자기방어 능력이 있으므로, 공적인 보호를 받을 필요가 적다. 빈곤한 사람들은 재산이 없으므로 국가의 재산에 크게 의존한다. 임금 노동자들이 빈곤한 사람들에 속하기 때문에 국가는 이들을 특별한 배려와 관심을 가지고 돌보아야 한다.¹⁰²⁾ 또한 상위 사회는 하위 사회의 내적 생활에 간섭하지 말아야 하며, 공동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상위 사회는 하위 사회를 지원하고 도와주어야 한다.¹⁰³⁾ 국가의 개입은 보조성의 원리에 입각하여 개인들이나 집단들의 권리를 제거함 없이 조정하고 촉진할 뿐 아니라, 그들 상호간에도 어떤 특권이 지배하지 못하도록 감시해야 한다.¹⁰⁴⁾ 이에 가톨릭 사회교리는 경제활동 영역에서 국가의 개입이 요청된다고 가르치면서, 국가의 개입이 개인이나 하위 단체의 역할을 소멸시키는 것이 아닌 보조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3.2. 공동선 실현

교회는 공동선 실현을 위해 국가가 공동선의 본질적 요소들을 조정하고 역사적 현실에서 요청되는 내용들에 따라서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가르친다.¹⁰⁵⁾ 국가의 일차적 역할은 공동선의 실현이기 때문이다. 국가의 일차적 의무는 분배의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는 “공동선을 위해 애쓰는 통치자들이 분배정의를 엄격하고도 공정하게 준수함으로써 모든 계층의 국민들을 공평하게 보살펴 주어야 한다.”¹⁰⁶⁾ 자유방임주의를 기반으로 한 경제적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부작용으로 인하여, 자본가와 노동자들 간의 심각한 분열과 갈등, 노동자에 대한 기업인의 무자비한 착취, 소수독점자본과 대다수의 빈곤 등의 문제가 발생할 때, 국가는 공동선 실현을 위하여 사회적 약자와 빈자들

101) 참조: 어머니요 스승, 152항.

102) 참조: 백주년, 10항.

103) 참조: 백주년, 48항.

104) 참조: 지상의 평화, 65항.

105) 참조: 지상의 평화, 70-72항.

106) 새로운 사태, 24항

에 대한 배려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국가는 “개인의 권리를 보호함에 있어서는 약자와 가난한 자를 위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¹⁰⁷⁾ 특히 경제적 영역에서 약자인 노동자들의 개인적 권리를 보호해야 하고, 재화의 분배가 하느님께서 뜻하신 목적에 적합하게 그리고 공동선과 사회정의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전체사회의 복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재화는 다수의 개인과 다양한 사회계층들에게 가능한 한 정의롭게 분배되어야 한다.¹⁰⁸⁾

교회는 공동선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가 자기의 역할을 다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경제문제에 대한 국가권력의 작용도 필요하다.”¹⁰⁹⁾고 하였다. 그래서 국가는 공동선의 실현을 위해서 개인과 집단의 경제활동에 대하여 공권력이 상당한 정도의 통제를 가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사회의 불우한 사람들을 돕는 데 있어서는 국가가 주도권을 떠맡아야 한다.¹¹⁰⁾ 특히 국가는 많은 사람들이 실업에서 해방되어 고용기회가 주어지도록 해야 한다. 물론 국가는 노동계층 자체 내에 또 다른 특권층이 형성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는 임금과 물가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국가는 농업, 공업, 서비스 등 경제 분야 간 불균형을 완전히 제거하거나 최소화해야 한다. 경제성장과 공공서비스 발전의 균형, 특히 공권력의 활동을 통한 균형도모, 과학기술의 발전에 적응하는 생산수단의 개선, 마지막으로 현시대에 유익할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행복도 조망하는 더욱 더 인간다운 삶의 번영을 고려해야 한다.¹¹¹⁾ 이에 국가는 사회경제적 공동선의 실현과 경제적 불평등을 없애기 위하여 공동선을 위한 활동을 인도하고 촉진시키고 협력해야 한다.

4.4. 노동과 자본

노동이란 인간에 의해 이루어지는 육체적, 정신적인 행위이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수많은 행위들 가운데 노동으로 인식될 수 있고, 인식되어야 하는 인간의 활동이다. 인간은 노동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으며, 노동은 다른 피조물들과

107) 사십주년, 12항.

108) 참조: 사십주년, 28항

109) 어머니요 스승, 52항.

110) 참조: 사십주년, 45항.

111) 어머니요 스승, 79항.

인간을 구별하는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노동은 인간과 인간성을 나타내는 특별한 표시이며, 인격체로 이루어진 공동체 안에 움직이는 개개인의 인격체를 나타내는 표시로서 인간의 내면적 특성을 결정하며, 인간의 본질 자체를 형성한다.”¹¹²⁾

인간의 노동은 창조주 하느님의 창조 행위를 반영하는 것이며,¹¹³⁾ 이런 의미에서 인간의 노동은 자신의 인간적인 역량의 범위 안에서 창조주의 활동에 참여하고 계속 발전시키며 그 창조활동을 완성시킨다.¹¹⁴⁾ 또한 인간은 노동을 통해서 창조주로부터 위임받은 세상을 다스리고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모상으로서 정체성을 실현해 나간다.¹¹⁵⁾ “하느님의 소명에 따라 창조주 하느님의 활동에 구체적으로 참여하는 행위인 노동은 참으로 인간적인 것이며 인간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¹¹⁶⁾ 인간은 자신의 고유하고 합당한 영역에서 다양한 노동을 통하여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고 형제들에게 봉사하며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여 하느님의 창조사업을 완성하도록 협조하게 되는데,¹¹⁷⁾ 바로 여기에서 노동이 지닌 두 가지 성격, 즉 노동의 개인적 성격과 사회적 성격이 드러난다. 이러한 인간노동의 사회적이고 개인적인 성격이 간과된다면 노동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¹¹⁸⁾

자본은 “인간이 자의로 쓸 수 있는 자연자원만이 아니라 인간이 이를 자기의 필요에 따라 변형시키는, 어떤 의미에서는 자원을 인간화시키는 수단의 총체도 포함”¹¹⁹⁾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본은 “인간의 노동이 이룬 역사적 유산의 결과”¹²⁰⁾이기에 축적된 노동이라고 할 수 있다. 축적된 노동으로서 자본은 노동의 주체인 인간과의 관계에서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¹²¹⁾

자본의 이러한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기능을 고려하면 자본을 철폐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올바르게 형성하고, 관리하고, 증식시킬 필요가 있다. 자본 증식의 주요 원천인 잉여소득은 유익한 재화를 생산하는 노동의 기회를 증진시키

112) 노동하는 인간, 서문.

113) 노동하는 인간, 4항.

114) 참조: 노동하는 인간, 25항.

115) 참조: 노동하는 인간, 9항.

116) 노동하는 인간, 4항.

117) 참조: 사목헌장, 67항.

118) 참조: 사십주년, 31항.

119) 노동하는 인간, 12항.

120) 노동하는 인간, 12항.

121) 참조: 사십주년, 43항.

기 위하여 투자되거나, 자본소유자가 자신의 기업을 경영하여 새로운 형태의 노동을 창출하고 가치증대를 추구하며 여기에서 나오는 결실이 노동자들에게 공정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쓰여야 한다.¹²²⁾ 자본가들은 자기 배당금의 과도한 증가만을 추구할 때 비난을 받아야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현명하고도 건전한 방향으로 자본을 이끌어 간다면 이는 인류를 위한 사회사업을 하는 것이다. 그들은 자본투자를 통해 최대한 가능한 수익만을 찾지 말고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노동자의 인격적 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¹²³⁾

인간은 하나의 인격체이므로, 노동의 주체가 된다. 인간 노동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노동의 종류가 어떤 것이냐에 있지 않고 노동을 하는 사람이 하나의 인격체라는 사실에 있다. 즉 아무리 인간이 일할 운명을 타고 났다 해도, 노동이 인간을 위해 있는 것이지 인간이 노동을 위해 있는 것은 아니다. “노동의 목적은 항상 인간인 것이다.”¹²⁴⁾ 따라서 각각의 노동은 노동의 주체, 즉 일을 성취하는 개인인 그 인격체의 존엄성을 척도로 삼아 평가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대 신자유주의는, 인간이 주체요 만드는 자이며,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생산과정 전체의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물질과 동등하게 생각하여 물질적 도구의 하나로 취급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오늘날 신자유주의 상황에서 노동자 자신은 소외당하고 억압당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처럼 가치가 전도된 상황 속에서도 노동의 주관적 차원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하느님의 모습대로 만들어진 인간의 주체성은 결코 인간에게서 제거될 수 없다. 노동현장은 하느님이 현존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122) 참조: 사십주년, 23항.

123) 참조: 교황청 신앙교리성, 자유의 자각,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4, 87항.

124) 노동하는 인간, 6항.

5. 요약

경제정책에 있어서, 16세기-18세기까지는 국가가 개입하여야 한다는 중상주의가 지배적인 경제정책 기조로 등장하였다. 그 이후 19세기에서 20세기의 대공황까지는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이용하여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자유주의가 출현하였고, 그 다음 20세기의 1970년대까지는 다시 국가가 개입하여야 한다는 케인즈주의가 지배적인 경제정책 기조로 등장하였으며, 1980년대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다시 개인의 자유를 이용한 시장경제에 맡겨야 한다는 현대의 경제적 신자유주의가 지배적인 경제정책 기조로 등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것으로 미루어 알 수 있는 것은 경제 문제에 있어서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과 개인의 자유에 맡겨 놓아야 한다는 주장이 시대적 상황에 따라 교대로 지배적인 경제정책 기조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또한 경제정책에 있어서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개인의 자유에 맡겨야 한다는 자유주의의 주장도, 시대를 초월하여 보편타당성을 가질 만큼 완전한 것이 못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의 사조가 오랫동안 지배하면 그로 인한 문제점들이 누적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그와 반대되는 사조가 다시 등장하는 역사가 반복되어 왔음을 의미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현대의 경제적 신자유주의가 그간 누적되어 온 국가의 실패를 해결하는 역사적 임무를 달성하면서, 동시에 시장의 실패를 누적시켰기 때문에, 다시금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게 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금권정치가 힘을 발휘하긴 하지만, 빈부격차가 사회의 인내 내지 감내 한계를 넘으면, 가난한 다수의 힘이 다시 국가의 개입을 요구하게 된다. 따라서 지난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이 보장되는 보다 합리적인 대안들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제 2장 경제적 신자유주의 현상에 대한 판단

여기서는 경제적 신자유주의가 가져오는 여러 현상들을 살펴본다. 그 현상들은 우선 자유화 정책에 의한 탈규제화, 민영화, 유연화 현상들이다. 이러한 현상들은 이른바 사회적 제 관계들을 시장 경제적 관계의 우위 속에서 재구성하려는 논리에서 나오는 현상들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의 생존권을 부정하게 된다.

1. 규제완화 또는 철폐현상

신자유주의자들은 “국가의 시장에 대한 개입을 국가의 규제로 정의하고 국가의 규제는 사회적 효율성의 상실을 초래한다.”¹²⁵⁾고 하면서, 국가가 실행하고 있는 각종 규제를 완화 혹은 철폐하라는 경제정책을 제시한다. 왜냐하면 신자유주의자들은 자본이 이윤축적을 위해 최적의 조건을 갖춘 시장을 찾아이동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국가의 개입과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규제조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경제적 신자유주의 자유화정책으로 가격규제, 매매규제, 직업선택과 이주에 대한 규제 등 각종 규제들을 완화 또는 철폐시키고자 한다.¹²⁶⁾ 여기서는 경제적 자유주의 정책에 의해서 실현되는 규제완화 또는 철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한다.

1.1. 국가의 규제완화 또는 철폐 현상

인간사회는 각 개인의 공동생활에 의해 구성되며, 개인은 사회생활 속에서 그 존립이 가능하므로, 개인의 욕구에 대한 어떠한 제한이나 규제가 없으면 사회생활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러한 규제는 개인에 있어서 크게 사회화 등에 의한 내적규제와 사회통제 등에 의한 외적규제로 이루어지며, 일반적으로 협의의 규제와 광의의 규제로 나눈다.

협의의 규제는 첫째, 법규 및 규칙에 직접적으로 의존하고, 둘째, 벌칙이란 수단을 통해서 규제적 목적을 달성하게 되며, 셋째, 결정 주체가 택할 수 있는

125) 임현백, 시장.국가.민주주의, 나남출판사, 2001, 139.

126) 참조: 이근식, 자유주의-사회경제사상, 112.

선택의 수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광의의 규제는 “정부가 정부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수단”¹²⁷⁾ 즉, 경제 사회적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개인과 기업의 경제적 행태를 통제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러한 규제는 경제적인 목적과 관련된 조세, 관세뿐만 아니라 각종 인허가 및 환경규제, 행정절차 등 인간의 모든 삶의 영역에 적용된다.

국가의 일을 하는 정부는 바람직한 사회와 경제 질서를 구현하기 위해서 기업이나 개인, 조직 등의 특정 활동을 제한하거나 지도하고자 한다. 즉, 규제의 주체인 정부는 올바른 경제 질서를 구현하기 위해서 기업과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과 행동을 통제하고자 한다. 초기자본주의 하에서는 시장기능을 최대화 하고, 정부는 치안, 국방 등 최소한의 역할만 담당하였지만 독과점 시장의 형성, 환경오염과 같은 외부효과 발생, 공공재 생산의 곤란, 위법·탈법한 행위들의 만연으로 인해서 정부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래서 정부는 민간부문을 구성하고 있는 경제주체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개입하여 정부가 사회에 바람직하다고 인정하는 방향을 지향하기 위해 정부규제의 방법을 채택하였다. 과거 우리나라도 이러한 정부규제를 극대화하여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오늘날 신자유주의자들은 민간부문의 경제운영 능력이 향상됨으로써 오히려 공공부문의 능력을 능가하여 민간경제에 대한 정부의 불필요한 개입이 경제적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한다. 이렇게 규제의 불필요성이 대두되면서 폐지, 완화 등이 논의되기도 하는데 규제의 완전한 철폐는 혼란만을 가져올 것이다.

1.2. 규제완화의 실현

1970년대 불황 하에서 인플레이션과 생산성 정체 그리고 국제 경쟁력 상실이라는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은 규제 완화, 감세,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으로 표현되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시행하였다.¹²⁸⁾ 미국 정부는 규제를 완화하면 기업 활동이 조금 더 활발해지고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항공, 통신, 금융, 의약품, 전기, 유선방송 등 각종 부문에서 압박을 가하던 각종 규제들을 완화시켰다.

127) 규제 개혁의 경제 효과 분석, 하병기 외 지음 (주)을유문화사 서울, 2000, 21.

128) 참조: 강상구, 신자유주의의 역사와 진실, 112.

규제는 무조건 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여 미국정부는 영세 중소기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각종 규제마저도 철폐하였으며, 환경오염이나 제품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했던 규제까지도 제거하였다. 이로써 기업은 수익성이 높아졌지만 노동자와 소비자의 피해는 더욱 커지게 되었다.¹²⁹⁾

우리나라에서도 ‘규제개혁위원회’라는 기구까지 두어 각종 규제철폐 또는 개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밝힌 규제의 수는 연도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 동안 약 36,746개의 규제를 철폐하였다.¹³⁰⁾

1.3. 규제완화의 결과

규제완화 초기에는 경쟁구조가 형성되어 기업의 효율성이 개선되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규제완화의 과정에서 경쟁력이 약한 기업들은 도산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고용 악화, 실업률 상승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¹³¹⁾ 또한 인수합병(引受合併)에 대한 규제의 철폐로 인하여 기업 사고팔기가 늘어나 독점이 오히려 강화되기도 하였고, 독점이 심화되지 않은 산업에서는 기업들이 결탁을 해서 각종 사용료를 대폭 인상시키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었다. 한국경제의 위기는 과도한 규제 때문이 아니라, 규제에 실패했기 때문이다.¹³²⁾

규제완화정책의 일환으로 세금을 줄여주는 감세조치는 기업가들로 하여금 투자할 의욕을 고취하고 민중들에게도 가게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를 살리는 것이라고 하여 실행하였지만, 소득분배의 불평등과 빈부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만 초래하게 되었다.¹³³⁾

결국 규제의 수를 줄이는 것이 반드시 최선의 규제개혁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규제에는 반드시 필요한 규제도 있기 때문에 철폐에만 집중하는 것은 위험하다. 수량 위주의 규제개혁보다는 간접규제나 대안의 활용 등을 활성화하

129) 참조: 강상구, 신자유주의의 역사와 진실, 115.

130) 참조: 표-6 연도별 규제현황 (단위: 개) 규제개혁위원회,

	2003	2004	2005	2006	2007
규제수	7,812	7,767	7,968	8,083	5,116

131) 참조: 강상구, 신자유주의의 역사와 진실, 114.

132) 참조: 장하준, 개혁의 덫, 도서출판 부키(서울) 2007. 22.

133) 참조: 강상구, 신자유주의의 역사와 진실, 107.

고 규제의 방향을 전환하여 기업의 환경을 개선하고 경제 전체의 안정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규제품질 제고’라고 부르는데, 규제철폐는 품질제고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규제의 질적 향상을 이룬 후에는 질을 유지하고 기존 규제들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규제관리’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1.4. 국가의 규제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

국가는 개인과 기업이 창의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서 경제활동을 지원해야 한다.¹³⁴⁾ 그렇다고 교회가 자유방임주의를 선호하는 것은 아니다. 조건 없는 경쟁은 특정기업들이 이윤을 독점하는 것을 제한할 수 없다. 그래서 교회는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국가와 국제기구가 경쟁의 한계선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¹³⁵⁾ 예를 들어 금융자본이 국경 없이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발생시키는 문제, 곧 고리대금업과 같이 다른 국가에서 폭리를 취하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규제는 기업의 창의적 활동을 제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할 것이다.

노동자들은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가진 시민들이고 참되고 살아 있는 국가구성원들이다. 국가는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고려하여야 한다.¹³⁶⁾ 이러한 측면에서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분야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국가통치권 행사나 국가의 법률 집행을 통하여 사유재산권이 완전하게 보호되어야 한다.¹³⁷⁾ 이는 자본가들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이지만, 특별히 어느 누구보다도 노동자들과 그들의 가정을 위해서이다. 그들의 임금이 보장됨으로써 그들은 재산을 모을 수 있게 되고, 따라서 그들의 생활은 향상될 가능성을 갖게 된다.¹³⁸⁾ 또한 그들의 생활이 생산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일어날 수도 있는 산업설비들에 대한 무모한 파괴를 방지할 수 있다.

둘째로 국가는 파업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노동자들이 파업을 일으키는 동기는 대개 작업시간이 너무 길며 고되고 임금이 적다고 판

134) 참조: 백주년, 32항.

135) 참조: 백주년, 35항.

136) 참조: 어머니요 스승, 79항.

137) 참조: 새로운 사태, 28항.

138) 참조: 새로운 사태, 33항.

단되기 때문”¹³⁹⁾이다. 이에 국가는 노동자들의 조건을 더 좋게 한다든지 그들의 경제적 상황을 더 낮게 해주는 방향과 실직자들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파업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는 보조성의 원리에 따라 많은 고용 기회와 부의 원천을 제공하는 경제적 활동의 자유로운 수행에 유리한 생산 조건들을 만들어줌으로써, 직접적으로 그리고 연대성의 원리에 따라 더욱 비천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 조건을 결정하는 집단의 자립성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실직한 노동자가 최소한 생계유지에 필요한 것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¹⁴⁰⁾

셋째로 국가는 어린이들과 여성들의 노동에 관한 정확한 규정을 정하고, 고되고 위험한 직업의 확실한 범위를 정해야 한다.¹⁴¹⁾

넷째로 국가는 노동자들에게 적정임금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¹⁴²⁾

다섯째로 국가는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불리고 절약할 수 있는 적절한 법을 마련해야 한다. 그것은 이주를 장려하거나 억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분배정의를 엄격하게 적용하기 위해서이다.¹⁴³⁾ 국가의 개입에 관한 일반적인 규칙은 언제나 보조성의 원리에 따라야 한다. 국가는 개인이나 가정을 직접 자기 손아귀에 넣고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¹⁴⁴⁾ 개인의 기본적인 권리는 인정되어야 하며 유지되고 보호되며, 또한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¹⁴⁵⁾

국가의 활동은 보조성의 원리와 모순되어서는 안 되며, 경제활동의 자유로운 실행을 위해 호의적인 상황을 만들어가야 한다. 이것은 또한 연대성의 원리에 의해 고취되어야 하며, 힘없는 사람들을 옹호하기 위해 집단의 자율성에 한계를 정해야만 한다.¹⁴⁶⁾ 사실 보조성이 없는 연대성은 비 복지 국가로 쉽게 퇴행할 수 있다. 반면에 연대성이 없는 보조성은 자기중심적 지역주의 형성을 촉진시킬 우려가 있다. 이 두개의 기초적인 원리들을 존중하기 위해서 국가의 중재가 침해 되어서도 안 되고 결여되어서도 안 되며, 사회의 진정한 요구에 알맞게 상응되어야 한다.¹⁴⁷⁾

139) 새로운 사태, 29항.

140) 참조: 백주년, 15항.

141) 참조: 새로운 사태, 31항.

142) 참조: 새로운 사태, 32항.

143) 참조: 새로운 사태, 24항·33항.

144) 참조: 새로운 사태, 26항.

145) 참조: 새로운 사태, 27항.

146) 참조: 백주년, 15항.

147) 참조: 간추린 사회교리, 351.

국가는 모든 이들에게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일거리들을 창출해야 하며, 기업 활동을 고무시키거나 위기의 순간에도 잘 견디어 나가도록 도와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특히 국가는, 특정한 독점기업에 의해 발전이 지연되거나 방해가 될 때, 중재의 권리를 갖는다. 국가는 기업의 발전을 조화롭게 하고, 그 발전을 선도해야 한다.¹⁴⁸⁾ 특히 경제 문제에 있어 국가의 기본적인 과제는 자유경제의 필요조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제적 사안들을 규제할 수 있는 적절한 법률적 틀을 결정해 주는 것이다.¹⁴⁹⁾

무엇보다 자유 시장에 있어서 경제활동이 제도적, 법률적 혹은 정치적 공백 속에서 이루어질 수는 없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 국가는 적합한 법률을 적용시켜야 하고, 다양한 시장 활동에 지나치게 관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경제적, 사회적 정책을 구사해야 한다.

시장과 국가는 서로 협조할 필요가 있다. 상호간에 서로 존중해 줄 필요도 있다. 시장이 바라던 능률성을 유지할 수 없을 때, 그리고 재분배의 원칙의 효력에 의문을 가질 때, 국가가 공정하고 투명한 규칙의 준수를 장려하고, 엄밀히 필요로 하는 기간 동안에만 직접적인 중재를 하면서¹⁵⁰⁾, 경제발전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방향을 제시할 때만 자유 시장은 일반 대중에게 유익한 영향을 준다. 자유재량에 맡기는 원리를 사용하는 시장에는 시민들의 인간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재화와 용역의 동등한 분배를 보장할 수 없는 부문이 존재한다. 이러한 경우 서로에 대한 국가와 시장의 상호보조성이 필요하다.¹⁵¹⁾

국가는 생산 활동에 모든 시민들의 참여를 조장하는 경제정책을 실시하여 공익을 증진하도록 시민들과 기업들을 고무시켜야 한다.¹⁵²⁾ 보조성의 원리를 적용하기 위해서 국가는 과도하게 기업의 힘을 조절하는 간섭을 회피해야 한다. 특히 시민들은 개인능력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조건들을 주도적으로 자율적으로 찾도록 해야 한다. 공익을 목적으로 하여, 각 개인은 인간의 자유와, 공공활동 사이의 적절한 균형과 목표를 끊임없이 결정하면서 추구할 필요가 있다. 국가의 공적인 개입은 반드시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이행되어야 하고, 경제적 선도의 자유 권한에 반대되는 개인적 행위는 배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나친 국가의 개입은 사회에 해로운 것이 되기도 한다. 너

148) 참조: 백주년, 48항.

149) 참조: 간추린 사회교리, 352.

150) 참조: 백주년, 48항.

151) 참조: 간추린 사회교리, 353.

152) 참조: 간추린 사회교리, 354.

무 지나친 개입은 책임 있는 시민들을 배제시키게 되고, 인간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목표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관료적인 논리에 의해 이끌려져 가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¹⁵³⁾ 그러나 통치자들은 인간사회가 번영하고 개인의 복리가 증진되도록 국가를 다스리고 운영해야 한다. “이러한 일은 정치가의 직분이고 통치자의 본분이다.”¹⁵⁴⁾ 국가는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조화 속에서 똑같이 포용해야 한다. 부자들뿐만 아니라 빈자들도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가진 시민들이고 참되고 살아 있는 국가구성원들이다. 그러므로 “국가는 모든 계층의 시민들을 보살펴야 하며, 모든 사람들의 복지를 배려하는 것이 진정한 의무이다.”¹⁵⁵⁾

153) 참조: 백주년, 48항.

154) 새로운 사태, 23항.

155) 새로운 사태, 24항.

2. 공기업의 민영화 현상

경제발전의 초기 단계에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은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공기업을 통하여 경제발전을 이룩하게 된다. 그러나 경제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정부의 직접관리능력은 한계에 달하고, 전문경영자에 의한 운영 필요성이 생기게 되면서 세계 각국은 공공성이 높은 산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공기업을 민영화하려고 한다.¹⁵⁶⁾ “민영화는 경제적 자원과 각종 정치적 권한이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이전되는 것”¹⁵⁷⁾이다. 특히 신자유주의자들은 공기업의 민영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공기업의 민영화함으로써 국가의 개입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공기업의 통화를 각종 조치를 취하는데, 이것은 민간 경제활동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유발할 가능성만 높여 주기 때문에, 신자유주의자들은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경영통제 권한을 민간부문에게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공기업도 국가의 보호를 벗어나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민간기업과 경쟁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 공기업에 대한 민영화 정책이다.¹⁵⁸⁾ 여기서는 민영화 정책을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에 대하여 알아보고, 그 결과에 대하여 분석하여 보겠다.

2.1. 민영화에 대한 찬반론

공기업의 민영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국민경제에의 정부개입을 축소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기업은 본질적으로 사기업보다 비능률적이며 기업성이 낮기에, 민영화를 통하여 능률을 높일 수 있다. 공기업의 민영화함으로써 세입을 늘릴 수도 있으며, 민영화함으로써 종업원들이 기업에 대한 애착심을 갖게 되어 기업이 활기를 되찾게 된다. 특히 공기업의 민영화하면 공기업에 행사할 수 있는 정치적 압력을 제거할 수 있다. 그리고 불필요한 인원의 감원으로 경비를 절감할 수도 있고, 비용의 탄력적인 운용으로 불필요 지출을 막을 수도 있다.¹⁵⁹⁾ 그러나 민영화를 반대하는 이유는 경제발전의 전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 민영화보다는 국유화가 보다 유효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특히

156) 참조: 정갑영 외, 민영화와 기업구조, 나남출판, 1996, 42.

157) 최우석, 민영화와 한국 경제, 삼성경제연구소, 1997, 서울, 17.

158) 참조: 강상구, 신자유주의의 역사와 진실, 107.

159) 참조: 강신택 외, 공기업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1998, 107.

사회 간접자본의 계획 분야에서 민영화가 이루어지면, 국가가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조정력을 상실하게 된다. 그리고 공기업을 민영화할 경우 민간기업의 경제력 집중과 비대화가 초래되어 오히려 민간기업이 기업성만 추구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선택 폭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¹⁶⁰⁾

민영화는 노동문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데, 많은 경우 민영화는 고용문제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주며, 특히 기존의 공기업 사업을 공무원이 수행해온 경우에는 더 큰 고용상의 문제점을 발생시킨다. 국민의 생존배려차원에서 볼 때 공기업이 민영화되면 그 동안 공기업 체계로 인하여 보호를 받았던 사회적 약자 그룹이 더 이상 보호받지 못할 위험에 처하게 된다. 민영화는 이윤 추구를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며 이 경우에는 사회적 약자들이 이윤 논리에 구속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민영화의 결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영화 상품에 대한 사회적 및 부수적 비용, 예컨대 환경문제 유발로 공공 대중의 세금 부담 확대의 부수적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¹⁶¹⁾

2.2. 민영화 실현과정

1970년대 말 영국에서 시작된 민영화는 전 세계로 확산되어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실시하는 세계 각국의 가장 중요한 정책의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다. 긍정적인 면에서 볼 때, 공기업의 비효율성을 강조하는 민영화는 적자에 시달리는 공기업들을 흑자로 돌아서게 하여 이윤을 증대시키고 급속한 성장과 비용절감의 효과를 가져왔다. 기업의 경영혁신과 정치적 불간섭으로 인하여 자율권이 신장되었으며, 자본시장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금융조달을 하였기 때문이다.¹⁶²⁾

부정적인 면에서 볼 때, 민영화는 많은 노동자들에게 큰 타격을 준다. 공기업이 민간 기업에 비하여 과잉 고용의 상태에 있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므로 민영화는 대량 감원을 통한 대량 실업자의 발생을 초래하며, 대규모의 고용감축과 생산목표의 상향조정은 노동의 강도를 강화시키기 때문이다.¹⁶³⁾

결국 민영화는 단체협약권이나 파업권 등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가 무시됨으

160) 참조: 박수일, 공기업 및 정부출자기업의 민영화 추진 방향에 관한 논문, 한국경제논문원, 1989, 34-38.

161) 참조: 강상구, 신자유주의의 역사와 진실, 107-108.

162) 참조: 정갑영 외, 민영화와 기업구조, 나남출판, 51.

163) 참조: 강상구, 신자유주의의 역사와 진실, 108.

로써 노동자의 사회적 지위를 현저하게 악화시키며, 민영화로 말미암아 물가가 불안하게 되어 국민들의 생활을 어렵게 만든다. 정부의 물가 억제정책으로 공공요금은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었지만, 공공요금의 현실화와 기업의 이윤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기업의 인수 기업들이 실질 서비스 요금을 올려 국민들의 부담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이렇듯 민영화는 많은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을 주며, 기업의 민영화로 말미암아 자본이 없는 이들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규제완화와 관련하여 기업경영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 중의 하나가 민영화이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민영화된 기업의 민영화 전과 후의 변화를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외환위기 이후 민영화된 포스코, 두산중공업, 대한송유관공사, KT, KT&G, 대한교과서 등 7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살펴보자. 대상기업은 1998년의 대한교과서로부터 2002년의 KT&G까지 5년여 동안에 민영화가 이루어졌다.¹⁶⁴⁾ 지속적인 효과를 보기위해 민영화 이전·이후의 경영성과를 비교해 보면 건전성은 많이 회복되었으나, 고용자 수가 크게 감소하였다. 부채비율도 지속적으로 크게 감소하여 기업의 건전성이 크게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기업의 수익성과 관련된 영업 또는 순 이익률은 민영화 초기기간에 비해서는 개선되었으나 이후는 경영환경에 따라 등락을 반복하며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업의 성장성과 관계된 매출액 증가율 역시 경기 및 경영환경에 영향을 받아

164) 참조: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가 기업경영성과에 미친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 김현숙 (2007)의 내용 재정리.

표-7 민영화된 공기업의 주요 경영변수 평균값 (단위: 명, %)

	고용자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	매출액 대비 순 이익률	부채 비율	매출액 증가율
1998	15034.2	-0.30	-0.43	8.73	0.073
1999	13519.2	0.14	0.10	1.40	0.098
2000	10418.6	0.52	0.27	2.12	0.18
2001	12510	0.12	0.084	1.16	0.096
2002	-	0.10	0.034	1.58	0.12
2003	9672.9	0.19	0.12	1.16	0.082
2004	9658.6	0.15	0.077	1.00	0.12
2005	9620.9	0.20	0.15	0.93	-0.027
2006	9345.4	0.18	0.13	0.85	0.039

매년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고용자 수의 경우는 다른 변수에 비해 큰 폭의 감소를 가져왔으며, 그 영향이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공기업의 민영화가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후생측면에서는 고용감소와 이로 인한 소득감소라는 현상이 큰 폭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3. 민영화의 결과

결론적으로 이상에서 알아본바와 같이 공기업의 민영화란 국가의 부담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국가가 하던 사업을 개인 기업인들이 하도록 하여 이익증대를 이루자는 것인데, 민간 기업은 이익을 최우선의 목표로 하기 때문에, 적자 발생 시에 가격이 비싸질 수도 있고, 서비스가 부실해 질 수도 있다. 물론 이익을 얻기 위해 민영화를 함으로써 체질개선을 통해 그 비용을 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비용이 줄어들고 생산성이 향상되어 경영의 효율화를 이룰 수 있어서 경쟁력이 높아지지만, 민영화로 인하여 무엇보다도 실업자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일할 수 있고 일할 뜻이 있는 이들에게 고용의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데, 민영화는 대량 감원을 통한 대량 실업자를 발생한다. 이로써 노동자들에게 불행이 시작되고, 국가의 번영이 파괴하고 공공질서와 평화와 안녕이 위태롭게 된다.¹⁶⁵⁾

2.4. 민영화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

이상에서 알아본바와 같이 공기업의 민영화란 국가의 부담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국가가 하던 사업을 개인 기업인들이 하도록 하여 이익증대를 이루자는 것인데, 민간 기업은 이익을 최우선의 목표로 하기 때문에, 적자 발생 시에 가격이 비싸질 수도 있고, 서비스가 부실해 질 수도 있다. 물론 이익을 얻기 위해 민영화를 함으로써 체질개선을 통해 그 비용을 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비용이 줄어들고 생산성이 향상되어 경영의 효율화를 이룰 수 있어서 경쟁력이 높아지지만, 민영화로 인하여 무엇보다도 실업자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일할 수 있고 일할 뜻이 있는 이들에게 고용의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데, 민영화는 대량 감원을 통한 대량 실업자를 발생한다. 이로써

165) 참조: 사십주년, 34항.

노동자들에게 불행이 시작되고, 국가의 번영이 파괴하고 공공질서와 평화와 안녕이 위태롭게 된다.¹⁶⁶⁾ 결국 민영화를 하려는 목적은 자유경쟁을 통하여 경쟁력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므로 자유경쟁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을 살펴 보고자 한다.

가톨릭 사회교리는 자유경쟁과 시장경쟁의 절대화가 파생시킬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하여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자유경쟁에서 개인주의의 모든 오류들이 흘러나왔기 때문이다. 개인주의자들은 경제활동이 공권력의 간섭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제활동은 공권력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로이 자기 지도 원리를 갖게 될 때 더 활성화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유경쟁은 비록 어느 한계 안에서 정당하고 매우 유익하지만, 경제문제의 적합한 지도 원리일 수 없다. 이 점은 철저하게 개인주의에 바탕을 둔 자유 방임제에서 나타난 결과에 의해서 충분히 증명되었다.¹⁶⁷⁾

최강자의 생존만을 허용하는 무제한적인 자유경쟁은 부의 축적뿐만 아니라 거대한 권력과 경제의 독점적 지배력을 소수에게만 집중시키기 마련이다.¹⁶⁸⁾ 이러한 집중은 경제적 불평등을 야기함으로써 이미 경제적 기반이 확고한 선진국과 그렇지 못한 저개발국과의 자유주의 통상원칙을 무의미하게 만들고,¹⁶⁹⁾ 경제를 지배해야 할 인간과 국가가 오히려 경제에 예속되는 현실을 낳게 된다. 이에 교회는 공동선이 부당한 자유경쟁을 피하도록 요구하고 있음을 지적한다.¹⁷⁰⁾

자유경쟁은 구체적으로 자유 시장을 통해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자유시장의 존재 근거이다. 자유경쟁과 마찬가지로 자유시장이 절대화되었을 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시장이 만족할 수 없는 요인들, 즉 시장으로 충족되지 않는 인간적인 욕구들이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자유는 고립된 생활이나 극도의 빈곤 속에 빠지게 되면 위축되고 무기력해진다. 그와 반대로 인간의 자유는 사회생활의 불가피한 관계를 인정하고 인간관계의 수많은 요구를 받아들이는 연대성에서 오는 요구를 책임지고 수락하며 인간 공동체에 헌신하고 봉사할 때 더욱 강해진다.¹⁷¹⁾ 무제한적 자유경쟁을 자신의 존재근거로 삼고 있는 신

166) 참조: 사십주년, 34항.

167) 참조: 사십주년, 37항.

168) 참조: 사십주년, 41항.

169) 참조: 민족들의 발전, 58항.

170) 참조: 어머니요 스승, 80항.

171) 참조: 사목현장, 31항.

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시장경제 체제는 인간의 연대성을 파괴하고 인간을 이웃으로부터 고립시킴으로써 인간의 자유를 왜곡시킨다.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는 경쟁의 자유, 시장참여의 자유를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인간의 자유가 보다 온전히 행사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는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¹⁷²⁾ 자유경쟁이 정당한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경제적 자유의 의미를 제한해야 한다. 경제적 자유가 인간이 누려야 할 총체적 자유를 대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경제적 자유를 인간에게 주어진 유일한 자유라고 절대화시킬 때, 인간은 순전히 무제한적으로 이윤만을 추구하는 개인적이고 경제적인 존재로만 전락하게 되고 사회적 유대는 등한시하게 된다.¹⁷³⁾ 그러므로 모든 경제 문제를 자유경쟁에 맡길 수는 없다.

172) 참조: 교회와 경제 자유주의, 추교윤(역), 68-70.

173) 참조: 팔십주년, 26항.

3.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구조조정이란 기업의 제한된 자원을 자본축적·자본이익률의 유지와 향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사업체 또는 사업 부문의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수단과 정책에 대하여 알아보고, 그 결과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3.1. 구조조정의 수단과 정책

구조조정의 주요 수단들은 한편으로는 통폐합, 저수익, 저성장부분의 축소, 폐업, 매각, 고수익과 고성장부분의 확대, 신설, 합병과 인수,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매수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한 타 기업 매수 등이 있다. 이러한 정책은 부실을 털어 내고, 시장 규율을 확립하여 경제를 회생시키려는 노력에 해당한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실업(失業)의 발생은 불가피하지만, 그 해결책으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일시적인 실업에 대비하려는 것이다.¹⁷⁴⁾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거시경제, 환경의 안정, 경제성장, 고용 촉진과 빈곤퇴치, 경제개방 촉진, 무역제한 완화 또는 철폐, 경쟁강화, 자원배분의 효율성 재고, 자유화, 민영화 민간 부문 확대, 제도구축 등을 제시한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정책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과정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기업폐출이나 인원감원 등으로 나타나는데,¹⁷⁵⁾ 이러한 정책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자본주의 국가의 전략으로 공황 또는 불황에 직면한 경우에 항상 시도되는 경제정책이다.¹⁷⁶⁾ 구조조정의 내용으로는 국가 규제와 비시장적 제도의 최소화, 사유화, 무역 자유화, 자본 자유화, 외환 자유화 등의 전면 개방화를 주장한다.¹⁷⁷⁾

3.2. 실현과정 및 결과

경제의 구조적 위기는 경제규모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선진국으로부터 시작

174) 참조: 정성진 외, 신자유주의의 구조조정과 노동체제의 변화, 한울 아카데미, 경상대학교 사회과학논문원, 2002, 47-48.

175) 참조: 같은 책, 14.

176) 참조: 같은 책, 16.

177) 참조: 같은 책, 49.

되어 규모가 비교적 작은 여러 나라로 퍼져 나가게 되고, 세계경제가 장기불황에 빠지면 거의 모든 나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선진국들의 경제가 어려워지면 제 3세계도 자연스럽게 경제 위기가 오게 된다. 그래서 1970년대 이후 중남미, 아프리카, 동아시아 등 모든 국가들이 구조조정의 압력을 받았다.¹⁷⁸⁾

제 3세계의 나라들에서 외채위기가 발생했을 때, 채권은행들과 서방정부들은 그들이 IMF¹⁷⁹⁾(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통화기금)가 제시한 국제 금융조건을 받아들이도록 하였다. 채권단과 서방세계는 그들이 단기적으로 철저한 긴축정책을 통해 국제수지를 개선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 공기업의 민영화, 규제완화 등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실시할 것을 조건으로 내세우고 외채를 갚아주겠다고 제시하였다. 이러한 조건들은 제 3세계들로 하여금 IMF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하였고, 70여개의 국가들이 IMF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받아들이게 되었다.¹⁸⁰⁾

제 3세계의 많은 나라들의 경우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결과로 공기업에 대한 민영화가 진행되었고, 인수합병 등을 통해 기업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해고자는 엄청난 숫자로 증가하였으며, 시장개방으로 경쟁력이 약한 산업들은 도산하게 되었다. 따라서 빈곤이 심화되었고, 부는 편중되었으며, 경제 성장률은 떨어지게 되어, 결국 경제는 활기를 띠지 못하고, 오히려 사회적 분열이 가속화되어 많은 이들의 삶이 더욱 어려워지게 되었다.¹⁸¹⁾

우리나라에도 외채위기가 왔을 때, 김대중 정부는 기업, 금융, 공공부분, 노동부분 등 4개 분야에서 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하여 시장원리에 의한 상시적 구조조정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였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받았다.¹⁸²⁾ 그러나 동시에 노동정책은 신자유주의 정책으로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 정책이라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¹⁸³⁾

김대중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은 급박한 경제위기를 맞이하여 IMF의 국제 금융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지만, 한국경제의 발전단계와는 맞지 않는

178) 참조: 강상구, 신자유주의의 역사와 진실, 123-125.

179) IMF란 International Monetary Fund(국제통화기금)의 약자이며, 1944년 브레튼우즈 협정에 따라 설립된 UN 기구의 하나이다. 그 협정가맹국의 출자로 설치된 국제금융결제기관인데 주로 환(換) 및 단기자금을 융통해 준다.

180) 참조: 강상구, 신자유주의의 역사와 진실, 129-130.

181) 참조: 같은 책, 140-143.

182) 참조: 강봉균, 한국경제 발전전략, 박영사, 2001, 78-80.

183) 참조: 정성진 외, 신자유주의의 구조조정과 노동체제의 변화, 55-56.

것으로 자본주의적 모순만 심화시켰다. 이것은 노동자의 생활을 불안정하게 하고 노사 간의 대립과 갈등을 심화시켰기 때문에,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재고하지 않는 한 한국경제는 경제 불안과 정치적 혼란이 악 순환되는 남미형 경제로 전락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¹⁸⁴⁾

결국 노동자들은 구조조정을 통해 해고, 임금삭감, 노동 강도의 강화와 노동 조건의 악화 등을 통해 희생을 강요당한다.

3.3. 구조조정의 영향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실업이 발생되고 비정규직이 증가하게 되며 생산이 감소되면서 대규모 정리해고가 단행되게 된다.

정리해고제(整理解雇制)란 사용자가 계속되는 경영악화 방지,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조정과 기술혁신, 사업부문의 일부 폐지 및 기업 인수합병(M&A) 등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는 경우 종업원을 해고할 수 있도록 합법화한 제도이다. 기업주는 정리해고에 앞서 근로자 보호를 위해 해고 회피노력을 다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 물론 해고 60일 전에 해당자에게 통보하고 노동부에 신고해야 한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고용구조가 파괴되고,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지게 됐다. 정리해고제는 근로자에게 일방적인 불리한 제도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에게 구제금융을 주는 전제조건으로 노동시장 개혁을 요구했다. 외국인들은 한국에서 기업하기 어려운 이유 중의 하나로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꼽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 바로 정리해고제다. 그야말로 경영상의 불가피한 이유로 근로자의 해고사유가 발생하면 근로자 대표등과 사전협의를 통해 해고를 할 수 있게 만든 제도다. 그렇다고 해서 해고된 근로자들이 아무렇게나 방치되지 않는다. 고용보험을 통해 일정기간 동안 임금의 일부를 보호받는다. 그래서 기업이 경쟁력을 회복해 정상 가동되면 해고했던 근로자들을 우선적으로 재고용하게 된다. 일부 근로자들의 희생으로 나머지 근로자들을 살리고 궁극적으로 노사 모두가 사는 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정리해고제는 근로자들에게 매우 불리한 제도임에는 분명하다. 그 이유는 사용자가 정리해고제를 악용하면 직장의 안정성이 저해될 것이기 때문

184) 참조: 정성진 외, 신자유주의의 구조조정과 노동체제의 변화, 75.

이다. 물론 근로자를 해고하기 전에 근로자 대표들과 사전에 협의를 해야 하고, 특히 사용자는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한 연후에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해야 하는 정리해고제의 법규가 있지만, 일부 악덕 기업주들이 정리해고제를 악용한 사례도 있고 해당 기업주가 처벌을 받은 경우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정리해고제가 악용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정규직 노동자는 단일 사용자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항구적인 고용계약을 맺고 전일제로 일하는 고용 관계로서 노동법상의 해고보호와 정기적인 승급이 보장되며 고용관계를 통한 사회보험 혜택이 부여되는 반면, 비정규직 노동자는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모든 고용형태, 즉 임시계약직, 일용직, 파트타임, 파견, 용역, 개인 도급자, 재택근로자, 자영노동자 등이 포함되며, 해고보호도, 정기적인 승진도, 사회보험 혜택도 받지 못한다.

2006년 2월 28일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법이 제정되었다. 기간제 및 파견직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각각 2년으로 하고, 기간제의 고용기간 만료 후 무기근로계약으로 고용을 의무로 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계약직 근로자 사용 사유기간, 불법 파견 시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비정규직법을 둘러싼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3.4. 구조조정에 의한 실업에 대한 교회 가르침

구조 조정으로 인하여 오늘날 많은 노동자들은 빈곤 속에서 노동을 하게 되며, 노동의 희생을 강요당하기도 하고, 실업의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¹⁸⁵⁾ 새로운 발전과 기술들은 사회발전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지만, 부유한 국가들이나 소수 권력 집단의 손에 집중된다면 결국 실업의 원인이 된다.¹⁸⁶⁾ 특히 개발도상국에서는 실업문제가 주로 높은 인구 증가율과 젊은 층이라는 사실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인 데 비해서, 고도의 경제적 발전이 된 국가에서는 노동원이 감소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그로 말미암아 취업의 기회가 오히려 줄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인간이 지녀야 할 자부심을 상실하는 굴욕감으로 인해 개인과 사회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¹⁸⁷⁾ 가정은 노동을 통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으며, 노동에 의해 이

185) 참조: 어머니요 스승, 13항.

186) 참조: 간추린 사회교리, 283.

루어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노동은 가정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필수조건이다.¹⁸⁸⁾ 그러므로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이 일자리가 없는 상태인 실업은 어떠한 경우라도 최악이며, 특히 가정을 파괴하는 최악이다. 실업은 가정에 물질적 정신적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¹⁸⁹⁾

실업은 실제로 사회의 재앙이 될 수 있다. 특히 실업은 젊은이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¹⁹⁰⁾ 실업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서, 고용주들은 다양한 종류의 노동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마련하여야 하며, 노동을 올바르게 합리적인 방법으로 조직하는 데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¹⁹¹⁾

산업이 발전하면 할수록 직장을 얻지 못하고 실업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욱 증가될 것이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책임감을 느끼고 마음과 힘을 다해서 투자, 생산조직, 상업, 교육면에서 효과적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¹⁹²⁾

187) 참조: 사회적 관심, 18항.

188) 참조: 노동하는 인간, 10항.

189) 참조: 간추린 사회교리, 294.

190) 참조: 같은 책, 287.

191) 참조: 노동하는 인간, 18항.

192) 참조: 팔십주년, 18항.

4. 긴축정책

긴축정책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려고 하거나 국가 재정의 기초를 튼튼하게 하기 위하여 신규사업을 벌이지 않고 종래 하던 사업까지도 중단하고, 국고금의 지출을 줄이는 것이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거나 물가가 불안정할 때, 일시적으로 경기를 후퇴시키기 위해서 정부는 긴축정책(緊縮政策)을 쓴다. 구체적으로 국가의 예산을 편성하고 실행함에 있어, 지출을 삭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고, 지출을 억제하며 공채를 정리하게 된다. 여기서는 긴축정책과 복지에 대하여 알아보고 그 결과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4.1. 긴축정책과 복지

대부분의 국가에서 복지제도는 공적 부조, 사회보장, 취업관련제도로 이루어져 있다. 공적 부조는 절대 빈곤계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으로서 빈곤정책에 해당된다. 사회보장은 질병, 노령, 의료, 실업보험으로 구성되고, 여기에 국가에 따라 소득보전정책이 부가된다. 취업관련제도는 노동시장정책으로서 직업훈련, 재적응, 취업알선 등의 제반 정책적 수단을 포함한다.

세계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각국 정부는 구조조정을 서두르면서, 재정적자의 축소와 정책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긴축정책을 실행한다. 이는 국가경쟁력 고양(高揚)이라는 목표를 위한 것이지만, 그 대가로 실업, 고용불안정, 소득불평등, 신기술 적응이라는 긴장을 임금생활자에게 전가한다. 그리하여 각국 정부는 임금 생활자를 보호하는 각종 시장제도와 복지제도를 근본적으로 수정하고 있다.

긴축정책에는 통화량을 줄이는 통화 긴축방법과 정부지출을 줄이는 재정 긴축 방법이 있다. 긴축정책을 쓰면 경기가 침체되어 대량실업이 발생되고 노동자와 노조의 힘이 약화되며 경쟁력이 없는 기업은 도산될 수 있다.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 노동자는 해고되거나 노동 강도가 높아지게 되지만, 정부는 이 문제를 크게 생각하지 않는다.

4.2. 긴축정책의 영향

신자유주의 이론에 충실한 자유 시장론자들은 세계화가 온 인류에게 번영과

기회균등을 가져다줄 것처럼 주장할지 모르지만, 인간보다는 자본을 중요시하는 신자유주의의 본질상 그것은 신기루와 같은 환상일 뿐이다. 왜냐하면 세계화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오늘날의 현실은 오히려 시장 경쟁력이 없거나 취약한 계층의 희생과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의 대처 수상은 경제의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강력한 긴축재정정책을 실행하였다. 삭감된 정부 지출내역은 주로 공공의 목적을 위한 주택보조금, 교육비, 환경관련 예산, 국유기업보조금 등의 사회복지차원의 프로그램들이었다. 그러나 이렇게 긴축재정으로 노동자들의 힘은 약화되었으며, 1980년도에 167만 명이었던 실업자가 1983년도에는 300만 명이 넘게 되었다.¹⁹³⁾

미국의 레이건도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자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긴축정책을 실행하였다. 그 결과 주로 300억 달러에 달하는 최저생계보장 기금 등 사회복지부분의 정부예산이 크게 삭감되었다.¹⁹⁴⁾ 이렇게 신자유주의에서 요구하는 국가의 긴축재정을 받아들인 나라들은 공공의 목적을 위한 사회복지분야에서 정부의 지출을 삭감해야했다.¹⁹⁵⁾

자본과 노동의 자유로운 유통과 모든 행위자 간의 자유경쟁을 촉진하는 세계화가 결과적으로는 임금생활자에 대한 제도적 보호 장치를 약화시켜 복지제도의 축소와 해체를 초래하게 된다.

임금 생활자가 겪는 고통은 자못 심각하다. 세계화는 이미 구축된 복지제도의 기반을 침식하여,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임금 생활자들로 하여금 시장의 임의성과 냉혹성에 노출되도록 한다. 그리하여 세계의 임금생활자들이 고용불안정, 소득불안정, 실업의 위협에 직면하는 정도가 과거의 어느 때보다 한층 높아졌다. 이와 동시에 금융시장의 통합과 자본의 유연성 강화는 정부의 정책능력을 위축시켰다. 정부의 역할이 축소되고 시장기능이 중시되는 시대에 임금 생활자들은 시장 경쟁에서 생존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며, 만일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퇴출 위험을 각오해야 한다.

4.3. 복지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

경제적 신자유주의는 세계화의 시대에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복지

193) 참조: 강상구, 신자유주의의 역사와 진실, 105- 107.

194) 참조: 강상구, 신자유주의의 역사와 진실, 112-113.

195) 참조: 안병영, 임혁백,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214-218.

제도를 축소내지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주장은 사실과는 달리 모순된 것이다. 왜냐하면 세계화 자체가 국가 경쟁력의 중요부분인 재정정책의 수단을 축소시켜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인 재정정책을 필요로 하는 복지제도의 약화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세상과 사회에서 전반적인 국가의 경제성장과 발전을 꾀한다는 미명아래 복지제도 운영을 포기하거나 보류한다는 것은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소외계층의 인권과 존엄성을 말살하는 명백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모든 법과 정치제도, 그리고 국가의 일반적 성격과 행정을 오로지 사회의 변영과 개인의 복리가 자연스럽게 증진되도록 운영하는데”¹⁹⁶⁾ 전력을 기울여야 함을 강조한다. 국가의 역할은 복지증진과 인권을 위한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국가에 근본적인 기능은 시민들의 복지를 돌보는 것과 관계되는데 그것은 상호간의 계약이 보증되고 국가의 일치가 위태롭게 되지 않도록 강자와 약자 사이의 조화를 돌보아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는 경제적 영역에서 낭비를 막고 질서와 공평을 진작시킬 의무를 가진다. 때때로 국가 자신이 직접적으로 경제적 행동에 포함되기도 한다. 이것은 국가가 경제적 일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기에 “국가 지도자들은 국민의 공공복지에 유익하다고 보이는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조치는 국가전체의 이익을 고려하여 농업과 서비스 부문이 가능한 한 동일한 기간에 동일한 정도로 발전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¹⁹⁷⁾

국가는 모든 계층 사람들을 똑같이 포용해야 하기 때문에 분배정의를 준수함으로써 모든 계층 사람들을 공평하게 보살피 줄 임무가 있다.¹⁹⁸⁾ 또한 국가는 법률을 통하여 노동자들이 생산도구로 취급받지 않고, 특히 청소년, 소녀, 여성 노동자들이 해롭고 참기 어려운 환경에서 보호받고, 노동자들의 권리와 노동자들의 처우가 개선되도록 입법을 통하여 노력하여야 한다.¹⁹⁹⁾ 이 본분을 국가가 다하지 않을 때, 각 사람에게 각자의 몫이 되돌아가게 하는 정의는 손상되는 것이다.²⁰⁰⁾

공권력은 한 개인이나 소수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이들의 이익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약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들의 법적 이익을

196) 사십주년, 12항.

197) 어머니요 스승, 151항.

198) 참조: 사십주년, 34항.

199) 참조: 사십주년, 55항.

200) 참조: 새로운 사태, 24항.

주장하려고 할 때 불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공권력은 정의와 공평을 고려하면서도 사회의 더욱 약한 사람들에게 좀 더 주의를 표명해야 한다.²⁰¹⁾ 공권력이 사회의 어떤 개인이나 계급에 대해 편파성을 보이지 말고 모든 이들의 이익에 봉사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모든 이들의 이익에 봉사하는 공권력의 실천에 있어서 정의와 공평의 원리는 동시에 사회집단의 가장 약한 성원들과 가장 빈곤한 이들에 대한 배려를 국가에 요구하는 것이다.

국가는 인간의 기본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권력이 각 시민으로 하여금 용이하게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²⁰²⁾ 국가는 노동자들의 결실을 안전하게 보장해 주어야 한다. 이들에 대한 배려가 없으면, 부당한 재산증액이 확산되어 경제 질서 발전의 주요 장애물이 된다. 국가는 또한 경제 분야에 있어서 인간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감시하고 조정해야 하며 기업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국가는 독점자본들이 사회 발전에 장애를 가져오거나 인류발전을 지연시킬 때 개입할 권리도 있다. 그러나 국가는 인류를 발전시키고 이끌어갈 역할 외에, 특별한 상황에서 어떤 집단이나 산업계층들이 그들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대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공동선의 긴박한 사정으로 정당화되는 이 기능은 가능한 한 사회 집단들과 산업계층들의 고유한 임무를 계속해서 행하고, 국가의 개입 범위를 과도하게 확대하지 않으며 시민들의 정당한 자유가 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정해진 한계를 두어야 한다.²⁰³⁾

201) 참조: 지상의 평화, 56항.

202) 참조: 사목현장, 29항.

203) 참조: 백주년, 48항.

5. 노동의 유연화

신자유주의에서 드러나는 자유화 현상 중의 하나는 유연화(柔軟化)이다. 유연화는 인간의 권리를 가장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 중 자유화의 핵심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노동의 유연화는 세계화의 기치 아래, 생산, 노동, 노사관계 등을 보다 유연하게 재편성하여 경영 합리화를 꾀하려는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이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노동의 유연화의 목적과 역사적 배경 그리고 형태에 대하여 알아보고 그 결과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5.1. 목적과 역사적 배경

유연화의 목적은 노동시장 및 노동과정의 유연성을 증대시켜 고용과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데 있다. 유연화는 미국에서 창안된 ‘포드주의’라는 노동과정의 모순을 극복하고자 등장하였다. 포드주의 방식을 채택한 결과 단순한 노동 과정을 통해 생산성이 향상되어 대량생산이 가능해짐에 따라 노동자들이 높은 수준의 임금을 받기도 하였지만, 단순한 일을 반복해야 하는 노동과정은 노동자들의 소외현상을 심화시켜 결국 생산성이 떨어지게 되었고 자본가들은 다른 방식의 생산모델을 찾아야 했다.²⁰⁴⁾ 이에 등장한 것이 포스트포드주의인데, 포스트포드주의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노동자들의 창의력을 계발시키기 위해 소집단 노동이나 팀 작업, 성과급 임금제도 등을 도입해서 노동의 ‘개인적 소외’를 극복하려고 시도하였다.²⁰⁵⁾

이처럼 최근 신자유주의 흐름과 함께 노동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 중의 하나가 노동의 유연화인데, 노동시장 유연성은 노동시장의 환경변화와 수요변화에 대응하여 신속하게 고용, 임금, 근로시간 또는 노동력 숙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노동시장의 능력을 의미한다.

노동의 유연화로 인해 노동시장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 중의 하나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90년대에 비해 임금근로자에서 상용근로자의 비중은 감소하였으며, 비정규직(임시근로자+일용근로자)의 비중은 증가하였다.

204) 참조: 강상구, 신자유주의의 역사와 진실, 80-81.

205) 참조: 같은 책, 290.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상용근로자의 비중은 큰 폭으로 감소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그 이후 점차 매년 상용근로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²⁰⁶⁾ 이로써 경제침체에 상대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직이 크며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짐을 알 수 있다.

5.2. 형태

노동의 유연화에는 수량적(數量的) 유연화, 기능적 유연화, 그리고 보상적 유연화 등 여러 형태가 있다.

수량적 유연화란 기업의 수요 변동에 따라 고용 수준을 신축적으로 조절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과 실제 고용된 인력의 수를 일치시키려고 하는 정책이다. 즉 필요한 최소 수준의 노동력만을 고정인력으로 고용하고, 경기 변동에 따라 임시 또는 단기적 노동력을 탄력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이다.

수량적 유연화는 정리해고제, 계약노동제, 시간노동제 등의 고용형태의 유연화와 외부하청제, 사내하청제, 파견노동제 등의 직업의 외부화 그리고 변형 근로시간제, 변형근무일제, 교대근무제 등의 근무 형태의 유연화가 있다²⁰⁷⁾.

기능적 유연화 정책은 다기능화, 숙련형성 등의 노동능력 향상을 통해 업무 수행의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것에는 직무확대노동의 유연화, 품질의 통

206) 표-8 임금근로자 종사자지위별 취업자추이 (단위 : 천명, %)

		임금근로자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1990	10,950(100.0)	5,938(54.2)	3,171(29.0)	1,840(16.8)
1995	12,899(100.0)	7,499(58.1)	3,598(27.9)	1,802(14.0)
2000	13,360(100.0)	6,395(47.9)	4,608(34.5)	2,357(17.6)
2001	13,659(100.0)	6,714(49.2)	4,726(34.6)	2,218(16.2)
2002	14,181(100.0)	6,862(48.4)	4,886(34.5)	2,433(17.2)
2003	14,402(100.0)	7,269(50.5)	5,004(34.7)	2,130(14.8)
2004	14,894(100.0)	7,625(51.2)	5,082(34.1)	2,188(14.7)
2005	15,185(100.0)	7,917(52.1)	5,056(33.3)	2,212(14.6)
2006	15,551(100.0)	8,204(52.8)	5,143(33.1)	2,204(14.2)

207) 참조: 강수돌, 경영과 노동, 한울 아카데미, 2002, 90.

제, 유지, 조정기능까지 통합하는 직무 충실화, 그리고 주기적 순환근무제인 직무교대정책이 있다.²⁰⁸⁾ 그러나 노동력의 수량적 유연화를 위해서 미숙련 노동자나 반 숙련 노동자를 최소화하면서도 그 저항을 무력화하고, 노동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숙련을 다양화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기능적 유연화이다. 따라서 기능적 유연화와 수량적 유연화는 상호 분리된 것이 아니다. 전자는 후자를 확보하기 위한 전제이면서 동시에 수량적 유연화의 효과를 증대시키는 요인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최근 기업들은 회사의 일부 사업부문을 분리해 별개의 회사로 만들거나, 전직(轉職), 출향(出鄉), 배치전환(配置轉換), 하청, 용역, 그리고 중심 업무에만 집중하면서 중요도가 떨어지는 업무는 외부에 위탁하는 아웃소싱(outsourcing) 등을 채택함으로써 수량적 유연성을 극대화하거나 혹은 위험 부담을 외부로 전가한다.²⁰⁹⁾

보상적 유연화는 개인이나 집단의 능력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능력제와 성과급제, 연봉제, 시간급제 그리고 보너스 차등지급이나 이익배분 등을 말한다.²¹⁰⁾ 이것은 노동자간 경쟁을 강화시켜 노동자의 개별화를 촉진하는 방향에서 임금체계를 개별 노동자의 생산성에 연계시키는 것이다.

5.3. 노동유연화의 영향

노동의 유연화는 노동하는 인간과 그들이 수행하는 노동을 자본축적에 용이하도록 적용시켜 가는 고도화된 전략 중의 하나이다. 즉 인간의 필요에 따라서 노동의 내용과 방법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본의 필요에 따라 인간과 노동이 구조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노동의 유연화를 통해서 고능력, 고도기술을 추구하는 신자유주의적 경제는 인간과 노동을 자본축적의 도구로 추락하게 된다. 노동의 유연화는 구체적으로 노동자들에게 매우 큰 영향을 끼친다. 경제적 측면에서 각각의 분야에 유연화가 강화되는 것은 곧 노동자의 힘이 약화되는 것을 의미하며, 유연화의 강화는 곧 바로 노동자에 대한 공격을 의미하기 때문이다.²¹¹⁾ 여기서는 노동의 유연화 형태 중에서 근로자 파견제와 변형근로제, 그리고 정리해고제와 시간제노동이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를 살펴보겠다.

208) 참조: 강상구, 신자유주의의 역사와 진실, 92.

209) 참조: 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조운동논문소, 신자유주의 세계민중운동, 한울, 1998, 243-247.

210) 참조: 강수돌, 경영과 노동, 94.

211) 참조: 같은 책, 293.

5.3.1. 근로자파견제의 영향

근로자 파견제는 1980년대 들어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서비스 산업의 진전, 사무자동화 등에 따른 전문직 노동수요의 증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상승, 기업의 합리화 추진 및 이에 따른 고용 유연성의 증대 노력 등의 요인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불법이기 때문에 정확한 실태는 파악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경우 파견 근로자 수는 대개 20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 업계에서는 청소 및 경비용역까지 합쳐 약 60만 명을 상회한다고 주장한다.²¹²⁾

근로자 파견제는 새로운 업무의 확대에 따라 새로운 고용기회창출이나 노동수급기능의 원활화를 가져오긴 하지만, 기존 고용관계의 안정성을 파괴시킨다는 단점이 있으며, 파견근로자는 용역계약이 해제되면 언제라도 해고되므로 고용이 극히 불안정하다. 또한 저임금 및 열악한 근로조건 등의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고, 노사관계에도 영향을 미쳐 노동운동을 억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이들은 사용업체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기에 노동조합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노동 조직물을 떨어뜨려 노동자의 단결을 저해하게 된다.²¹³⁾

5.3.2. 변형근로제의 영향

변형근로제는 과거 근로기준법에 신설되었다가 악법 조항으로 많은 비판을 받아 삭제된 적이 있다. 변형근로제는 근로시간을 주·월·년 단위로 정해 법적 근로시간 내에서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기준 근로시간 내에서는 하루 및 주당 근로시간을 임의로 조정하고 연장근무시간, 잔업수당을 안 주어도 되는 제도이다. 따라서 자본가 입장에서는 근로 기준법에 구애받지 않고 추가임금 부담 없이 일을 집중적으로 시킬 수 있으나,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실질임금이 저하되고 업무량이 많은 시간대에 일을 집중 배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노동 강도가 강화되며, 시장 상황과 기업의 요구에 따라 불규칙적인 생활이 강요되므로 건강상의 문제도 발생하게 되고 조화로운 가정생활도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다.²¹⁴⁾

212) 참조: 강수돌, *경영과 노동*, 한울 아카데미, 291.

213) 참조: 같은 책, 292.

기존 근로기준법 32조에는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전 예고를 거쳐 근로자를 해고할 수도 있는 제도적인 길이 있지만,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 해석하기가 어려워 대법원의 판례에 의존하고 있다. 1997년에는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의 사유와 절차를 명시하여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제한하되 정리해고제는 합법화하였다. 이로써 기업의 입장에서는 노동자의 생사여탈권을 장악하게 되었으나,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되었으며, 사양산업의 정리, 업종 전환 등의 과정에서 기업은 대규모 해고를 합법적으로 보장받게 되어 대량 실업이 발생하게 되었다. 또한 근로자 파견제와 연계되어 해고 대신 파견 근로자로 전락될 수도 있다.²¹⁵⁾

자본가의 입장에서는 시간제 노동자를 사용하여 인건비도 절감하고 노동자 사이에 경쟁심과 경계심을 불리 일으켜 생산성향상과 지배구조를 공고히 할 수 있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그들의 평균 노동시간이 시간제 근무가 아니라 전임제 노동을 하고 있으면서도 초과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고, 정규직 노동자와 동일한 작업을 수행하면서도 월차나 연차 휴가는 물론 사내 복지 혜택 등에서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 또한 고용안정도 보장되지 않는 데다가 기업의 주인이기보다 손님으로 취급받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인간적인 많은 갈등 속에서 지내게 된다.²¹⁶⁾ 이처럼 노동의 유연화를 살펴볼 때, 기업들은 경쟁과 변화의 시대에 유연하게 적응하여 경쟁력을 강화해야만 하고, 노동자들은 생산성과 임금 등의 여러 면에서 살아남기 위한 경쟁에 빠져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3.3. 정리해고제의 영향

정리해고에 대한 기준은 대부분 대법원의 판례에 의존하고 있다. 대법원은 정리해고의 정당한 요건으로 첫째, 해고를 하지 않으면 기업경영이 위태로울 정도의 급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을 때, 둘째, 신규채용금지, 자산매각 등 해고 회피를 위한 사전노력을 했을 때, 셋째, 해고자 선별을 위한 합리적, 공정한 정리기준 설정이 되어있을 때, 넷째, 노조와의 성실한 합의를 할 때 등의 4가지 요건을 제시한다. 그러나 대법원도 90년대 초 까지만 해도 정리해고의

214) 참조: 강수돌, *경영과 노동*, 한울 아카데미, 294-295.

215) 참조: 같은 책, 296.

216) 참조: 같은 책, 298.

요건을 엄격히 적용해 오다가 90년대 중반 이후 완화 방향으로 흘러감으로써, 정리해고는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타당성이 있으면 정당하다는 식으로 불투명하게 넘어가고 있다. 그러므로 정리해고를 통하여 기업은 노동자의 생사여탈권을 더욱 강력하게 장악함으로써 노동자의 생존을 위협하고 사양산업의 정리, 업종전환 등의 과정에서 대규모 해고를 합법적으로 보장함은 물론 대량해고 또는 실업사태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5.3.4. 시간제노동의 영향

기업 측 전략에서는 시간제 노동자를 사용하여 인건비를 절감하고 노동자 사이에 말 없는 경쟁심과 경계심을 불러 일으켜 생산성 향상과 지배구조를 공고화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파트 타임제의 확대는 여성 전체에게 그리고 노동자 전체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초래한다. 즉 파트타임제가 여성노동력을 저임금과 불완전 고용층, 노동인권 소외층으로 묶어두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결국 이 제도가 성별 분업구조를 유지하는데 일조하게 된다는 점이다. 나아가 시간제 노동력의 확산은 노동자들의 조직화를 어렵게 하고 전체 노동자들이 공통된 이해를 결지시킬 수 있는 물질 토대를 약화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파트타임제가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자기가 일하고 싶을 때 조금만 일하면 되는 장점도 있지만, 이러한 이상적인 파트타임제가 이뤄지려면 첫째 노동시간은 짧아져야하고 그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 할 수 있어야 하며, 둘째 작업 시간을 스스로 선택해야하며, 셋째 모든 노동자들이 기본적 노동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양육 강식의 생존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각 기업들은 경영관리 및 생산과정의 혁신 그리고 노사관계와 조직문화의 혁신을 빠른 속도로 진행시키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의 인권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5.4. 노동의 유연화에 대한 사회교리적 판단

경제적 자유주의의 전략 중의 하나는 노동의 유연화이다. 노동의 유연화란 경직된 노동시장에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생산요소를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자본의 수익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이다. 이로써 불안정하고 변동하는 경제상황에 맞추어 노동인력규모나 노동시간, 임금 등을 조절

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현대 신자유주의는, 인간이 주체요 만드는 자이며,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생산과정 전체의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물질과 동등하게 생각하여 물질적 도구의 하나로 취급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오늘날 신자유주의 상황에서 노동자 자신은 소외당하고 억압당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처럼 가치가 전도된 상황 속에서도 노동의 주관적 차원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하느님의 모습대로 만들어진 인간의 주체성은 결코 인간에게서 제거될 수 없다. 노동현장은 하느님이 현존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러한 노동의 유연화에 대하여 가톨릭교회는 무엇을 가르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5.4.1. 공동선의 원리가 실현되어야 한다.

자본가들이 자본의 수익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동자들에게 공동선을 고려하지 않고 노동을 강요할 때 인간의 존엄성이 노동의 유연화를 통하여 파괴된다.²¹⁷⁾ 공동선은 자본가들, 노동자들 모두에게 선이 될 때 이루어질 수 있다. 재화는 기계나 연장의 도움을 받거나 맨손으로 수고한 노동자의 손에서 생기는 것이며, 노동이란 사람의 정신과 신체의 힘을 자연의 자원에 적용하는 것이다. 자연의 자원이 인간의 필요에 적용될 때 올바른 질서가 지켜져야 한다. 그러므로 노동과 자본 사이에는 협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 사람은 타인 없이는 속수무책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본과 노동의 협력으로 얻어진 것을 어느 한편에만 귀속시키는 것은 전적으로 그릇된 것이며, 또한 어느 한편이 다른 편을 노략질하고 모든 이익을 독점한다는 것은 정의에 크게 어긋나는 것이다.²¹⁸⁾ 그러나 자본은 과대한 이익을 착복하였다. 그것은 모든 생산물과 이윤을 차지하고, 노동자들에게는 겨우 노동력을 회복하고 노동자 계급으로 살아남는 데 필요한 최소한만을 남겨주었다. 냉혹한 경제 법칙 때문에 모든 부는 부자들 수중으로 축적될 수밖에 없고, 노동자들은 영원히 빈곤에 머물거나 최소한의 생존만을 유지하도록 하였다.²¹⁹⁾ 그러므로 인간의 부와 재산을 분배하는 모든 방식이 하느님께서 뜻하신 목적에 충분히, 더구나 적합하게, 맞는 것이 되기 위해서 재화가 모든 사람에게 공동선에 맞게 알맞게 분배

217) 참조: 사십주년, 34항.

218) 참조: 사십주년, 24항.

219) 참조: 사십주년, 25항.

되어야 한다.²²⁰⁾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마땅한 몫을 받아야 하며, 창조된 재화의 분배는 공동선과 사회 정의의 요청에 합치되도록 해야 한다.

5.4.2. 연대성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노동이란 인간에 의해 이루어지는 육체적, 정신적인 행위이며, 인간이 할 수 있는 수많은 행위들 가운데 노동으로 인식될 수 있고, 인식되어야 하는 인간의 활동이다. 인간은 노동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으며, 노동은 다른 피조물들과 인간을 구별하는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노동은 인간과 인간성을 나타내는 특별한 표시이며, 인격체로 이루어진 공동체 안에 움직이는 개개인의 인격체를 나타내는 표시로서 인간의 내면적 특성을 결정하며, 인간의 본질 자체를 형성한다.”²²¹⁾

인간의 노동은 창조주 하느님의 창조 행위를 반영하는 것이며,²²²⁾ 이런 의미에서 인간의 노동은 자신의 인간적인 역량의 범위 안에서 창조주의 활동에 참여하고 계속 발전시키며 그 창조활동을 완성시킨다.²²³⁾ 또한 인간은 노동을 통해서 창조주로부터 위임받은 세상을 다스리고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모상으로서 정체성을 실현해 나간다.²²⁴⁾

“하느님의 소명에 따라 창조주 하느님의 활동에 구체적으로 참여하는 행위인 노동은 참으로 인간적인 것이며 인간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²²⁵⁾

인간은 자신의 고유하고 합당한 영역에서 다양한 노동을 통하여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고 형제들에게 봉사하며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여 하느님의 창조사업을 완성하도록 협조하게 되는데,²²⁶⁾ 바로 여기에서 노동이 지닌 두 가지 성격, 즉 노동의 개인적 성격과 사회적 성격이 드러난다. 이러한 인간노동의 사회적이고 개인적인 성격이 간과된다면 노동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²²⁷⁾ 자본은 “인간이 자의로 쓸 수 있는 자연자원만이

220) 참조: 사십주년, 27항.

221) 노동하는 인간, 서문.

222) 참조: 노동하는 인간, 4항.

223) 참조: 노동하는 인간, 25항.

224) 참조: 노동하는 인간, 9항.

225) 노동하는 인간, 4항.

226) 참조: 사목현장, 67항.

227) 참조: 사십주년, 31항.

아니라 인간이 이를 자기의 필요에 따라 변형시키는, 어떤 의미에서는 자원을 인간화시키는 수단의 총체도 포함”²²⁸⁾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본은 “인간의 노동이 이룬 역사적 유산의 결과”²²⁹⁾이기에 축적된 노동이라고 할 수 있다. 축적된 노동으로서 자본은 노동의 주체인 인간과의 관계에서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²³⁰⁾ 자본의 이러한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기능을 고려하면 자본을 철폐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올바르게 형성하고, 관리하고, 증식시킬 필요가 있다. 자본 증식의 주요 원천인 잉여소득은 유익한 재화를 생산하는 노동의 기회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투자되거나, 자본소유자가 자신의 기업을 경영하여 새로운 형태의 노동을 창출하고 가치증대를 추구하며 여기에서 나오는 결실이 노동자들에게 공정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쓰여야 한다.²³¹⁾

이런 점에서 자본가들은 자기 배당금의 과도한 증가만을 추구할 때 비난을 받아야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현명하고도 건전한 방향으로 자본을 이끌어 간다면 이는 인류를 위한 사회사업을 하는 것이다. 그들은 자본투자를 통해 최대한 가능한 수익만을 찾지 말고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노동자의 인격적 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²³²⁾

인간은 하나의 인격체이므로, 노동의 주체가 된다. 인간 노동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노동의 종류가 어떤 것이냐에 있지 않고 노동을 하는 사람이 하나의 인격체라는 사실에 있다. 즉 아무리 인간이 일할 운명을 타고났다 해도, 노동이 인간을 위해 있는 것이지 인간이 노동을 위해 있는 것은 아니다. “노동의 목적은 항상 인간인 것이다.”²³³⁾ 따라서 각각의 노동은 노동의 주체, 즉 일을 성취하는 개인인 그 인격체의 존엄성을 척도로 삼아 평가되어야 한다. 따라서 자본가와 노동자가 함께 연대하도록 해야 한다.

5.4.3. 보조성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모든 어려움과 장애를 극복하기 위하여 자본가들과 노동자들은 함께 공리하고 노력해야 하며, 서로간의 상호 이해와 그리스도교적 화합의 정신으로 서로

228) 노동하는 인간, 12항.

229) 노동하는 인간, 12항.

230) 참조: 사십주년, 43항.

231) 참조: 사십주년, 23항.

232) 참조: 교황청 신앙교리성, 자유의 자각,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4, 87항.

233) 노동하는 인간, 6항.

연대해야 한다.²³⁴⁾ 만일 인간 사회가 진정 사회적이고 유기적인 조직체가 되지 못하고, 노동이 사회적이고 법적인 질서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다면, 또한 상호 의존 관계에 있는 인간 노력의 다양한 형태가 상호 보완과 조화 가운데 결합되지 않는다면, 특히 지식과 자본과 노동이 공동보조로 결합되지 않는다면, 인간의 수고는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²³⁵⁾

노동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다. 노동자도 그 존엄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노동은 일종의 상품처럼 사고 팔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의 수요 공급은 노동시장에서 인간을 두 진영 같은 두 계급으로 나누고 있으며, 양편의 거래는 이 노동시장을 두 개의 군대가 전투에 참가한 싸움터로 바꿔놓고 있다. 사회를 파멸로 이끄는 이 심각한 무질서에 대한 개선책을 가능한 한 시급히 찾아야 한다. 그러나 이 대립이 제거되고, 사회 유기체의 잘 정돈된 지체들이 생겨나지 않는다면, 어떤 완벽한 개선책도 문제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노동 시장에서 그들이 차지한 위치에 따르지 않고, 그들이 사회에서 수행하는 서로 다른 직능에 따라서 사람들을 한데 묶는 직능 집단이 생겨나야 한다.²³⁶⁾ 그러므로 자본가와 노동자의 관계는 그리스도교 애덕 안에서 교환정의의 법칙에 따라 규제되어야 한다. 자유경쟁과 특히 경제적 독점은 일정하고 적절한 한계 내에 있어야 하며 국가의 권한에 속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공권력의 효과적인 통제 하에 놓여 져야 한다. 국가의 공공기관은 모든 인간 사회가 공동선의 요청, 즉 사회정의의 규범에 합치하도록 해야 한다. 만일 이렇게 된다면 경제체제도 반드시 건전하고 올바른 질서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²³⁷⁾

234) 참조: 사십주년, 33항.

235) 참조: 사십주년, 31항.

236) 참조: 사십주년, 36항.

237) 참조: 사십주년, 43항.

6. 요약

어떤 사회 현상들이 경제적 신자유주의로 인하여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현대의 경제적 신자유주의는 시장경제와 자본의 자유화와 절대화를 위해 국가 기능의 최대한 축소를 요구한다. 그러한 요구에 부합하는 국가의 기능축소는 국영기업의 민영화, 기능축소에 따르는 긴축재정을 위한 복지사업의 후퇴, 그리고 노동의 유연화 등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과 현상들로 말미암아 대다수의 노동자들과 가난한 이들이 자본과 노동의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관계 속에서 인간다운 삶의 기본적인 요소들을 위협받고 있다. 더욱이 자본과 자본 간의 관계 속에서 많은 이들이 자본의 노예로 종속되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무시당하면서 무한경쟁 속에서 상품으로 전락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신자유주의의 자유경쟁이라는 맥락 아래 경쟁력이 있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무한 경쟁의 논리 때문에 빚어지고 있다.

특히 신자유주의는 국가와 사회질서를 최대한 시장 경제적 관계로 재편하고 사회의 모든 영역을 자본의 무한 경쟁 논리에 종속시키려는 현대 자본주의 이념이다. 시장논리를 사회 정의의 논리보다 우위에 두고 자본을 투자하는 개인과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효율성만 쫓는다.

결국 강자의 약자에 대한 지배 이데올로기를 정당화시키고 있다. 그런데 경제적 신자유주의는 자본과 시장경제에 대한 물신숭배로 이어져서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세계화와 구조조정의 이론적 토대가 되고 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는 무엇보다도 시장경제에 대한 절대적 맹신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자유화, 세계화, 물신화로 이어져 결국 인간의 삶을 비참하게 만든다. 경제란 물질적 재화의 생산·분배·소비의 행위·과정 및 그것을 통하여 형성되는, 사람과 사람의 사회관계의 총체이다. 신학적으로 경제란 하느님의 창조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며 인간에게 봉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가 하느님의 창조활동에 참여하는 것이고 인간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하는데, 오늘날 경제체제를 지배하는 경제적 신자유주의는 인간에게 봉사하기보다 오히려 자유경쟁을 통하여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심각한 경제적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경제를 지배해야 할 인간과 국가,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과 가난한 국가가 오히려 경제에 예속되고 있다. 교회는 자유주의 경제체제가 목적만을 강조함으로써 인간의 창조성과 인격성을 위협하는 모든 것에 대

해 반대를 표명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유주의 사조에 대해서 지혜로운 판단을 내려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또한 개인의 자유를 무제한 격찬하는 자유주의에 동의할 수 없다. 자유주의는 자기 이익과 권력만을 찾으라고 충동한다. 자유주의는 경제적 효율성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연대성에 대한 배려와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²³⁸⁾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의 생산체제에서 전적으로 착취당하고 있고, 새로운 방법으로 생산되고 새로운 요청에 제대로 부응하는 상품들의 경쟁에 맞설 수 없기 때문에 빈곤하게 살고 있다. 결과적으로 인간에 대한 사물의 지배와 더불어 인간적 폐해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불행하게도 제 3세계의 대다수 주민들은 그러한 상황에서 살고 있다. 국제적 수준에서 상호간의 일반적 교역의 관계를 가질 수 있었던 나라들은 변형했지만, 고립된 나라들은 반대로 침체와 불경기에 빠졌다.

교회는 공동선이 부당한 자유경쟁을 피하도록 요구하고 있음을 지적한다.²³⁹⁾ 더 나아가 자유경쟁과 특히 경제적 독점은 일정하고 적절한 한계 내에 묶여 있어야 하며, 국가의 권한에 속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공권력의 효과적인 통제하에 있어야 함을 교회는 강조한다. 따라서 국가의 공공기관은 모든 인간사회가 공동선의 요청, 즉 사회 정의의 규범에 합치하도록 해야 한다.²⁴⁰⁾

모든 경제활동을 지배할 수 있는 법적·사회적 질서가 수립되어야 하고, 사회애가 이 질서의 혼이 되어야 한다. 이 질서를 효율적으로 보호하고 신속하게 옹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국가는 자신의 본분이 아닌 것들에게서 해방될 때, 국가 본연의 의무를 보다 더 쉽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각국이 대체로 상호의존하고 있고 서로의 도움이 필요하므로, 각국이 공동협약과 노력으로 사려 깊은 협정과 제도를 통하여 건전한 경제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다.²⁴¹⁾

238) 참조: 교회와 경제 자유주의, 추교윤(역), 37

239) 참조: 어머니요 스승, 80항.

240) 참조: 사십주년, 43항.

241) 참조: 사십주년, 37항.

제 3장 세계화 현상과 사회교리적 판단

일반적으로 세계화란 지리적·정치적·경제적·문화적으로 구분되어 있던 세계가 그러한 구분이 갖는 의미나 중요성을 상실한 채 하나의 생활공간이자 공동운명체로 바뀌어 가고 있는 현상을 말한다.²⁴²⁾ 이제 세계 경제는 더 이상 국민이나 국가가 아닌 자본 그 자체를 단위로 하는 국경 없는 경제논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시장은 국가의 경계를 넘어섰고, 경제활동은 국제적인 단일 공간 위에서 일어나면서 무국적활동이 되어 간다.

여기서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의미와 역사적 배경, 원인에 대하여 알아보고, 세계화의 진행과정과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과 결과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세계화의 의미와 역사적 배경

오늘날 세계는 의사소통의 다양한 형태들이 하나의 통신망 속에서 전 지구를 단일화 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 경제, 문화 및 정보교환의 영역 등 모든 사회의 영역에서 하나의 지구촌을 형성한다.²⁴³⁾ 이러한 때 선진국의 신자유주의는 1970년대에 이르러 경제 불황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그 구조적 불황의 부담을 자국 및 제 3세계의 민중에게 전가시켜 해결하려는 세계화의 길을 재촉하게 되었다.²⁴⁴⁾ 많은 나라에서 자본주의가 심각한 구조적 불황에 빠지게 되었고, 케인즈주의적 전략의 유효성이 의문시되었으며, 포드주의적 축적체제의 한계를 실감하게 되었다. 이에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고 새로운 이윤창출의 기회를 모색하기 위하여 세계화가 출발하였다. 따라서 세계화는 선진자본의 유리한 조건으로 매우 빠르게 전개되었다.²⁴⁵⁾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국제적인 자본축적체제의 구축, 시장의 범지구적 통합을 시도하기 위해서 각종 정치적·제도적 장벽들을 철폐하였다. 그 결과 이데올로기로서의 시장 만능주의가 다시 부활하였으며, 국가 주도의 실패에 대한 만병통치약으로서의 시장이 다시 부각되었다. 특히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탈규제, 자유 시장, 개방무역이라는 자유주의 정책들을 통해 국가의 개입을 최

242) 참조: 박길성, 세계화: 자본과 문화의 변동, 사회비평사, 1996, 59.

243) 참조: 같은 책, 23-24.

244) 참조: 김세균 외, 자본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62.

245) 참조: 박길성, 세계화: 자본과 문화의 변동, 28.

소화하고, 경제적 국경을 철폐함으로써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의 자본들을 무한히 증식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여기서 자본의 개념은 국제 거대자본을 의미하는데, 1960년대 이후 이 자본은 이윤율의 급격한 저하에 봉착하게 되었고, 1971년 브레튼우즈 체제²⁴⁶⁾의 고정환율제가 붕괴되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하지만 1980년대에 이르러 국제 금융자본은 정보통신 혁명에 힘입어 산업자본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독자적인 운동성을 확보하였으며, 보다 더 큰 수익을 쫓아 자본을 자유롭게 이동하기 위해 그리고 활동 공간을 확대하기 위해 민족 또는 국가 단위의 경제규제나 장벽을 허물고 전 세계적 차원에서 통일된 시장을 형성하였다. 이것이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이며 이 세계화로 말미암아 단일시장으로 구축되고 있는 세계시장 안에서 기업 간의 경쟁이 크게 격화된다. 이전에 민족 또는 국가 단위 안에서 행해졌던 경쟁은 국가의 일정한 법적·정책적 규제나 보호를 받았으나, 이제 세계의 단일시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쟁을 세계적인 차원에서 규제하거나 통제할 기구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자본력이나 경쟁력이 떨어지는 수많은 기업들이 파산하거나 미국이나 서구의 대자본에 종속되거나 흡수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246) 브레튼우즈 체제란 전후 세계금융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제2차 세계대전 중인 1944년 1월 미국 뉴햄프셔 브레튼우즈에서 열린 회의에 의해 만들어진 국제 경제체제를 가리키는 말이다. 44개 국가가 참가했으며, 미국이 달러 환율을 금에 고정시키고 다른 나라들이 달러에 환율을 고정시키는 금 본위제에 합의한 것이 회의의 주요내용이다. 또 외국의 원조가 시급한 나라에게 공급되는 장기자본을 마련한 세계은행(IBRD)과 환율안정을 위해 국제수지 불균형을 시정하는 데 필요한 금융지원을 하는 기구로 국제통화기금(IMF)을 설립키로 합의했다. 1945년 각국의 환율제도를 감시하는 IMF가, 1946년 저개발국의 산업발전을 지원하는 IBRD가 설립됨으로써 브레튼우즈 체제가 확립됐다. 그러나 1970년대 미국이 오일쇼크 등으로 금 보유량이 줄어들자, 금본위제를 폐지하고 변동환율제를 채택하여 애초의 브레튼우즈 체제는 사실상 붕괴되었다.

2. 세계화 현상의 원인

자본이 신자유주의를 바탕으로 세계화를 이루려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선진 국가들이 자본의 위기를 맞이했기 때문이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은 대량 생산 방식인 포드주의를 채택하여 호황을 누렸으나, 1970년대 이후 생산성과 이윤율이 떨어져서 투자가 감소하고 시장이 위축됨으로써 자본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²⁴⁷⁾ 여기서 선진 자본국들은 신자유주의를 바탕으로 한 세계화를 피하게 된 것이다.

신자유주의를 바탕으로 한 세계화의 원인은 국제 통화제도의 붕괴로 말미암은 것이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환율의 안정화, 외환 거래의 자유화를 실현하고, 그 위에 국제 통화질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44년 7월 브레튼우즈 체제를 만들었고, 그 이후 세계 경제는 미국의 달러를 중심으로 고정환율제를 유지하기 위한 IMF 체제를 조직하였다. IMF 체제하에서는 국제 거래가 확대되면 세계 통화인 달러의 공급이 증가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미국이 달러를 세계로 유출시켜야 하는데, 1970년대 들어 미국은 민간 자본의 유출과 베트남 전쟁으로 인하여 고정환율제를 지키기 어려웠다. 이에 1971년 닉슨 대통령이 달러 가치의 불안과 국제 수지의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달러의 금 태환을 철폐하고, 모든 수입품에 대해 수입 관세 10%를 추가로 부과함으로써, 고정환율제는 유지될 수가 없었고, 마침내 1973년 모든 나라가 변동환율제를 실시하게 되었다.²⁴⁸⁾ 이로써 통화의 가치는 자유롭게 변동되었고, 각국은 독자적으로 금융 정책을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매우 역동적인 환율 변동이 나타났고, 이자율 또한 수출확대나 경제활동 촉진, 인플레이션 전이방지 등에 대한 각국의 태도에 따라 큰 변화 폭을 가지게 되었다. 이것은 높은 환율이나 이자율을 쫓는 돈의 흐름을 증대시켰으며, 이러한 제도적 변화가 컴퓨터를 비롯한 정보통신 기술의 급격한 진보와 맞물려 세계금융체제를 만들어 낸 것이다. 여기서 변동환율제 이후 전 세계를 무대로 투기행위를 나타내는 초국적 금융자본의 출현으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시작되었다.²⁴⁹⁾

이렇게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세계 각국 기업의 이윤율이 저하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이윤 창출의 출구를 찾고자 초국적 금융자본이 생겨나게 되었다.

247) 참조: 김수행 편저, 청년을 위한 경제학 강의, 1998, 114-122.

248) 참조: 같은 책, 40-42.

249) 참조: 박길성, 세계화: 자본과 문화의 변동, 274-275.

3. 세계화 현상의 특징

세계화란 경제, 정치, 사회, 문화의 영역에서 범세계적으로 국경을 초월한 상호작용, 상호침투, 상호의존의 과정으로서 파악되는 개념이다. 그중에서도 경제의 세계화가 정치, 사회, 문화 영역의 세계화를 견인해 왔다. 국경을 초월하여 사람, 물건, 돈, 기술,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움직임이 활발하게 되고, 세계적으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을 일컫는 경우가 많다. IMF는 세계화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를 내린다. 즉 세계화는 각국의 경제적 상호의존이 범세계적으로 심화되는 것이며, 그것은 국경을 초월한 재화, 서비스의 거래 및 국제 자본이동의 양적 확대와 질적 확충, 또 급속하고 광범위한 기술의 전파에 의한 것이다.

세계화에 대한 정의가 다르면 그 의도하는 바도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논의에서 합의를 얻기가 어렵게 된다. 여기에서 말하는 세계화란 재화, 서비스, 자본, 기술이 국경을 넘는 것이 점점 용이하게 되고, 상호의존의 심화를 통하여 통합된 세계경제로 향하는 과정이다. 즉 재화, 서비스무역, 직접투자, 증권투자라는 형태를 통하여 세계경제의 상호의존과 통합이 진전되는 과정이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세계화는 ‘시장의 세계화’, ‘생산의 세계화’, ‘금융의 세계화’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파악될 수 있다. 여기서는 이 세 가지 측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3.1. 시장의 세계화

시장의 세계화란 특유한 취미와 특성을 갖고 있는 각국 시장에 표준화된 제품이 공급됨으로써 하나의 세계적 시장이 창출되어 가는 과정이다. 예로써, 나이키, 쏘니,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다국적 기업이 세계 속에서 제품을 발매하여 시장의 세계화를 진전시키고 있다.

기업, 은행 등 경제주체는 이윤의 극대화, 시장의 독점적 지배, 경쟁대상의 제거 등을 도모하기 위해 의사결정의 기준을 오직 효율성에만 두고 세계적 영업활동의 강도를 유연화 시키고자 한다. 시장의 세계화를 이루기 위해서 자본의 자유로운 활동성에 대한 일체의 제약을 제거하여 유연성을 최대한으로 증대시키려고 노력한다.²⁵⁰⁾

250) 참조: 김석진, 박민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비판을 위하여, 공감, 14-16.

3.2. 생산의 세계화

생산의 세계화는 각국이 요소부존(要素賦存)²⁵¹⁾의 최적입지에서 생산을 도모하고 세계시장에 공급하는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투자자가 해외기업의 경영에 직접 참여하여 이윤을 추구하는 해외직접투자를 말한다. 이것은 기업 활동을 확장하여 자본축적범위를 세계적인 규모로 확대 발전시키려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경제는 생산의 세계화가 이루어짐으로써 단순히 상품을 교역하는 수준을 넘어 선다. 정보기술을 배경으로 자본, 경영, 기술, 인력, 문화가 하나의 묶음으로, 때로는 개별 항목으로 이동하게 되며, 더욱이 해외직접투자라는 자본의 국제적 이동으로 인하여 생산기술, 경영기술, 인력 등 이동 가능한 생산요소들이 쉽게 해외로 이전하고 현지의 생산요소들과 결합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생산·판매활동이 이루어진다.²⁵²⁾

3.3. 금융의 세계화

금융의 세계화는 자본을 보다 생산적인 분야로 유도하고 저축과 투자를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범세계적으로 자본 이동을 자유화하는 과정을 말한다. 그 결과 세계의 외국환 거래량은 경이적인 신장을 보여 왔다. 금융자본이란 본래 산업자본으로 전환되는 은행자본을 뜻했다.

오늘날에 와서는 선진 자본국에 있던 산업자본이 더 많은 이윤을 찾아 초국적 은행자본과 결합하여 활동하고, 그 결합에서 발생하는 이윤이나 부가가치를 다시 은행을 거치지 않고 현지의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함으로써, 금융자본이 세계화 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세계화된 금융자금은 환율이나 각종 조작을 통해서 크게 이익을 남기기도 함으로써, 현지 주민들에겐 고통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251) 요소부존이란 각국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산요소, 즉 각 나라가 가지고 있는 자연요소, 노동요소, 자본요소를 총칭하는 말이다.

252) 참조: 박길성, 세계화: 자본과 문화의 변동, 35.

4. 세계화의 결과와 영향

세계화는 1970년대에 영국과 미국에서 태동하여 1980년대 이후 아프리카, 동유럽, 남미, 그리고 동아시아 등으로 그 세력이 확장되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사회주의의 몰락으로 인하여 세계경제의 유일한 대안으로 받아들여졌다. 여기서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결과와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4.1. 결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어느 나라에서나 독점 자본으로의 부(富)의 집중과 소득 불평등 구조를 심화시키고 노동자, 민중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으며 노동자, 민중의 사회적, 정치적 권리들을 크게 훼손시켰다.²⁵³⁾ 미국의 경우 신자유주의가 도입된 이후 얼마간은 경제가 급속히 회복되었지만, 쌍둥이 적자로 알려진 거대한 재정 적자와 경상수지 적자가 생겨나게 되었고, 이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미국 정부는 외국 자본의 힘을 빌려서 경제를 회복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은 모순을 발생시키고 쌍둥이 적자를 해결하지 못하여 결국 불황에 빠진 경제를 근본적으로 치유하지는 못하였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빈곤을 증가시켰으며, 그 결과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켰다.²⁵⁴⁾

이러한 세계화의 추세는 세계의 대부분의 나라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 편입됨으로써, 세계의 경제가 개방되고 통합되면서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 국가 간의 경제활동 상호의존이 심화되면서 동시에 국가 간의 경쟁도 치열해져 무한경쟁의 시대가 되었다. 특히 불가항력적이고,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경제적 세계화는 탈규제, 무역과 자본이동의 자유화, 공기업의 민영화 등의 시장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신자유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자국의 정치·경제를 자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정책 자율성을 제한하며 복지국가지향을 무력화시키고, 시장의 끊임없는 확장을 추구하기 위해서 국가의 활동범위를 크게 제약하게 된다.²⁵⁵⁾

253) 참조: 김세균 외, 자본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74.

254) 참조: 박길성, 세계화: 자본과 문화의 변동, 117-119.

255) 참조: 안병영,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나마출판, 2001, 25-26.

4.2. 영향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자본과 노동 간의 상대적 관계에 영향을 미쳤다. 투자자들이나 다국적 또는 초국적 기업, 국제금융제도 등은 세계화 과정에서 이득을 보게 되지만 노동자들은 그렇지 못했다. 노동이 자본에 비해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노조의 결속력이 크게 약화됨으로써 기업과 협상이 불리한 입장이 되어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많은 나라들이 노동비용을 절감하고 노동의 유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복지정책의 감축 등 노동과 복지에 반하는 정책을 실시하게 되었다.²⁵⁶⁾

세계화는 현대 과학과 정보화 시대의 특징적 추세이다. 세계적으로 거래비용이 크게 절감되고 교역가능 상품화가 빠르게 촉진되고 있다. 정보기술 진보의 이러한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그 부작용 또한 적지 않다. 정보기술을 매개로 세계화된 경제관계에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어 빈곤층은 과거보다 더욱 소외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국내적으로 뿐 아니라 선진국-후진국간의 경제적 격차를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

경제적 세계화는 탈 국경화의 세계경제를 의미한다. 국경의 개념이 사라지고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면 생산비 차이는 경쟁력의 결정 요소가 되지 못한다. 국제무역과 그 경쟁원리로서 정태적 경쟁 우위설은 점차 빛을 잃어가고, 그 대신에 동태적 경쟁 우위설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지적능력과 과학 기술력이 약하고 정보화에 뒤쳐진 국가들은 부의 창출로부터 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또한 세계화이다.

경제에 대한 국가의 기능은 약화되고 생산체제는 공급자 중심의 대량 생산에서 소비자 선택에 따라 생산의 유연성과 신축성이 강조되는 후기 포드주의로 전환되었다. 여기에 더하여 다국적 기업들의 국경을 초월한 생산의 세계화, 기술혁신에 의한 정보화와 운송혁신과 함께 이루어지는 첨단산업화는 국가의 통제력뿐 만 아니라 조직적 노동 세력을 약화시켰다. 대신에 자본의 역량과 시장의 기능은 막강하게 되었다. 결국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정책으로 자본이 모든 것을 지배하게 되고 자본이 없는 나라와 사람들은 자본이 있는 나라와 사람들에게 종속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자본이 없는 나라와 사람들은 인간 존엄성마저 상실 당한 채 힘들게 살아가게 된다.

세계화는 그 형태가 무엇이든 빈곤을 증가시킬 수 있다. 실제로 경쟁력이

256) 참조: 안병영,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나마출판, 2001, 30.

낮은 국가들은 국제경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고, 그 결과 실업이 증가하고 불안정이 심화된다.²⁵⁷⁾ 세계화의 영향은 선진국과 개도국이 서로 대조적이다. 세계화는 선진국에만 유리할 뿐 개도국은 교역조건의 위협에 노출되며, 경제 성장이 저하될 수 있다. 세계화는 소득 불평등심화의 원인이다.²⁵⁸⁾ 오늘날 세계화는 전 세계에 걸쳐 도전받고 있다. 세계화에 대한 불만이 존재하며, 그런 불만은 정당하다. 왜하면 세계화로 인해서 일자리가 파괴되고, 생활이 불안정해지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삶은 더 나빠졌기 때문이다.²⁵⁹⁾ 세계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세계화로 인하여 가난한 이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비판한다.²⁶⁰⁾ 세계화는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다.²⁶¹⁾ 세계화에는 승자가 있으면 더 많은 수의 패자가 있기 마련이다.²⁶²⁾ 세계화의 문제는 불평등의 문제이다.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²⁶³⁾ 빈익빈 부익부를 낳고 자원을 남용하며 지역의 다양성을 무시한 채 전 지구적으로 획일적인 경제와 사회체제를 가져온다.²⁶⁴⁾

257) Marc Montouss, 100 fiches pour comprendre la mondialisation, Breal, 2006. 마르크 몽투세, 세계화의 문제점 100가지, 박수현 역, 도서출판 모티브북, 서울, 2007, 246.

258) 같은 책, 250.

259) 조지프 스티글리츠, 세계화와 그 분만, 송철복 역, 세종연구원, 서울, 2002. 419.

260) Joseph E. Stiglitz, Making Globalization work, W.W..Norton Company 2006. 조지프 스티글리츠, 인간의 얼굴을 한 세계화, 홍민경 역, (주) 북이십일 21세기북스, 파주, 2008, 72.

261) 같은 책, 76.

262) 같은 책, 448.

263) Joseph E. Stiglitz, Globalization and Its Discontents, 2002, 세계화와 사회변동,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강원대학교 출판부, 춘천, 2002. 156.

264) 같은 책, 59.

5. 세계화에 대한 사회교리적 판단

자본이 많은 나라의 기업들은 자국에서 뿐만 아니라, 타국의 국경을 넘나들며 다국적 활동을 펼치면서 오늘날 이 세계를 통합하려한다. 이 세계화는 재화의 나눔이라는 긍정적 요소가 있는 반면, 부유한 나라들과 부유한 사람들을 더 부유하게 만들고, 가난한 나라들과 가난한 사람들은 점점 빈곤하게 만든다. 여기서는 인간 삶에 매우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세계화에 대하여 사회교리적 판단을 시도해 보겠다.

5.1. 세계화의 현실과 조건

세계화는 경제적으로 각 나라 사이를 연결시켜 더욱 큰 단일 조직체를 만들어 생산성과 능률을 높이기도 하고, 인류를 위한 더 나은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긍정적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고, 긍정적인 많은 효과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배척할 수는 없다. 경제적으로 번영을 가져올 수 있는 기회 역시 주어진다. 하지만 세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경제정책 자체가 공동선을 지향해야 하고 국가들 간에 강한 일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많은 사람들의 이익이 국제기구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하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민족들과 국가들이 많이 있음이 감안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들이 갖추어 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올바른 세계화를 이루었다고 할 수 없다.²⁶⁵⁾ 또한 이러한 세계화는 강대국에게 유리하도록 작용하는 시장 경제의 원리에 의해 실시된다. 그 결과 실업률과 빈부격차는 증가하고 약소국에 불리한 불공정한 경쟁으로 온 인류가 함께 잘 살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특히 오늘날 이루어지는 세계화는 가난한 사람들의 희생과 더불어 이루어지고 있다. 그 결과 국제 관계에 있어서 가난한 나라들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뒤처지게 되었고, 많은 국가들이 세계 시장 경제 속에서 자신의 지위를 지킬 수 없게 되었다.²⁶⁶⁾

교회는 세계화의 긍정적인 가치를 인식하면서도 동시에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는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자 한다.²⁶⁷⁾ 교회는 “소외 없는 세계화”²⁶⁸⁾

265) 참조: 백주년, 58항.

266) 참조: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아시아 교회,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0, 39항.

267) 참조: 아시아 교회, 55항.

268) 요한 바오로 2세, 제31차 세계 평화의 날 담화(1998.1.1.), 3.

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이미 교황 23세는 소외 없는 연대의 세계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첫째로 피 원조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

둘째로 원조제공국가의 정치적 또는 신식민주의적 이익추구를 배제해야 한다.

셋째로 피 원조지역의 경제와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넷째로 세계 공동체의 형성에 기여해야 한다.

다섯째로 저개발 지역 국민들의 삶을 제도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한 교회의 노력 등 경제적 원조가 필요하다.²⁶⁹⁾ 가톨릭교회는 세계 자유 시장을 규제할 수 있는 윤리적·법적 규범들을 제정하도록 호소한다.

가톨릭 지도자들과 전문가들은 정부와 금융기관과 무역기관들이 이러한 규범들을 인식하고 존중하도록 촉구한다.²⁷⁰⁾

5.2. 세계화에 대한 가톨릭교회의 가르침

간추린 사회교리에 의하면, “세계화란 재화와 서비스의 교환, 금융거래의 단계에서 국민경제를 점차적으로 통합시키는 과정을 의미한다.”²⁷¹⁾ 세계화는 인류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새로운 희망을 준다. 인류 전체를 위해 잠재적인 이익이 되는 효과를 창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계화는 위기를 가져올 수도 있다. 세계화 과정에서 얻게 되는 경제적인 이득의 증대는 상대적 빈곤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특히 오늘날 이 시대에는 경제분야에 있어서 세계화의 복잡한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고, 이로 인하여 국가들 간에 경제적으로 큰 차이가 벌어져 엄청난 불균형이 초래되었다. 세계화는 사회적 발전의 불균등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시킨다. 자유로운 자본의 유통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차이를 좁히지 못하기 때문이다.²⁷²⁾ 소외 없는 세계화와 연대의 세계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소외된 이들이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재물의 재분배를 위한 새로운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²⁷³⁾

269) 참조: 어머니요 스승, 184항

270) 참조: 아시아 교회, 39항.

271) 간추린 사회교리, 361.

272) 참조: 간추린 사회교리, 362.

273) 참조: 간추린 사회교리, 363.

세계화 시대에 있어 교회 교도권은 인권의 보호를 위해서 적절한 연대성을 요구한다. 국제사회가 인권을 존중하고 충족시키는 의무에 대하여 망설이고 있기 때문이다.²⁷⁴⁾

세계화가 확산됨에 따라서 시민사회의 여러 상이한 조직들은 세계적 수준에서 요구되는 새로운 과제들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행동해야 한다. 이러한 조직들의 올바른 행동들은 자원을 국내외에서 공평하게 배분한다든지 세계적 규모로 발생하는 경제 금융적 성장의 모든 과정을 올바르게 배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²⁷⁵⁾

교회는 현재 진행 중인 경제 금융적 진행과정에 의해서 위협받고 있는 지역적 특성과 문화적 차이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세계화가 새로운 식민주의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또한 세계화의 시대에서 세대 간의 연대성은 강하게 강조되어야 하며 국가적인 정치 공동체 안에서도 계속하여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²⁷⁶⁾

교황청 내사원(Penitenzieria Apostolica) 원장 지로티 주교(Gianfranco Girotti)는 개인보다는 인류 전체에 악영향을 끼치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인 죄악을 열거하면서 유전자 조작, 환경오염, 마약과 함께, 사회적 불평등과 부정의가 지속적인 세계화 과정에서 파생되는 부정적인 산물임을 강조했다.²⁷⁷⁾ 특히 세계화에서 파생되는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가난한 자와 가난한 나라를 더 가난한 자와 가난한 나라로, 부자와 부유한 나라를 항상 더 부자와 부유한 나라로 만드는데 이는 묵과할 수 없는 부정을 키우는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을 경고하였다. 이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바로 시장의 자유화와 자본의 세계화에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는 경제적 신자유주의의 실천적 결과이다.

5.3. 세계화에 대한 사회교리적 판단

경제적 국경의 개념이 사라지고 국가 주도의 발전 기반이 약해지는 세계화의 과정에서 그리고 사상적으로 신자유주의의 사고가 만연하는 상황에서 국제

274) 참조: 간추린 사회교리, 364.

275) 참조: 간추린 사회교리, 366.

276) 참조: 간추린 사회교리, 367.

277) 참조: N. Gianfranco Girotti, Accogliendo il reggente della Penitenzieria alla conclusione del Corso per professori: Nuove forme del peccato sociale, "L'Osservatore Romano", 9. III. 2008; http://www.vatican.va/news_services/or/or_quo/interviste/2008/059q08a1.html

적 빈곤 문제를 국가적 테두리 안에서 해결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문제는 과거 어느 때 보다 세계적 차원의 사고와 연대의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 더욱이 세계화가 경제적 신자유주의에 밀려 빈곤의 확대 재생산 과정으로 전락할 위험성마저 내포하고 있다면, 세계 보편주의를 지향하는 가톨릭의 확신은 더욱 절실하다. 경제적 신자유주의에 맞서 교회는 소외 없는 세계화와 연대의 세계화를 위해 진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²⁷⁸⁾

세계화의 진전과 경제적 신자유주의 확산은 윤리 및 가치관에도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세계화 과정에서 교회의 중심적 역할이 더욱 더 요구되는 것이 때문이다. 과거 국민의식 중심적이었던 윤리 및 가치관은 국민의식과 함께 세계시민으로서의 의무수행을 요구한다. 그리고 국내문제로 취급되었던 노동, 환경, 투자, 경쟁정책, 부정, 부패, 가난 등의 문제들이 세계적 과제가 되었다. 이에 따라 교회는 기업들을 통하여 세계의 가난을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에는 세계적 투자기관의 설립도 포함되어야 한다. 투자기관의 설립과정의 반하여 자본수익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교회의 전통적 입장이다. 그러나 교회가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반대한 적이 없고, 특히 교황 비오 12세는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을 위하여 투자나 자본형성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였으며 세계적 관점에서 지역경제단위와 보다 넓은 국제경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기도 하였다.²⁷⁹⁾

요한 23세와 제2차 바티칸공의회는 보편적인 세계 공동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요한 바오로 2세는 “평화는 연대의식의 열매”²⁸⁰⁾라고 하였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 이후 세계화 과정이 불평등과 부정의 세계 전체로 확대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인식 역시 교회 안에서 공유되었다. 바오로 6세는 회칙 「민족들의 발전」에서 국제경제 관계가 더욱 가난해진 자들의 희생을 대가로 이미 부유한 이들을 더욱 부유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작용하고 있고, 불평등은 단지 소유에 국한되지 않고 권력의 행사에까지 확장되고 있으며, 이른바 ‘발전’의 과정에서 제1세계의 문명에 의해 제3세계의 문화들이 파괴 내지 종속당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아시아 시노드의 최종 회의에 제출된 문서에서 주교들은 “소외계층 없는 세

278) 참조: 오용석, 소외 없는 세계화, 연대의 세계화를 위한 조건과 실천, 사목 242,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 1999, 16.

279) 참조: 같은 글, 57.

280) 사회적 관심, 39항.

계화”라는 요한 바오로 2세의 요청에 충실히 따를 것을 다짐하면서 국제금융 기구들에게 가난한 개발도상국들의 외채탕감을 포함한 외채문제재협상에 나설 것을 권고하고, 교황청에 대해서는 세계시장·국제적인 금융 및 무역기구들·다국적 기업들에 적용할 윤리적, 법률적 규범을 제공하기 위해 제 1세계 교회들과 제 3세계 교회들 간의 구체적인 연대를 촉진하였다. 세계 공동선이라는 목표에 다가가기 위해, 우선 먼저 불평등한 세계질서와 시장의 우상이라는 거대한 적과 맞서 싸워야 한다. 또한 이 싸움에서 지난 수세기 동안 교회가 구축한 바로 그 지구적 통신망을 지혜롭게 활용해야 한다. 현재 아시아의 금융 시장들이 상호간에 심대한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국제적 협력은 아시아 교회들 사이에서 먼저 시작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늘과 내일의 국민을 위한 충분한 노동의 기회와 수익을 보장하는 투자”²⁸¹⁾가 이루어져야 하고, 세계 공동선의 추구하고 실현을 위한 민족들의 공동체와 궁핍한 지역을 위한 국제조직 그리고 인류의 연대성에 입각한 국제경제협력이 필요하다.²⁸²⁾

소외 없는 연대의 세계화를 위하여 첫째, 국제통상, 특히 저개발국과의 교역 촉진과 조정기능을 갖는 국제기구를 설립해야 할 것이다.²⁸³⁾

둘째로 신자들과 교회의 역할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²⁸⁴⁾ 국제기구는 「사목현장」이 강조한 바와 같이 저개발 지역의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한 기여는 국제기구 자체보다 신자들과 교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구체적 실천 방안으로서 오늘날 세계화가 기업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에 맞추어 저개발국들에 대한 투자를 위한 ‘가톨릭 엔젤스 그룹 연합’ 또는 ‘국제 안젤리’의 결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엔젤스 그룹’이란 원래는 선진국에서 유망 벤처기업 또는 기술 보유자의 잠재성을 보고 투자하여 성장을 지원한 다음 높은 투자수익을 얻는 투자자들의 모임을 가리키는 말이다. ‘국제 안젤리’의 취지도 이와 비슷하다. 세계 각국 가톨릭 신자와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광범위한 인적·물적 기초 자본시설을 각 국가별로 조직화하여 개발도상국들의 경제개발을 위한 투자의 원천으로 최대한 활용하자는 것이다.²⁸⁵⁾ 이것은

281) 사목현장, 70항.

282) 참조: 사목현장, 85항.

283) 참조: 사목현장, 86항.

284) 참조: 사목현장, 90항.

285) 참조: 오용석, 소외 없는 세계화, 연대의 세계화를 위한 조건과 실천, 57.

가톨릭 전문가들이 대학에서 연구를 계속하며, 그 실천에 따라 그리스도 신자들의 뛰어난 국제적 활동의 형태인 국가 간 협력을 촉진할 목적으로 이미 설립되었거나 앞으로 설립될 기관에서 개인적으로든지 단체적으로 협력하기를 요청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정신에 합치된다.²⁸⁶⁾

286) 참조: 사목헌장, 90항.

6. 요약

세계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시장주의자들이며 그들이 추구하는 이상적 사회 모형은 시장이다. 그들은 자유, 개인주의, 효율성, 경쟁, 실적주의 등의 기본적 가치들이 가장 존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들이 사회 전체의 가치체계를 인도할 때, 모든 자원이 시장의 원칙에 따라 효율적으로 배분됨으로써 사람들이 최대한의 경제적 복지를 누리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장의 자유화와 세계화는 인간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기여한다고 그들은 주장한다. 그러나 세계화가 진전되고 경제적 신자유주의 사조가 팽배해지면서 부의 집중과 사회 양극화가 심각하게 나타났다. 또한 국민·국가의 침식으로 국가 간의 차별성이 약화되었다. 이런 사회는 갈수록 절대적 빈곤상태를 깊게 하고 상대적 빈부의 불평등을 극도로 심화시키게 된다. 이러한 현실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폐단에서 온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결국 자본이 있는 이들을 위한 것일 뿐 자본이 없는 이들의 존엄성마저 빼앗으려 하는 경제정책에 불과하다. 특히 오늘날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가난한 사람들의 희생과 더불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난한 나라들은 경제적·정치적 국제관계들의 주변부로 밀리게 되었고, 많은 국가들이 세계 시장경제 속에서 자신의 지위를 지킬 수 없게 되었다.²⁸⁷⁾ 그러므로 자본주의 체제에 극단적인 물신화의 경향을 띠고 있는 신자유주의는 인간구원과 인간의 존엄성을 구현해야 교회의 임무에 큰 장애물이며 위협적인 도전이다. 다음 장에서는 오늘날 교회의 또 다른 도전인 물신주의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87) 참조: 아시아 교회, 39.

제 4장 물신화(Fetishism) 현상과 사회교리적 판단

자본주의는 자본을 핵심적인 요소로 삼는 경제체제이다. 오늘날 자본은 사물이 아니라 사물의 형태로 나타나는 사회적 관계로 이해된다. 물론 자본은 화폐의 취득과 축적에 관한 것이지만, 그 부의 축적은 부의 소유자와 비소유자 간에 특별한 관계를 형성한다. 그리고 그 안에서 부는 축적을 넘어서서 그러한 사적인 소유관계를 계속해서 재생산해 낸다. 이러한 자본은 자본의 순환을 거쳐 가치로서 자신을 드러내며, 독립적으로 운동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더욱 더 증식시킨다. 즉 자본을 가진 사람이 자본을 가지고 이윤을 획득하는 주관적인 운동을 넘어서서 이제 자본 스스로가 자신의 가치를 증식시키는 객관적인 운동을 하게 된다. 이처럼 사회적 생산과정 안에서 사물에 부여된 사회적 성격이 독립적으로 사물의 본질처럼 전환되는 과정이 곧 자본의 물신화(物神化) 과정이다. 상품생산사회에서 인간과 인간의 사회적 생산관계가 물(物)과 물(物)의 물적 관계로 나타나게 되고, 인간이 만들어 낸 경제적 산물에 불과한 상품이나 화폐 등이 일단 생산되고 나면 독자적인 생명을 가진 독립적 형태를 보이게 되는데, 마르크스는 상품과 화폐 등에 나타나는 이러한 독특한 성격을 물신적 성격 또는 물신성이라고 지칭하였다.²⁸⁸⁾ 여기서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으로 인하여 이 세상이 점점 물신화되는 현상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물신에 대한 이해

일반적으로 물신숭배(物神崇拜, Fetishism)란 원래 종교학 초기에 사용되었던 용어로서 어떠한 물건에 초자연적인 힘이 깃들여 있다고 믿어 이를 숭배하는 것으로, 인공물 또는 가공의 자연물, 동식물의 일부분, 금석류, 주부(呪符), 주약(呪藥), 주구(主構), 호부(護符), 상징물 등의 사물에 초자연적인 힘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를 숭배하는 원시 미개사회의 종교예식 형태를 일컫는 말이었다. 이러한 원시인의 종교형태는 크게 물신숭배, 정령숭배, 무당숭배 세 가지로 분류된다.²⁸⁹⁾ 사회현상을 해석하는 사회과학 용어로서의 상품의 물신숭배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사람은 마르크스(Heinrich Karl Marx. 1818-1883)

288) 참조: 경제학 사전, 풀빛 편집부 편, 도서출판 풀빛, 1993, 249.

289) 참조: 정하권, 성숙한 신앙, 가톨릭 신문사, 2001, 28. 원시종교들은 인간 이상의 초월적인 힘에 기대려하는 인간본성의 발로이지 결코 신앙심의 발로가 아니다.

이다. 마르크스는 물신숭배(Fetishism)란 용어에 독자적인 개념규정을 부여함으로써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 안에서 현실적으로 세력을 떨치는 물신숭배의 내용을 밝히려고 하였다.

이러한 물신숭배는 자본주의에서 현저하게 나타나게 되는데 사회에서 사람 사이의 생산 상의 결합이 직접적이지 않고 시장을 통한 상품의 매매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데서 나타난다. 따라서 인간의 결합은 물질의 관계, 상품의 성질을 갖게 된다. 이리하여 생산관계의 물질적 형태, 물질, 즉 상품 내의 자동적인 운동에 인간이 의존하게 되는 것, 이것이 물신숭배의 객관적 기초이다.

생산물의 상품으로서의 성질, 예컨대 가치는 이것이 사회관계의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이 은폐된 채, 마치 과일의 성질인 맛과 같은 자연적인 성질로서 나타난다. 또한 사람들 사이에 만들어진 자본과 노동의 관계, 생산관계는 물질·상품의 관계로 된 채 그 실제의 사실이 은폐되고 자본이 노동을 착취하고 있는 사실 또한 은폐된다. 자본가와 노동자의 관계는 똑같이 상품의 소유자로서 한쪽은 노동력을 팔고 한쪽은 노동력을 사는 것으로 양자는 평등하고 자유롭다는 환상이 생겨나고, 자본가와 노동자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이 단지 상품끼리의 관계일 뿐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마르크스는 이러한 현상을 사적 소유 하에서 사람의 생산 상의 관계가 상품이라는 형태를 취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와 같이 인간관계가 물질로 귀착되는 것이 상품사회에서의 물신숭배이다. 이리하여 화폐에 대한 물신숭배가 나타나고 돈이 제일이라는 화폐의 마력에 사로잡히게 되어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 일상적인 종교처럼 나타나게 된다.

오늘날 물신성이란 본래의 사물에 담겨져 있지 않은 속성이나 능력이 환상을 통해 마치 그 사물이 본래 지녔던 것처럼 여겨지고 나아가 그 환상을 통해 새로운 속성이나 능력이 그 본래 사물의 실제적 가치로 전환 혹은 도착되는 현상을 지칭한다.

2. 상품, 화폐, 자본의 물신화 과정

자본주의 생산과정에서 물신화는 상품의 물신화, 돈의 물신화, 자본의 물신화 현상으로 나타난다. 이 세 가지는 자본주의 발전의 역사적 단계로 볼 수 있고, 또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병존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²⁹⁰⁾ 여기서는 이러한 물신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1. 상품의 물신화 과정

상품은 인간노동의 산물이며, 이익을 남기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생산물은 서로 교환할 수 있는 사용가치가 있게 될 때부터 상품이 된다. 즉 상품들이 그들 사이에 사회적 관계를 전개하기 시작하고, 생산력과 상품관계가 발전할수록 상품 사이의 이러한 사회적 관계도 더 발전한다. 결국 역할이 전도되어 상품 생산자가 상품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생산자가 상품의 지배를 받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상품이 ‘인격화’되는 시점부터 생산자인 인간은 살기 위해 상품에 종속하는 경향을 갖게 된다.

상품은 자본주의 체제가 지닌 물신화 성격의 기초적인 토대를 이룬다. 사용가치인 상품에는 아무런 신비한 것이 없다. 인간이 자신의 활동을 통해 자연소재의 형태를 자기에게 유용한 방식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은 매우 명료한 사실이다. 그러나 상품의 신비적 성격은 그 사용 가치로부터 나오는 것도 아니고 가치 규정의 내용으로부터 나오는 것도 아니며 상품형태 자체에서 유래하는 것이다.

상품형태는 인간에 대하여 인간 자신의 노동이 갖는 사회적 성격들을 노동생산물 자체의 대상적 성격들로 보이게 만들고, 이 물적 존재들의 사회적인 자연 속성으로 인해 모든 노동에 대한 생산자들의 사회적 관계는 생산자들 외부에 존재하는 갖가지 대상들의 사회적 관계를 반영한다. 이러한 탈바꿈을 통하여 노동 생산물은 상품이 되고, 감성적인 동시에 초 감성적인 물질 또는 사회적인 물적 존재가 된다.

결국 상품형태나 이 형태가 나타내는 노동 생산물의 가치 관계는 인간 자신들의 일정한 사회적 관계이지만, 사람의 눈에는 물체와 물체라는 환상적인 형태로 보이게 되는데, 이것이 상품의 물신성이다. 그러므로 상품 세계의 물신적

290) 참조: 프란츠 힌켈라메르트, 김향섭(역), 물신, 다산글방, 1999, 16.

성격은 상품을 생산하는 노동의 사회적 성격으로부터 생겨나는 것이다.²⁹¹⁾

2.2. 화폐의 물신화 과정

소유자의 시각에서 보면 돈은 모든 상품에 이르는 문이다. 돈은 질적으로 무한한 권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양적인 측면에서 실제 총 화폐량은 한정되어 있다. 탐욕은 돈을 소유하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한다. 이제 종교적 이미지로 이 돈을 신성화한다. 화폐의 이러한 도덕적 품성들은 일정한 조건 아래서 생산체제 자체를 변경하는 원동력이 된다. 그러므로 돈 추구는 경건한 행위로 바뀐다. 이제 인간은 신심(信心)의 관계를 통해 돈 추구라는 행위의 적절한 가치들을 자신의 가치로 삼게 됨으로써, 돈은 이제 숭배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²⁹²⁾ 화폐로 사용되는 재화도 본질적으로는 다른 상품과 다르지 않으며, 그 수급도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시장에 의해 조정되기 때문에 교환 수단으로서의 상품이라는 성격 이외의 다른 성격을 화폐에 부여하는 모든 관념은 잘못된 것이다.²⁹³⁾ 그러나 하나의 상품이 화폐가 되고 나면, “다른 상품들이 비로소 화폐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그 한 상품이 화폐이기 때문에 다른 상품들이 그 한 상품으로 각자의 가치를 일반적으로 표시하는 듯이 보인다.”²⁹⁴⁾

이로써 화폐는 상품교환을 매개하기 위해 부여받은 사회적 기능을 초월하여 모든 재화의 가치 척도로서 스스로를 제도화 해 고유한 능력을 지니게 되는데, 이것이 화폐의 물신성이다.²⁹⁵⁾

오늘날에는 강화된 물신적 성격 아래에서 화폐가 자본으로 전환되기 이전에도 교환 기능 안에서 파악되는 물신적 성격을 뛰어 넘어 그 자체만으로도 어떤 가치와 기능을 지녔다고 믿는 물신숭배라는 극도의 형태인 이른바 배금주의에 이르게 된다.²⁹⁶⁾

291) 참조: 칼 마르크스, 자본론 제1권, 김수행(역), 비봉출판사, 1996, 90-105.

292) 참조: 같은 책, 161-179.

293) 참조: Karl Polanyi, 'The Great Transformation: The Political and Economic Origins of Our Time 거대한 변환- 우리 시대의 정치적, 경제적 기원', 박현수(역), 믿음사, 167.

294) 칼 마르크스, 자본론 제1권, 김수행(역), 125.

295) 참조: 김준보, 경제학의 기초, 한길사, 1991, 55-63.

296) 참조: 같은 책, 161-179.

2.3. 자본의 물신화 과정

자본은 생존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노동자의 삶을 보장하고 노동자의 삶에 관심을 갖는다. 생존할 수 있는 노동자의 수, 또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삶의 수단은 이러한 자본가의 계산에 따라 결정된다. 피착취자의 생존은 이제 자본이 자기의 필요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 이 논리 안에서 노동자들은 오늘날 선진 국가에서도 점증적 실업 경향의 형태로 자본의 공격을 받고 그로 인해 고통을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가들은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자본이 필요한데 그 자본의 부족 때문에 실업이 발생한다고 노동자들에게 선전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정적인 직장을 갖는 노동자는 행운아로 여겨진다. 나머지 노동자들은 계속 자본에 매여 있으면서도 자본이 이들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자본은 생명의 대원천인 것처럼 보인다. 상품세계의 한 가운데서 스스로 가치를 창출하고 증대시키는 힘을 갖는 자본이 출현한다. 모든 것이 절대적으로 이 주체에 종속하게 된다.

자본의 물신적 성격이란 “이윤이나 이자는 생산수단인 자본 그 자체의 자연적 힘에 의해 생겨난다고 믿게 만드는 성격”²⁹⁷⁾을 말한다. 자본은 생산과정을 통하여 가치를 지니고 있는 상품을 생산하고 상품의 가치를 유통 과정에서 실현하게 된다.²⁹⁸⁾ 따라서 자본은 노동을 통한 가치의 생산뿐 아니라, 유통을 통한 가치의 실현에 있어서도 중요한 과제일 수밖에 없다. 자본은 가치의 실현을 위한 유통과정에서 생산 외적조건들에 의해 제약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은 가치의 발생이 노동과 관계없는 요소들에 의해 규정된다는 그릇된 관념을 낳게 만들었다. 또한 가치가 유통과정에서 단지 실현될 뿐만 아니라, 발생한다고 믿게 만듦으로써 가치를 노동과 분리시키고, 자본의 산물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 여기에서 자본은 물신성을 지니게 된다. 이러한 자본의 물신성은 자본주의적 생산의 총 과정에서 결정적으로 진전된다. 자본주의적 생산의 총 과정에서, 자본은 그것이 사회적 총 자본 가운데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에 따라 사회적 총 잉여 가치 중에서 각자의 이윤을 배당 받게 된다. 이 때문에 개별 자본의 이윤은 그것이 실제로 생산해 낸 잉여 가치와 일치하지 않고 가격은 가치와 괴리된다. 이러한 현상은 노동의 대상화라는 가치의 참된 성질을 은폐하여 그 정체를 모호하게 만들고 가격을 자율적인 실체로 착각하게 한

297) ‘물신적 성격’, 풀빛편집부, 경제학사전, 도서출판풀빛, 1990, 249.

298) 참조: 칼 마르크스, ‘자본론 II-1’, 강신준(역), 이론과 실천, 1995, 119-140.

다.²⁹⁹⁾ 여기에 덧붙여 이윤이 다시 기업가의 이득과 이자로 분열됨으로써, 기업가 이득은 마치 자본가 자신의 노동으로부터 생겨난 것처럼 생각되고, 이자는 일체의 자본관계에서 분리되어 자본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마술적 힘의 소산으로 여겨진다.³⁰⁰⁾ 이자를 낳는 자본에게서 자본관계는 가장 외면적이고 물질적인 형태에 도달하게 되며, 자본의 물질적인 형태와 자본물신성이 완성된다. 이제 자본은 고유한 재생산 과정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식시켜 나가는 것처럼 보인다. 즉 가치증식의 근거가 은폐되어 자본이 ‘직접적 생산과정’ 그 자체인 것처럼 신비화된다.³⁰¹⁾

299) 참조: 칼 마르크스, 자본Ⅲ-1, 177-257.

300) 참조: 칼 마르크스, 자본Ⅲ-2, 451-475.

301) 참조: 같은 책, 477-479.

3. 자본의 물신화 영향

상품이 감각적인 사용가치인 한 신비스러운 것은 없다. 그러나 상품이 감각적인 면에서 초감각적인 것으로 변할 때 신비스러운 것이 된다. 즉 인간이 노동을 통하여 상품을 생산하자마자 그 상품은 초감각적인 것이 되어 물신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상품의 물신화 현상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비인간화를 의미하는데, 상품생산과 유통에서 일어나며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서는 상품을 매개로 한 인간 착취로 나타나게 된다.³⁰²⁾ 그래서 이러한 상품의 물신성을 통하여 자본주의 경제체제 안에서의 인간 본원적 모습은 하느님의 형상에 근거한 인격적 관계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고 물신화되어 상품을 매개로 한 사물과 사물의 관계로만 이해될 따름이다.³⁰³⁾

상품유통과정에서 돈이 나타나는데, 이 돈의 출현으로 상품이 의인화된다. 돈은 모든 상품의 가치를 표현하고, 보존하며, 가치의 척도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돈은 마치 전능한 힘과 의지를 갖고 있는 듯이 처신하게 되고, 모든 상품 위에 군림하게 된다.³⁰⁴⁾ 그래서 돈을 통한 상품교환이 인간관계를 결정하게 된다. 상품논리는 인간의 행동을 규정하는 사회적 가치들로 나타나게 되며, 나아가 노동의 가치와 더불어 상품생산을 수반하는 윤리적 가치들도 나타난다. 그러나 이 규범과 가치의 기준은 인간생존의 필요성이 아니라 사적소유권, 그리고 소유주로서의 인간의 상호존중에 있다. 이 규범에서 상품소유권을 이전하는 매개로서 계약이라는 또 다른 기본규범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인간의 삶은 상품의 삶에 종속하게 된다. 물신화된 자본은 성서에서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느님과 같아지려고 자유를 남용하여 자기 존재의 근원에 도전함으로써 죄를 범하게 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의 기원과 출처인 인간의 노동을 부인하고 자기의 성장발전과 자기의 이익이 자기 자신에게 나온다고 주장함으로써 자본은 인간의 노동으로부터 분리된 자율적 존재로서 오히려 인간의 노동을 착취하는 적대세력으로서 맞서게 된다.³⁰⁵⁾ 이렇게 일단 절대화되고 물신화된 자본은 노동자 자신을 제물로 삼고 생명을 빼앗아 자기 자신을 재생산해 나간다. 이처럼 자본에게 살아 있는 인간과 인간의 노동이 희생 제물로 바쳐진다.³⁰⁶⁾ 또한 물신화한 자본의 소유자인 자본가들은

302) 참조: 김춘호, 가톨릭교회와 사회변혁, 왜관, 분도출판사, 1998, 53.

303) 참조: 박충구, 자본주의와 기독교, 기독교 사상(1992, 12), 43-71.

304) 참조: 프란츠 힌켈라메르트, 김향섭(역), 물신, 18.

305) 참조: 노동하는 인간, 13항.

자기 자본의 가치가 모두 객체화되고 소외된 노동에서 오는 것임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자본을 축적할 수 있었던 임금노동자들의 수고와 노고, 존재 등을 부정함으로써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를 정당화하고 스스로 우상숭배자가 된다.³⁰⁷⁾

3.1.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의 몰신화

신자유주의자들은 시장경제가 그 자체로 완벽한 제도인데, 국가와 노조의 간섭으로 위기가 발생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해결책은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노조의 권력을 약화 또는 해체하며, 나아가 고소득층에 대한 세제혜택 등을 통해 불평등을 조성하고 이러한 불평등이 경제에 새로운 역동성을 부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³⁰⁸⁾

이러한 관점에서 신자유주의자들은, 시장경제의 부작용과 폐해를 완화하기 위해 국가가 개입했던 경제부문에서 모두 철수하라고 주장한다. 즉, 대내적인 측면에서 국영기업의 민영화, 각종 경제규제의 철폐, 경제적 약자에 대한 각종 보조금 또는 지원금 철폐, 사회 보장성 지출삭감, 그리고 대외적인 측면에서 무역장벽 해소나 관세인하, 각종 수출지원제도 철폐 등을 주장한다. 이런 식으로 국가는 고비용, 저효율의 상징이 되고 나아가 모든 악의 근원으로 단죄된다. 그러나 국가를 악의 근원으로 몰고 국가의 경제 개입을 규탄한다고 해서 국가 자체의 무용성을 주장하거나 나아가 국가의 개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사회복지 차원의 국가 개입은 반대하되 시장경제의 원활한 작동을 돕기 위한 국가 개입은 적극적으로 보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경우로 레이건 정부는 사회복지비용을 대폭 삭감하면서도 군사비 지출은 꾸준히 늘려갔다.

신자유주의자들은 국가뿐만 아니라 노조도 악으로 본다. 국가의 지원과 보호를 받는 노조가 임금을 인상하고 사회복지를 확정하기 위해 압력을 행사해 사적 축적의 토대가 무너졌고 기업의 이윤 수준을 파괴했으며, 인플레이션을 야기해 시장경제의 위기를 초래했다고 보는 것이다.

자본주의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자들은 인간의 이상을 실현할 희망을 자유

306) 참조: 엔리케 뢰셀, 공동체 윤리, 김수복(역), 분도출판사, 1991, 146-154.

307) 참조: 같은 책, 38-39.

308) 김항섭,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인권, 사목266(2001),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1, 3.

시장경제 체제에 둔다. 이 희망은 시장경제의 자유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한다. 시장경제는 필요충족과 자원배분을 위해 완벽하고도 신비로운 존재이다. 이들은 시장경제가 인간 상호행위의 무의식적 결과로서 단순히 진화·발전했고, 인간이 의식적이고 적극적인 형태로 실현할 수 없는 기적을 만들어 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한다.³⁰⁹⁾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신자유주의를 반대한다. 신자유주의 정책들은 새로운 잉여가치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금융자본을 활용해 이미 일정 정도 이상의 부를 축적한 이들에게 유리한 분배방식을 추구하면서 민중의 삶을 억압하기 때문이다. 결과론적으로 신자유주의의 정책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더욱 퇴행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이 정책을 반대하는 것이다.

3.2. 시장경제 물신숭배의 영향

시장경제라는 것은 시장에 의해서만 통제되고 인도되는 경제체제이기 때문에 재화의 생산과 분배의 질서는 시장의 자기 조정적인 메커니즘에 의존한다. 이러한 시장의 자기 조정적 메커니즘의 근거는 인간이 화폐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행동한다는 것이다.³¹⁰⁾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는 시장경제를 절대화시킴으로써, ‘시장 인간’이라는 왜곡된 이데올로기를 형성시킨다. ‘시장 인간’은 제약된 삶에 필요한 기본욕구의 충족을 위해 일하지 않고 무제약적이고 인위적인 탐욕의 달성, 즉 더 많은 상품과 돈을 얻기 위하여 일하기 때문에 무제약적 소비자이며 동시에 무제한적 자본 축적자이다. 그러기에 ‘시장 인간’은 이기적으로 타인을 희생시켜서 자신의 재산증식을 꾀한다.³¹¹⁾

시장경제가 낳은 ‘시장 인간’은 극도로 왜곡된 인간상을 보여준다. 인간은 탐욕의 노예가 되고 인간의 욕망은 오직 경제적인 것만으로 채워진다. 인간의 자유는 맹목적인 본능이나 순 외적 강박에 의하지 않고 인격적인 내적 동기에 의하여 움직이기를 요구하지만, 오히려 인간은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시장경제의 노예가 된다.³¹²⁾

309) 참조: 성정모, 인정 없는 경제와 하느님, 김항섭(역), 가톨릭 출판사, 1995, 101.

310) 참조: Karl Polanyi, ‘The Great Transformation: The Political and Economic Origins of Our Time, 91-93.

311) 참조: Ulrich Duchrow, 성서의 정치경제학, 1997, 62-68.

312) 참조: 사목현장, 17항.

자본의 물신성을 기초로 한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은 자본의 장애 없는 이윤 추구의 공간과 이러한 공간 안에서의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목적으로 할 뿐 생산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의 권리와 필요는 자유시장경제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여긴다.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시장은 단순한 경제활동의 조정 또는 중재기구로서의 기능을 초월하여 인간생활의 전 영역을 주관하는 초월적이고 전능한 존재가 된다. 신자유주의 신봉자들에게 나타나는 근본적인 문제는 ‘시장경제의 초월화’이다. 여기에서 이익추구를 토대로 한 경제적 관계가 인간의 전 실존을 관철시키는 초월적 비약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초월화는 시장의 절대화로 연결된다. 그리하여 시장경제 체제 밖의 모든 희망뿐 아니라 하느님의 초월성마저 부인하는 우상숭배의 한 단면이 드러나게 된다.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시장경제는 초월적인 힘에 의하여 인간을 대신해서 진정한 역사주체로 자리매김을 하게 된다.

시장경제에서는 역사의 주체로서 의식적으로 이웃과 연대하는 것, 또는 사회적·정치적 목표를 의식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시장경제에서 진정한 역사주체는 시장경제이고 시장경제를 움직이는 참된 힘은 이기심으로 가득 찬 인간이기 때문이다.³¹³⁾ 또한 시장경제 체제는 오직 전적으로 자기이해와 이익만을 염려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행위의 비의도적 결과로서 경제성장을 통해 정치·경제적 자유라는 기적을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체제이다.

따라서 시장경제만이 번영과 자유의 필요조건을 이룬다고 보는 프리드만의 주장에 따르면 시장 메커니즘에서 투입되는 것은 욕구충족을 향한 이기심이고, 산출되는 것은 경제적·정치적 자유이다. 여기에서 인간의 이기심이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공동선을 이루어 낸다는 기만이 탄생한다. 즉 시장이 인간의 이기심을 공동선으로 전환시키는 신비로운 능력을 보유한 탁월한 존재로 둔갑하게 된다.³¹⁴⁾

313) 참조: 성경모, 인정 없는 경제와 하느님, 105.

314) 참조: 같은 책, 103.

4. 물신화에 대한 사회교리적 판단

현대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체제는 날로 종교적인 성격을 띠어가고 있다. 20세기말 사회주의가 붕괴한 이후 복음화를 위해서 교회가 우선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부분은 무신론이 아니라 자본주의적 우상숭배이다.³¹⁵⁾ “오늘날 최대의 우상은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경제체제이며,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체제가 지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은 물신성에 있기 때문이다.”³¹⁶⁾ 신자유주의가 지니는 가장 큰 우상성은 자본의 무한축적이라는 경제적 논리를 인간에게 강요함으로써 인간을 자본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데서 드러나고 있다. 여기서는 신자유주의의 현상인 물신주의에 대하여 가톨릭교회는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다.

4.1. 신자유주의 물신화와 성경상의 우상화

구약성경에서 우상화에 대한 비판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³¹⁷⁾ 첫 번째는 하느님의 초월성을 내재화하려는 시도에 대한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탈출기 32장에 나오는 황금송아지의 경우이다. 초월적인 하느님을 인간적인 편의 때문에 인간의 산물인 황금송아지, 신전, 율법 등에 가두어두려는 것이다. 이 유형은 다른 신 혹은 이방 신을 숭배한다. 두 번째는 거짓 신의 숭배에 대한 것으로 내제성, 즉 인간의 산물에 초월적 성격을 부여하려는 것이다.³¹⁸⁾ 이 두 번째 형태는 주로 예언서에 나타나는데, 예언자들은 우상이 해방의 하느님에 대한 단순한 인간 노동의 산물임을 보여줌으로써 비판한다. 사물에 대한 물신성의 부여로 나타나는 우상숭배에 대한 비판은 구약성경의 중심주제 중의 하나이다. 구약성경에서 우상숭배란 일반적으로 야훼께 대한 숭배 대신 구체적인 상들로 표현되는 숭배를 말하는데, 특히 유일신 사상이 강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는 과정이나 인근 주변 국가들과의 세력 갈등 속에서 위기에 처했을 때, 주변의 문화에 동조하거나 이방의 종교를 받아들이는 일체의 행위가 우상숭배로 여겨졌다.

315) 참조: Pablo Richard, *The Idols of Death and the God of Life*, 죽음의 우상 생명의 하느님, 기춘 옮김, 가톨릭출판사, 1993. 9.

316) Ulrich Duchrow, *성서의 정치경제학*, 손태규(역), 도서출판 한울 1997, 11.

317) Pablo Richard, *The Idols of Death and the God of Life*, 11.

318) 참조: Pablo Richard, *The Idols of Death and the God of Life*, 12.

구약성경에 나타나는 구체적인 우상은 송아지로 표현되던 우상 외에도 솔로몬 시대 이후에 자주 등장하는 바알이나 아세라, 아스다롯 등을 들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우상에 처음부터 그 자체에 대한 물신적 성격을 부여하여 숭배의 대상으로 여긴 것은 아니다. 처음에는 야훼에 대한 신앙을 복돋우기 위해 대중의 마음속에 일정한 상징물을 제시하기 위해 이용된 경우도 있고, 더 후대에는 그것들이 다만 야훼의 현존을 나타내는 장소 내지는 현존의 상징으로만 이용되기도 했다.(민수기, 10, 35-36.) 그것은 계약의 궤가 야훼의 현존상징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우상의 설정은 야훼신앙과는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이다. 사실 성서의 내용은 그러한 우상과 하느님 야훼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 야훼의 형상을 만드는 것을 금지하는 십계명 중 제2계명에 대한 위반은 야훼 신앙 전체를 부정하는 결과를 빚게 된다.³¹⁹⁾ 이러한 우상숭배는 결국 야훼 신앙 본질에 대한 배반을 가져왔다. 자연스럽게 우상 자체에 물신적 성격이 부여되어 야훼 대신에 그것 스스로 능력을 가진 물신으로서 작용하게 되며, 이 물신이 경제적 풍요를 가져다주는 것으로 여긴다. 우상들은 풍요를 상징하는 금이나 은 등의 귀금속으로 만들어 져야 했는데, 금기야 금이나 은 자체가 바로 우상이 되는 맘몬 숭배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그런데 야훼께 대한 신앙은 정의에 입각한 공동체 전체의 경제적 풍요와 정치적 해방을 가져다주는 것이었지만, 맘몬의 숭배를 통해 얻게 되는 풍요는 사적인 소유와 독점을 통한 소수권력자들과 부자들만의 풍요였기 때문에, 결국 맘몬의 우상숭배는 죽음을 가져오는 것이었다.(지혜서, 13-14) 예언자들은 우상숭배에 빠져 가난한 이들을 외면하고 사치와 방탕을 일삼아 죽음으로 치닫는 사람들에게 유일하신 하느님이신 야훼에 대한 신앙을 촉구하였고, 그 신앙 안에서 참다운 평등과 평화와 정의의 공동체를 하느님의 뜻으로 제시하였다.

신약성경은 돈, 율법 등의 우상숭배를 비판한다. 돈이나 율법 등은 그 자체로서는 좋은 것이다. 그러나 그것들을 절대화하거나 거기서 구원을 찾을 때 우상숭배로 변한다. 즉 인간의 희생을 요구하고 자연과 역사를 파괴하기에 이른다.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우상숭배는 단순히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항상 하느님의 해방과 구원계획에 반하는 지배와 억압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정치적인 문제이다.³²⁰⁾

319) 참조: Xavier Leon-Dufour, Vocabulaire de Theologie Biblique 성서신학사전, 광주가톨릭대학, 1984, 450.

신약성경에서 우상숭배란 한 분이시며, 살아 계신 참된 하느님 이외의 다른 신들을 숭배나 다른 가치들에 더 비중을 두는 것을 의미한다.(루가, 4, 5-8) 그것은 구체적으로 세상의 권력과 영예를 얻기 위하여 하느님을 배반하는 것이다. 특히 돈은 신약성경에서 하느님과 대립하는 가장 대표적 인격적인 우상으로 등장한다. 참된 하느님과 돈이라는 또 다른 하느님 사이에서 인간의 선택은 중립 없이 결정적이고 단호해야 한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 편은 미워하고 다른 쪽은 사랑하며, 한쪽은 떠받들고 다른 쪽은 업신여기게 된다. 너희는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마태오, 6, 24) 여기서는 바로 돈 그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을 문제 삼는다. 즉 돈이 하느님을 대체하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이다.³²¹⁾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1디모테오, 6, 10)이고, 그런 사람들의 최후는 멸망뿐이다.(필립보, 3, 19) 이상과 같이 성경에서는 경제체제 속에 있는 우상숭배에 대하여 경고한다.

4.2. 물신화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

1891년 당시 자유주의는 완전한 자유방임의 시장경제를 옹호하였으며, 이로 인해 고용주들의 무절제한 탐욕과 노예와 다를 바 없는 수많은 가난한 노동자에게 씌워진 멍에를 하나의 제도로 굳혀 놓았고 그것은 극심한 사회갈등과 공산주의체제의 출현으로 이어졌다.³²²⁾ 자유주의의 방종으로 인한 폐해를 극복하고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국가의 공정한 개입과 협력이 필요하며, 국가는 분배의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법과 정치제도를 균형 있게 운영해야 하며, 국가구성원인 노동자의 권리보장과 복지를 배려하고 보장해야 한다.³²³⁾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이 겪고 있는 경제난의 원천인 신자유주의의 물신숭배에 대한 대책마련을 하기 위해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와 정의평화위원회가 ‘현 상황에 대한 우리의 견해’라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신자유주의의 무절제한 성장에서 비롯된 폐해의 시정을 촉구하였다. 이 성명서에는 신자유주의에 따른 구조조정이 수십 년에 걸친 경제성장의 성과를 무너뜨려 중산층

320) Pablo Richard, The Idols of Death and the God of Life, 46.

321) 참조: Pablo Richard, The Idols of Death and the God of Life, 41.

322) 참조: 새로운 사태, 1항.

323) 참조: 새로운 사태, 23항, 24항.

의 몰락을 부추기고 특히 가난한 이들에게 가혹한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세계화와 시장의 논리를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의 논리가 가난을 심화시키는 무절제한 성장을 조장하고 있어서 국가의 개입과 계층 간의 협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³²⁴⁾

교회는 하느님의 지혜에 부합되는 정의와 평화를 요구해 왔으며,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영혼의 구원을 위해 현세의 재물과 사회 경제적 관계에서 정당한 자세를 고취하고자 부단하게 노력하였다.³²⁵⁾ 특히 현대에 이르러 교회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로 통하는 모든 전체주의나 무신론적 이념을 배격하고, 동시에 자유자본주의의 개인주의와 인간노동에 대한 시장원리의 무절제한 지배를 거부해 왔다.³²⁶⁾

오늘날 모든 나라가 세계화의 흐름에 따라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수용하고 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경제회생과 구조조정으로 빚어지는 희생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는 길을 찾아 나서야 할 것이다. 총체적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정치사회 및 경제개혁에 있어서 반드시 소외된 사람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고용안정을 위한 분명한 정책제시와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의지 표명에 있어서 반드시 보조성의 원리에 입각한 국가의 개입이 있어야 할 것이며, 국민들에게 위기극복의 희망을 안겨줄 수 있도록 나라를 다스리는 이들의 진심 어린 각성과 과감한 개혁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동반자적 노사관계정착을 위하여 노동기본권의 수용이 기업의 기본적 책임으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³²⁷⁾

현대 세계자본주의 체제는 개인과 사회가 얽혀 빚어내는 죄의 구조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³²⁸⁾ 이 죄의 구조를 깨트리기 위해서는 개인의 회심과 사회적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면에서 외형적으로 전 세계에 확장되고 있는 자본주의의 폐해를 깨트리기 위해서 개인들의 회심이 필요하다. 특히 평신도 그리스도인, 사회 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개혁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³²⁹⁾

잘못된 시장경제가 인간의 제도에 불과한 우상숭배라는 것을 올바르게 비판할

324) 참조: 천주교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현상황에 대한 우리의 견해, 1998, 6, 26.

325) 참조: 가톨릭교회교리서, 2419.

326) 참조: 백주년, 10항, 13항, 44항.

327) 참조: 천주교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현상황에 대한 우리의 견해 1998.

328) 참조: 사회적관심, 36항.

329) 참조: 사회적관심, 38항.

필요가 있다. 그것은 시장경제가 소외된 자들을 더 이상 인간으로 고려하지 않고, 인간의 삶의 터전인 자연을 체계적으로 파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늘 희생자의 편에 서서 그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노력해 온 가톨릭교회의 전통에 따라서, 시장의 논리에 따라 철저하게 희생당하는 인간과 자연의 삶을 위한 투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시장경제가 갖는 불합리성을 지속적으로 비판함으로써, 시장경제를 하나의 올바른 제도로 자리매김을 할 필요가 있다. 가난, 극심한 빈부격차 등 사회적 고통의 원인은 신자유주의 물신숭배 때문이다.³³⁰⁾ 신자유주의적 물신숭배는 그리스도교적 메시지에 정면 도전하고 있으며, 오늘날 대중매체, 각종 광고 등을 통해 끊임없이 사람들을 세뇌시키고 있기에, 그 경제 종교적 구원론의 허구성을 폭로하고 비판하지 않는다면, 교회의 복음 선포는 결코 이 세상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없다. 그렇게 된다면 복음화 노력은 헛수고가 될 위험이 있고 신학적 작업도 그 의미를 상실할 수 있다. 제삼천년 기를 맞이한 아시아 대륙에는 개발 과정에서 물질주의와 세속주의가 확산되고 있다.³³¹⁾ 전 세계의 개별 교회들은 세계의 자유시장을 규제할 수 있는 윤리적·법적 규범들이 제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며, 가톨릭교회의 지도자들과 전문가들은 정부와 금융기관과 무역기관들이 이러한 규범들을 인식하고 존중하도록 지도해야 한다.³³²⁾ 교회는 현대세계의 모든 문제들의 해결책을 제공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많고도 복잡한 현대사회의 문제들을 복음에 비추어 무엇이 사회생활의 올바른 구조인지, 인격의 존엄성 및 공동선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원칙과 지침은 무엇인지를 제공해야 한다.³³³⁾

경제발전은 인간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그것은 과도한 경제력을 가진 소수의 인간이나 집단의 전제에 맡겨지거나 정치단체나 몇몇 강대국의 전제에 맡겨져서는 안 된다. 각계각층에서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또 국제관계에 있어서는 모든 국가들이 경제발전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적극 참여해야 한다.³³⁴⁾

재산소유와 외적 재화에 대한 사유권의 기타 형태들은 인격표현에 이바지할 뿐 아니라 인간에게 사회와 경제 분야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므로 개인이나 단체가 외적재화에 대하여 일정한 지배권을 취득하도록 장려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사유재산이나 외적재화에 대한 일정한 지배

330) 참조: 교황 요한 바오로, *Ecclesia in America*, 54항.

331) 참조: *Ecclesia in America*, 7항.

332) 참조: *Ecclesia in America*, 39항.

333) 참조: 가톨릭교육성, *사제양성과 교회의 사회교리*, 1997, 2.

334) 참조: *사목헌장*, 65항.

권은 개인과 가정의 자립을 위해 절대로 필요한 생활권을 제공하는 것이기에 인간자유 의 연장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또한 의무와 책임을 실천케 하는 자극제이므로 시민적 자유의 한 가지 조건도 된다.³³⁵⁾

사실 경제는 여러 인간 활동 중의 한 가지 양상이며 차원이다. 만일 경제생활이 절대화됨으로써 상품들의 생산과 소비가 사회생활의 중심이 되고 다른 어느 가치에도 종속되지 않는 사회의 유일한 가치가 된다면, 그것은 오로지 경제적 체제 때문에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차원을 모르는 사회문화적 체제가 왜소해져,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에만 힘을 기울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경제적 자유가 다만 인간 자유의 한 부분이라고 해석되고, 인간은 생산하고 소비하는 주체가 아니라, 재화의 생산자나 소비자로서 여겨지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제적 자유는 인간에 대한 필연적인 관계를 상실하게 하고 인간을 소외시키며 억압하게 된다.³³⁶⁾

교회가 신자유주의적 물질주의에 대한 대안이 무엇인지를 찾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다양한 역사적 환경에서 해답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노력을 위하여 교회는 필수적이고 가장 건실한 사회교리를 제시한다. 그것은 시장과 기업의 유용성을 인정함과 동시에 시장과 기업은 공동선으로 향해야 한다. 인간은 자기 가정, 자신이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 공동체, 민족 그리고 끝으로 온 인류의 요구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기 위하여 노동한다. 더욱이 그는 같은 기업체에서 일하는 다른 이들의 노동에, 그의 공급자들의 노동과 구매인들의 소비에도 점차적으로 확장되는 연대관계에서 협력한다. 공업에 있어서나 농업에 있어서 생산수단의 소유는 유익한 노동에 대한 봉사라면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이지만, 노동과 사회적 부의 보편적 발전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이것들의 억제, 착취, 투기, 노동영역의 연대관계 단절에서 오는 것을 얻기 위해 생산수단의 소유재산이 사용되지 않거나, 다른 이의 노동을 방해하게 되면 부당한 것이 된다.

이런 형태의 소유는 정당화될 수 없으며 하느님과 인간 앞에서 부당한 남용일 뿐이다. 인간이 땀의 대가로 빵을 얻을 의무는 동시에 그렇게 할 권리를 전제한다. 이러한 권리가 체계적으로 부정되며, 경제정책의 결정이 노동자들로 하여금 합당한 조건들을 달성하도록 해주지 못하게 하는 사회는 윤리에 합당하다고 인정될 수 없고, 그러한 사회는 평화를 달성할 수 없다. 마치 인간이

335) 참조: 사목현장, 71항.

336) 백주년, 39항.

자신의 자유로운 헌신으로 자신을 완전히 실현하는 것과 같이, 사유재산은 적당한 때에 적당한 방법으로 모든 이를 위한 노동과 인간성장의 기회를 제공한다면 옳게 정당화된다.³³⁷⁾ 그러나 교회가 창의성이나 기업, 그리고 현대적 노동에 대해 인정한다 하더라도 오늘날 경제자유주의에 동의할 수 없다.

4.3. 물신화에 대한 사회교리적 판단

극단적인 물신화 경향을 띠고 있는 신자유주의는 인간구원과 인간의 존엄성을 구현하기 위해 세상을 복음화 하려는 교회활동에 큰 장애물이다. 돈과 상품, 자본이 최고의 가치라는 신자유주의의 우상숭배적 경향은 하느님의 모상으로서 창조된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고 인간을 물질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구원의 표지요 인간 존엄성 회복의 보루인 교회가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여기서는 물신화 현상에 대하여 사회교리적 판단을 시도해 보겠다.

4.3.1. 자본의 물신화에 대한 판단

상품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시장성과 소비이다. 모든 것은 상품으로서 시장에 내놓을 수 있을 때에만, 그리고 시장에서 소비될 수 있을 때에만 존재의 가치를 인정받게 된다. 상품화할 수 없는 인간의 노동도 예외가 될 수 없다.³³⁸⁾ 특히 자본의 물신화와 만물의 상품화가 극에 달하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경제에서, 노동은 자본축적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시장경제의 수요공급의 지배를 받는 하나의 상품으로 전락하게 된다. 그러므로 인간의 노동은 경제에서 일차적이고 근본적인 중요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력이라는 상품으로 전락하고 자본에 종속되고 만다. 사실 노동의 상품화란 단순히 노동력의 매매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에 의한 인간노동의 종속을 의미하며,³³⁹⁾ 노동이 자본에 종속되었다는 것은 또한 노동의 주체인 인간이 자본에 종속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본주의체제 안에서 물신화란 인간의 사물화 또는 상품화이고, 상품의 인격화이다. 이에 “인간은 재화생산을

337) 참조: 백주년, 43항.

338) 참조: 사십주년, 36항.

339) 참조: 김준보, 경제학의 기초, 한길사, 1991, 37-47.

위한 하나의 도구로 취급”³⁴⁰⁾되고 있다.

요한 바오로 2세는 자본주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경고한다.

“자본주의는 바람직한 사회체제인가? 만일 자본주의가 기업, 시장, 사유재산과 이에 따르는 생산수단의 책임, 경제 분야에 있어서 사람들의 자유로운 창의력이 기본적이고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인정하는 경제체제를 의미한다면, 대답은 분명히 긍정적이다. 그러나 만일 자본주의가 경제영역의 자유를 전체적이며 인간적인 자유와 동격에 둔다든가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것을 핵심으로 하는 자유와 똑같이 봄으로써, 정치구조 안에 제한을 받지 않는, 그런 사회체제를 의미한다면 대답은 부정적이다.”³⁴¹⁾

건전한 사회체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시장과 기업과 정부의 기능이 공동선을 향해야 하고 소비자들도 공동선을 향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자본은 노동의 주체인 인간과의 관계에서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³⁴²⁾ 따라서 인간은 자본의 사적 소유에만 집착해서는 안 되고, 자본이 인간 사회의 유용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자본의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기능을 고려하면, 자본을 철폐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올바르게 형성하고, 관리하고, 증식시킬 필요가 있다.

자본은 “인간이 자의로 쓸 수 있는 자연자원만이 아니라, 인간이 이를 자기의 필요에 따라 변형시키는 수단의 총체도 포함”³⁴³⁾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본은 “인간의 노동이 이룬 역사적 유산의 결과”³⁴⁴⁾이기에 축적된 노동이라고 할 수 있다. 축적된 노동으로서의 자본은 노동의 주체인 인간과의 관계에서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³⁴⁵⁾

따라서 자본증식의 주요 원천인 잉여소득은 유익한 재화를 생산하는 노동의 기회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재투자되거나,³⁴⁶⁾ 가치증대를 위해 새로운 형태의 노동을 창출하는데 투자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결실이 노동자들에게 공정하게 분배될 수 있어야 한다.³⁴⁷⁾ 그러므로 자본가들은 자기 배당금의 과도한 증가만을 추가할 때 비난받아야 하지만, 현명하고도 건전한 방향으로 자

340) 노동하는 인간, 7항.

341) 백주년, 42항.

342) 참조: 사십주년, 43항.

343) 노동하는 인간, 12항.

344) 노동하는 인간, 12항.

345) 참조: 사십주년, 43항.

346) 참조: 사십주년, 22항.

347) 참조: 사십주년, 23항.

본을 이끌어 간다면 이는 인류를 위한 사회사업을 하는 것이다.³⁴⁸⁾ 자본가는 투자를 통해 최대한 가능한 수익을 자신을 위해서만 찾지 말고, 노동자의 인격적 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또 노동자와 그의 가족 간의 유대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도 기꺼이 사용해야 한다.³⁴⁹⁾ “고용주들은 자본을 반드시 생산에 투자해야 하며, 그 투자에 있어서 먼저 공동선을 생각해야 할 윤리적 의무를 지닌다. 공동선은 참으로 유익한 재화를 생산함으로써, 고용을 확충하고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기 위한 우선적인 노력을 요구한다.”³⁵⁰⁾

4.3.2. 시장경제의 물신화에 대한 판단

시장경제라는 것은 시장에 의해서만 통제되고 인도되는 경제체제이기 때문에 재화의 생산과 분배의 질서는 시장의 자기 조정적인 메커니즘에 의존한다. 이러한 시장의 자기 조정적 메커니즘의 근거는 인간이 화폐이익을 최대화하려는 경향으로부터 도출된다.³⁵¹⁾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는 시장경제를 절대화시킴으로써, ‘시장 인간’이라는 왜곡된 이데올로기를 형성시킨다. 시장경제가 낳은 ‘시장 인간’은 극도로 왜곡된 인간상을 보여준다. 인간은 탐욕의 노예가 되고 인간의 욕망은 오직 경제적인 것만으로 채워진다. 인간의 자유는 맹목적인 본능에 의하지 않고 인격적인 내적 동기에 의하여 움직이기를 요구하지만, 오히려 이러한 인간은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시장경제의 노예가 된다.³⁵²⁾ 인류의 모든 지식은 이러한 자본주의의 도구로 이용되고, 모든 인류는 자본주의가 이루어 놓은 혁명의 성과 안에 놓이게 된다. 과학은 경제에 의한 착취를 준비하는데 유용한 기술을 제공하고, 철학은 자본주의의 물신적 이념적 기초를 제공해 준다. 문학과 예술은 자본주의의 화려함을 찬미하고 종교는 자본주의의 위대함을 숭배한다.³⁵³⁾

이제 자본주의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스스로 발전하며, 운동하는 자본의 힘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는 것처럼 보인

348) 참조: 김춘호, 가톨릭교회와 사회변혁, 왜관 분도출판사, 1998, 307.

349) 참조: 같은 책, 307.

350) 교황청 신앙교리성, 자유의 자각, 87항.

351) 참조: Karl Polanyi, ‘The Great Transformation: The Political and Economic Origins of Our Time, 91-93.

352) 참조: 사목현장, 17항.

353) 참조: Helmut Gollwitzer 헬무트 골비처, 자본주의 혁명, 88.

다. 이 자본주의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모든 가치들을 자신의 지배 아래 놓고, 급기야 인류의 삶을 파괴한다.

여기서 자본주의는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파괴시킬 뿐 아니라 자본가들의 인간성까지도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에 의하여 파괴하기 때문에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은 곧 인간이 해방되는 것이다. 엄밀히 말해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가 믿는 것은 ‘인간의 자유’가 아니라, ‘시장의 자유’, ‘자본의 자유’라고 할 수 있다. 즉,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는 시장이 정부의 간섭과 기타 양심, 윤리, 형평과 같은 시장 외부의 요소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때 최고의 효율성과 생산성 및 경쟁력 있는 경제를 갖추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³⁵⁴⁾ 거기서 보조성의 원리에 따른 국가의 개입은 철폐되어야 할 하나의 악으로 규정된다.

공동선의 실현을 위한 국가의 정당한 개입이 폐기 내지 축소되면서 사회적 약자인 가난한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더욱더 시장 경제 논리에 예속되고 인간으로서 지니는 자유를 온전히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인간의 자유는 고립된 생활이나 극도의 빈곤 속에서는 위축되지만, 사회생활의 속박과 인간의 연대성의 요구를 책임지고 수락하며 인간 공동체에 헌신 봉사할 때 더욱 강해진다.³⁵⁵⁾ 그러나 무제한적 자유경쟁을 자신의 존재근거로 상정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시장경제 체제는 인간의 자유를 왜곡시키고 있다.

이처럼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는 경쟁의 자유, 시장참여의 자유를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인간의 자유가 보다 온전히 행사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는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³⁵⁶⁾ 이러한 자유경쟁을 토대로 한 시장경제의 절대화는 시장의 자유를 위해서, 인간의 자유를 경제적 자유로 축소시키고, 시장자유 도구로 희생시키는 하나의 우상숭배이다.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시장은 모든 이에게 개방되어 있지 않다. 다시 말해 경제의 원활한 흐름을 촉진시킬 수 있는 부를 지닌 사람들은 시장의 참여가 자유로운 반면, 소비자가 되기 위해 충분한 돈을 갖고 있지 않은 가난한 사람들은 시장에서 배제된다.³⁵⁷⁾ “개인의 인격은 만물을 초월하고 그의 권리와 의무는 보편적이며 불가침하다.”³⁵⁸⁾고 교회는 가르치면서, “노동자

354) 참조: 니카노르 페를라스, 경제세계화가 교회에 미치는 영향, 이건(역), 1998, 서울대교구사회사목부노동사목위원회, 25.

355) 참조: 사목현장, 31항.

356) 참조: 교회와 경제 자유주의, 추교윤(역), 68-70.

357) 참조: 성경모, 인정 없는 경제와 하느님, 104.

들이 자유와 책임을 가진 인간으로 취급되지 못하고 단순한 수익의 도구로 취급되는 것과 같은 인간 존엄성을 해치는 모든 행위 등은 창조주께 대한 극도의 모욕이다.”³⁵⁹⁾라고 하였다. 인간 존엄성에 대한 자각의 눈으로 신자들이 시장경제의 우상화 논리에 휘말리지 않고 신앙의 관점에서 경제체제를 바라보고 교황들은 가르친다.

역대 교황들의 사회회칙에 따르면 신자유주의의 물신성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대안 공동체’를 건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공동체는 “인간을 사회생활의 객체나 수동적 의미를 지닌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 그 자체로 주체, 기초목적으로 존재하고 그렇게 남아있도록 하는”³⁶⁰⁾ 공동체이다. 또한 “사회생활에서 인간질서가 진리에 바탕을 두고 정의에 의해 실행되며, 타인을 위한 인간의 사랑으로 힘을 얻고 완전해지며, 자유 안에서 항상 새로워지고 더욱 바람직한 균형을 유지하는”³⁶¹⁾ 사회다. 이러한 사회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경제체제가 어떤 것인가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신자유주의의 부정적 산물인 물량주의와 비인간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실천은 일차적으로 내적 쇄신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이것은 그리스도교 신앙에 부합하는 생활양식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세상에 그리스도교 정신을 배양하고 세상구조를 현대 요청에 응하도록 더 완전한 형태로 혁신하는 것”³⁶²⁾이다.

358) 사목헌장, 26항.

359) 사목헌장, 27항.

360) 지상의 평화, 26항.

361) 지상의 평화, 37항.

362) 팔십주년, 50항.

5. 요약

돈과 상품, 자본이 최고의 가치라고 하는 신자유주의 우상숭배적 경향은 하느님의 모상으로서 창조된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고 인간을 물질의 도구로 전락시키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복음화를 이루기 위하여 신자유주의 물신숭배에 대응하여야 한다.

교회의 본질적 사명은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교회는 희망에 찬 생활을 하면서도 자주 공포와 불안 속에 떨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해야 한다. 종교적 색채를 띠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체제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 복음 선포는 새로운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이제 복음 선포는 자본주의 체제의 입장에서는 불합리한 무신론이지만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반우상적이고 반물신적인 실천을 대변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오늘날 자본주의적 우상과 물신숭배에 직접 부딪치지 않고서 복음을 선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현대 자본주의의 종교적 체계와 맞서는 정치적 전망 없이는 하느님의 문제를 신학적으로 규명할 수도 없게 되었다.³⁶³⁾

우선 교회가 내적으로 쇄신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신자유주의 물신숭배 현상에 대하여 올바르게 이해하고 올바르게 비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시장의 논리에 따라 철저하게 희생당하는 인간을 위하여 투신해야 할 것이다.

교회는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가 아니라, 도덕적인 문제에 관련된 모든 사회문제에 대하여 해석하고 재촉할 임무를 가지고 있으므로 잘못된 경제 문제에 대하여 관여한다. 사회·경제적 문제에 관하여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 것이 교회의 권리와 의무인 것이다. 현대 사회가 자유화, 세계화와 동시에 물신화 과정을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리스도교 교회의 본질적 소명인 복음화 활동은 단지 무신론과의 투쟁이 아니라, 무엇보다 자본과 시장의 물신화에 대한 투쟁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물신화와 의 싸움은 결코 단순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성서시대의 우상숭배와의 싸움보다도 더 강한 것인지도 모른다. 현대의 물신화는 우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경제적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을 찾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백성인 교회가 우선 물신주의로부터 해방되어야 할 것이며, 그리스도인 개개인이 복음에 비추어

363) 참조: Pablo Richard, *The Idols of Death and the God of Life*, 10-11.

판단과 실천 속에서 이상숭배적 요소들을 찾아내고 제거하는 노력을 통해 끊임없이 회개와 쇄신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신자유주의의 물신화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적으로 쇄신을 해야 하며 세상에 그리스도교 정신을 보급하고, 세상의 구조를 현대의 요청에 응하도록 더 완전한 형태로 혁신해야 할 것이다.³⁶⁴⁾

이제 경제적 신자유주의 정책은 자유화와 세계화 그리고 물신화로 진전되면서 많은 이들을 물질의 노예가 되게 하고, 경쟁력이 있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게 하며, 경쟁력이 없는 이들은 점점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무시당하게 만든다. 경제적 신자유주의는 자본의 무한축적이라는 경제적 논리를 인간에게 강요함으로써 인간을 자본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다. 이제 다음 장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시키는 경제적 자유주의 경제정책에 대한 실천적 대안으로서의 공유경제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364) 참조: 팔십주년, 50항.

제 5장 실천적 대안으로서의 ‘공유경제’

현세적 질서의 쇄신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의무라면, 오늘날 경제적 신자유주의의 심각한 폐단들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복음적 정의와 인류공동선을 토대로 하여 가톨릭 사회교리의 정신에 충실한 새로운 경제체제로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공유경제’를 진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앞에서 살펴 본 대로 경제적 신자유주의는 무제한 자유경쟁을 토대로 하는 자본의 논리를 강조하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파괴한다.³⁶⁵⁾

‘공유경제’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존중하면서 경제적 신자유주의와 마찬가지로 사유재산권과 자유 시장 질서를 존중하는 동시에 윤리적으로 그리스도교 복음과 사회정의의 개념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신자유주의의 대안 경제로서 주목받고 있다.³⁶⁶⁾ 제 5장에서는 우선 ‘공유경제’에 대한 일반적 이해와 신학적 이해 그리고 실천적인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공유경제’의 전망과 과제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공유경제’의 형성과 동향

1.1. 공유경제의 형성과정

‘공유경제’의 구체적인 실현은 1991년, 빈부의 격차가 심한 브라질에서 시작되었다.³⁶⁷⁾ ‘공유경제’가 본격적으로 태동하기 전에, 그 준비과정으로 이미 복음적 ‘소도시’(Cittadella)들이 먼저 형성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소도시’란 복음적 삶을 실현하고자 하는 남녀노소로 이루어진 가정들과 청년들이 그리스도교적 정신으로 돌아가 서로 간의 사랑으로 일치를 이루는 작은 마을을 말한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 소도시에 와서 보고 하느님의 현존을 확인하고 그분의 영광을 찬미하며, 복음적 삶을 추구하게 된다. 그래서 그 ‘소도시’는 비록 작지만 사람들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도록 거의 모든 사회적 기능을 갖추고 있다. 그곳은 기도하며 일하는 삶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집과 성당, 학교, 농장, 공장과 상점들이 함께 자리 잡고 있다. 이런 ‘소도시’는 1964년 처음으로 이탈

365) 참조: Jean Yves Calves, L'Église devant le libéralisme économique, 68-70.

366) 참조: 국제마리아의 사업회, 그물, 1995(10), 4.

367) 참조: C. Lubich. L'economia di comunione - storia e profezia, Città Nuova, 2001, 9-14.

리아에 있는 로빠아노(Loppiano)에 건설되었는데, 점차 세계 곳곳에 여러 ‘소도시’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이러한 ‘소도시’들에서는 이미 사도행전의 초기교회 공동체처럼 재물의 공유를 나름대로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거시적 안목에서 볼 때, ‘공유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³⁶⁸⁾

또한 ‘공유경제’는 회칙 「백주년」의 영향을 받았다. 이는 「새로운 사태」(Rerum Novarum. 1891.5.15) 반포 백주년을 기념하는 전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회칙이다. 이 회칙에서 지상 재화와 노동의 가치와 경제에 대한 전통적 가톨릭교회의 사회교리가 재천명되었으며, 제 3세계와 관련된 국제 시장문제를 제기했다. 요한 바오로 2세는 시장과 기업의 긍정적 가치를 인정하면서 동시에 공동선을 지향할 것을 요구하며 아울러 생태계 문제도 지적하였다.³⁶⁹⁾ 이 회칙은 현대 세계의 경제 사회적 상황과 정치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교회의 사명에 대하여 말하면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구축할 것을 제안하였다.³⁷⁰⁾ 이러한 새로운 제안을 계기로 하여 ‘공유경제’가 1991년에 브라질에서 탄생하게 되었다.

대개의 발전도상국들이 그러하듯이 브라질 경제도 매우 불평등한 구조를 갖고 있다. 소수만이 부자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극빈자들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고통을 겪고 있었다. 이러한 경제적 불평등을 없애고 함께 잘 사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공유경제’가 생겨나게 되었다.

‘공유경제’는 처음 실시되었을 때, 상파울로 교외에 자리 잡은 ‘아라첼리’(Araceli)라는 이름의 ‘소도시’ 부근에서 고용과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생산적 기업체로 시작되었지만 곧 이어 인접한 이웃 나라들, 유럽과 세계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새로운 기업들이 공유원리에 따라 경제활동을 하고자 생겨났다. 기존의 기업들도 이 원리를 따르는 경영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이렇게 하여 ‘공유경제’는 큰 호응을 얻게 되었다. 전 세계에서 2005년 현재 735개의 여러 형태의 기업들이 이 공유원리에 따라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³⁷¹⁾

‘공유경제’의 원리를 따라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가들은 일반 기업들이 하고 있는 것과 다른 방법으로 사업을 한다. 그렇다고 그들이 전혀 새로운 사업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들은 기업을 이끌어 가는 새로운 방식

368) 2006년 현재 전 세계 25개국에 33개의 복음적 ‘소도시’가 형성되어 있다.(참조: <http://www.focolare.org/home> little town - model owns in the world.

369) 참조: 백주년, 43항.

370) 참조: 백주년, 58항.

371) 참조: C. Lubich. L'economia di comunione - storia e profezia, 31-32.

을 통해서 주식회사이든 협동조합이나 다른 형태의 기업이든 간에 기존의 관습적 사업 방법을 전혀 새로운 차원에서 전개하고 있다. ‘공유경제’의 원리를 따르는 기업들은 정확하게 실정법을 준수하면서 기업 내외에서 상호 신뢰하는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가운데 생산 활동을 통해서 이익을 얻고 있다.

1.2. 발전과정

‘공유경제’는 1991년에 시작되어 10여 년의 세계 역사 안에서 큰 발전을 보게 되었으며, 큰 성공을 거두었다. ‘공유경제’가 생겨 난지 2년만인 1993년에는 ‘공유경제’의 원리를 따라 운영하는 회사가 세계 38개 지역의 328개의 회사로 증가하였다. 이 중 123개의 회사는 남미의 브라질, 아르헨티나, 베네주엘라에 있으며, 이탈리아의 93개 회사를 포함하여 유럽에는 161개의 회사로 증가하였다. 이 중에서 46개는 서유럽에, 22개는 동유럽에 있다. 아시아에는 22개의 회사가 있으며 북미에는 21개가 있다. 그리고 카메룬에 하나의 회사가 있다.

경영 성과를 보면 유럽의 2개의 회사와 브라질의 한 회사는 75만 달러에서 7백5십만 달러의 순수이익금을 올렸고, 130개의 회사는 2만4천 달러에서 75만 달러의 순이익금을 냈다. 이 중 116개의 회사는 소비상품을 생산하고, 221개의 회사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중 75개의 회사는 유통계열 회사이며, 17개는 학교이고, 45개는 회계 사무실, 컴퓨터를 통한 보조와 경영에 관한 회사이다. 건축 사무실, 엔지니어 회사가 18개이고 20개의 병원, 5개의 법률 사무소가 있다. 이들 ‘공유경제’의 회사들은 심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그 이윤을 기부하였다. 84개의 회사들은 주식 가치의 7% 정도가 증가한 그들의 이익을 기부하였다. 일반회사들이 경제사정이 어려울 때 이익금을 기부한다는 것은 어려워하는 일이지만, 공유경제로 기업하는 회사들은 이익금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1994년에는 기업이나 생산 활동에 있어서 그 수가 증가했다. 1993년에 328개였는데, 1994년에는 403개의 기업이 되었다. 이 중 120개의 기업은 새 기업이다. 반면에 그 중 45개의 기업은 문을 닫았다. 이는 ‘공유경제’의 원리로 기업을 시작하였지만, 그 중에서 14%가 실패한 결과이다. 그러나 계속해서 기업의 수가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볼 때 23%의 증가를 보였다. 이 403개의 기업이 활동하고 있는 지역은 다음과 같다. 남미에 139개, 북미에 27개, 유럽에 208개(이탈리아에 96개, 서유럽의 다른 국가들에 90개, 동유럽에 22개), 아시아

에 22개, 아프리카에 2개의 기업이 있다. 동업자의 수는 1993년 1,362명에서 1994년에는 3,303명으로 증가했으며, 고용인들은 경제침체에도 불구하고 2,505명에서 5,532명으로 증가했다. 이탈리아의 기업가들은 ‘같이 성장하기(Crescere Insieme)’라는 연합회를 만들었다. 이것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기술, 전문성, 마케팅 등에 대해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상의하기 위한 것이다.³⁷²⁾ 다른 연합단체들도 이와 유사한 계획을 돕기 위하여 창설되었다. 제 3세계의 발전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일치된 세상을 위한 협회(Associazione per un Mondo Unito)’가 창설되었다.³⁷³⁾

‘공유경제’의 원리에 따라 그들의 경영방식을 혁신하고자 남미와 유럽의 수많은 ‘공유경제’ 기업들이 활기를 띠고 있다. 1998년 말까지 654개의 기업들과 91개의 소기업들이 ‘공유경제’를 실천하고 있다. 이 기업들은 30개국 이상의 나라에 여러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데, 164개 기업은 제조 분야에서, 189개 기업은 산업 분야에서, 그리고 301개 기업은 서비스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 남미에는 200개 이상의 기업이, 유럽에는 300개 이상의 기업이 있다. 이탈리아에 150개, 독일에 50개의 기업이 있고 동유럽에도 약간의 기업이 있다. 북미도 소수의 기업이 있고 아시아, 아프리카, 호주에도 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연간매출 2천만 달러 미만의 중소기업들이다. 이탈리아에서는 3명의 기능공이 일하던 작은 기업이 불과 몇 년 사이에 260명을 고용하는 기업으로 발전한 예도 있다.

유럽지역과 남미에서는 ‘공유경제’ 기업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판매 촉진 출판물을 발간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솔링겐 출신의 23개 기업의 사람들이 ‘협력기금’을 설립하였으며, 한 상업은행은 동유럽과 개발투자가 필요한 세계의 다른 지역의 ‘공유경제’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브라질 상파울로 교외에 있는 아라첼리 ‘소도시’ 가까이에 ‘스파르타코’ 공업 단지가 개발되었다. 5만 평방미터의 이 단지는 합자회사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이 회사는 2천명 이상의 주주들이 있는데 대부분 브라질 사람들이다. 이 회사는 단지를 개발하여 1998년말 까지 12개의 사업체를 입주시켰다.

이탈리아에 있는 세계 ‘공유경제’ 사무국에서 집계한 대륙별 ‘공유경제’ 현황을 살펴보면 표-9와 같다. 이 표에 의하면 1991년에 시작된 ‘공유경제’가 10여년이 지나는 동안 점차적으로 큰 발전을 하였으며, 주로 유럽과 아메리카에서

372) 참조: Alberto Ferrucci, 1991년 회사의 국가적 사회적 발전, 1994, 16.

373) 참조: T. Sorgi, Zaghi, 내어주는 문화, 새인류, 1992, 62.

성공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공유경제’로 운영되는 사업체는 유럽에 63%, 아시아에 4%, 아메리카에 33%가 있으며, 아프리카에는 4개, 호주에는 5개의 기업체가 있다. 이중에는 상업 분야 20%, 생산 분야 25%, 서비스 분야 51% 그리고 종합 기업 4%이다. 1991년 이후 15년간의 경험을 통해 보건대 ‘공유경제’가 점차 세계 각 지역에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³⁷⁴⁾

표-9 대륙별 ‘공유경제’사업체 현황(세계 ‘공유경제’사무국)

대륙 년도	유 럽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호 주	총계
1992	132	10		99	1	242
1993	161	19	1	144	3	328
1994	208	23	2	166	3	402
1995	336	23	6	184	5	554
1996	430	32	14	220	7	703
1997	448	37	11	244	7	747
1998	477	35	15	220	7	754
1999	478	36	11	221	15	761
2000	469	38	13	217	15	752
2001	481	40	9	224	15	769
2002	486	47	9	230	6	778
2003	469	42	9	269	8	797
2004	455	42	4	250	5	756
2005	458	33	1	241	2	735

공유경제를 통해 도움을 받은 전 세계의 빈곤자들을 살펴보면 유럽에 14%, 아시아에 20% 아프리카에 19%, 아메리카에 32% 그리고 그 외의 협력자들에게 15%이다. 공유경제에서 빈곤층이 사용한 총금액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음식비로 49%, 장학금으로 20%, 치료비로 17%, 거주비로 11%, 그 기타 3%이다. ‘새로운 사람들’ 양성을 목적으로 기업들이 보내는 금액의 50%는 양성 교육 운영과 필요한 재료들을 마련하는데 쓰였다.³⁷⁵⁾

표-10은 ‘공유경제’ 사업체 분야별 현황이다. 상업분야에서는 의류, 식품, 가구, 자동차 서적, 교육재, 의료재, 기타재 등 8개 분야에서 148개의 사업체가 있고, 생산분야에서는 의류, 농산물, 수공업, 식품, 가구, 농자재, 건축재, 인쇄, 기계, 플라스틱, 비디오, 기타 등 12개 분야에서 188개의 사업체가 있고, 서비스 분야에서도 전문 상담, 회계, 사진, 부동산업, 일반 안내, 변호사, 관리사,

374) <http://www.edc-online.org/testi-PDF/edc-2005.pdf>

375) <http://www.edc-online.org/it/diffusione.htm>

의사, 기획사, 쉼터, 학원, 전화국, 전기, 전자, 운송, 여행업, 기타 등 17개 분야에서 366개의 사업체가 있어서 총 735개의 사업체가 있다. 이것으로 보아 다방면에서 공유경제가 실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10 ‘공유경제’ 사업체 분야별 현황(세계 ‘공유경제’사무국 제공)

상업 분야		생산 분야		서비스 분야		종합 분야	
종류	개수	종류	개수	종류	개수	종류	개수
의류	23	의류	18	전문상담	88		33
식품	25	농산물	24	회계	7		
가구	10	수공업	3	사진	3		
자동차	4	식품	33	부동산업	4		
서적	9	가구	17	일반안내	17		
교육재	3	농자재	24	변호사	8		
의료재	16	건축재	25	관리사	15		
기타재	58	인쇄	7	의사	57		
		기계	15	기획사	16		
		플라스틱	7	쉼터	5		
		비디오	4	학원	33		
		기타	7	전화국	1		
				전기	7		
				전자	3		
				운송	3		
				여행업	18		
				기타	81		
상업 분야	148	생산분야	188	서비스 분야	366	총 계	735

1.3. 공유경제의 목표

‘공유경제’는 가난을 제거하여 평온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다. 그래서 ‘공유경제’의 목표는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이 가급적 감소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 원리는 경제영역에서의 창조성, 생산에서의 책임감, 사유재산, 시장경제의 역할을 인정하면서도 복음적 나눔을 경제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주는 문화’에 기반을 두고 있다.³⁷⁶⁾ 이 ‘주는 문화’는 각 사람과 회사들이 철저

히 자신들에게 필수적인 것들만 사용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윤은 거지에게 동냥하는 것처럼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재물을 공유하고 있다가 사회 보조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분배하는 것이다. 이익은 기업 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내놓고 기금을 조성한다. 이익을 공동으로 출연하여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지녔던 정신을 실현하는 것이다. 공동으로 내어 놓은 이익금은 다음과 같이 사용된다.

첫째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사용한다. 그 이익금은 일자리가 없는 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한다.

두 번째는 이익금을 자신들의 회사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사용한다. 만일 회사가 도산한다면 일터를 잃는 처지에 놓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이익금을 ‘공유경제’의 원리를 사람들에게 교육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만일 ‘공유경제’의 원리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증가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공유경제’를 이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새로운 사람들’이 있어야 하며, ‘새로운 사람들’을 교육하기 위한 ‘소도시’가 요청된다. 또한 이런 ‘소도시’는 ‘공유경제’의 원리에 따라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소도시’는 ‘공유경제’의 원리에 따라 경제 활동의 모범을 보여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³⁷⁷⁾

‘공유경제’는 인간을 중심으로 한 경제활동을 펼친다. 이 활동은 인간이 이윤이나 물질에 의하여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이윤이나 물질을 지배하고 상호간에 봉사할 수 있도록 이윤이나 물질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출연하는 것이다. 이러한 ‘나눔 내지 기부’를 통하여 세상의 재화는 모두 하느님의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모든 사람들이 재화를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한다.

하느님께서서는 만민의 아버지로서, 부유한 자본가나 가난한 노동자를 구분하지 않으시고 모든 이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연의 재화와 개개인이 가진 정신적인 재능, 기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가져온 영적인 모든 은총들이 다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 하느님께서서는 물적이며 영적인 보화를 모든 인류의 행복과 구원을 위해 베푸신다. 따라서 자연의 재화와 은총의 보화는 모두 하느님이

376) 참조: T. Sorgi, 내어주는 문화, 새 인류, 80/81, 1992, 55-91.

377) 참조: 국제마리아의 사업회, 그물, 1995(10), 17.

주신 인류 공동의 유산이다.³⁷⁸⁾ 그러한 하느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유경제’는 인간이 행하는 모든 경제활동 안에서 하느님의 자비와 구원을 공유하도록 일깨우고 있다. 이러한 하느님의 자비와 구원에 대한 공유는 ‘공유경제’의 최종 목적이며, 공동선을 실천함으로써 하느님의 나라를 세상에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것이다.

‘공유경제’의 개념은 재산의 공유가 도달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또한 기업체 내에서도 먼저 하느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이윤을 얻도록 하라는 요청이다. ‘공유경제’는 ‘인간을 위한 경제 만들기’를 목표로 한다. 많은 사람들이 ‘공유경제’의 원리를 통하여 개인적으로 또는 단체적으로 ‘인간을 위한 경제 만들기’에 동참하고 있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것이다. ‘공유경제’의 원리로 운영되는 기업들은 모든 활동에 있어서 인간에게 필요하고, 인간이 추구해야 할 것들에 관심의 초점을 맞추려고 하며, 그들은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의 이익을 관심을 두고 있다. 또한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시장 안에서 활동하며 외형적으로는 여타의 다른 기업과 같은 형태를 띠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공유경제’의 목표인 ‘인간을 위한 경제 만들기’를 위하여 그들의 모든 경제활동을 공유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공유경제’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가진 재산, 능력 등을 서로 나누기를 희망하면서, 형태는 다르지만 같은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공유할 것을 추구하고 있다. 일반적인 경제활동의 사례에서 많은 경우 사회 계층 간 또는 이익 집단 간에 갈등 관계가 형성되기 쉽다. 그러나 ‘공유원리’에 따라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서로 반목하는 관계를 지양한다.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한 마음과 정신으로 일하기 때문이다.

‘공유경제’의 기업들은 서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때 이익의 일부를 할애하여 긴급한 필요를 도와주며, 기업내부의 인간관계에서는 물론 소비자, 경쟁기업, 납품업자, 지역 공동체 등과도 신뢰의 관계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이 기업들은 ‘주는 문화’, ‘평화의 문화’, 법률을 준수하는 문화, 그리고 기업의 안과 밖의 환경에도 주의를 기울이는 문화를 창출하고 확산시키고 있다.³⁷⁹⁾

이렇게 ‘공유경제’는 ‘인간을 위한 경제 만들기’를 실천하고 있으며,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에는 궁핍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사도행전 4, 34)고 한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정신과 생활로 돌아가는 것을 목표

378) 참조: 새로운 사태, 18항.

379) 참조: C. Lubich, L'economia di comunione - storia e profezia, 33-34.

로 한다. 장차 ‘공유경제’의 원리로 운영되는 기업이 많아질수록 그 만큼 빈곤 없는 세계가 실현될 것이다. 따라서 이 ‘공유경제’는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세상이 시장경제에 바탕을 둔 자본주의 경제체제 앞에서 한계를 느끼고 있는 이 시대에 대안으로 내놓아야 할 합당하고 심오한 경제원리라고 할 수 있다.³⁸⁰⁾

1.4. 공유경제의 특성

‘공유경제’의 성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공유경제’는 주는 문화에 바탕을 두고 있다. 여기에서 ‘주는 문화’의 의미는 ‘소유 문화’에 바탕을 둔 소비주의 경제와는 전혀 다르다. ‘주는 문화’란 누가 얼마나 소유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얼마나 내어 주느냐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이다. 사랑이신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된 인간은 사랑 안에서 남에게 내어주는 것으로부터 그들의 실존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³⁸¹⁾ 이러한 욕구는 신앙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그들 존재의 가장 깊숙한 마음속에 있다.³⁸²⁾

‘공유경제’는 단순히 박애심이나 인류애로부터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에 따른 인간의 주체성과 목적성에 근거하는 것이다. ‘공유경제’는 이러한 사고를 바탕으로 하며, 브라질, 남미, 유럽 등의 여러 지역에서 실천적인 경험들이 확산되고 보편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공유경제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이 원리에 따라 살아갈고자 하는 새로운 사람들을 양성했을 때 가능할 것이다.

(2) ‘공유경제’에 참여하는 기업은 일반 기업들의 경영방식과 다르다. ‘공유경제’의 기업들은 주식회사이든 협동조합이든 그 외형에 있어 종래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관습적 경영방식과는 새로운 면모를 보여준다. 예를 들어 ‘공유경제’ 기업들은 법률을 엄격히 준수하고 노동자의 권리는 물론 소비자, 경쟁기업, 사회, 국가 그리고 환경의 권리를 존중하는 가운데 그들의 생산 활동을 통해 소득을 얻도록 한다든지, 효율적 경영을 통하여 스스로 이

380) 참조: 국제마리아의 사업회, 그물, 1995(10), 18.

381) 참조: C. Lubich, L'economia di comunione - storia e profezia, 51.

382) 참조: 사목현장, 24항.

윤을 증식할 뿐 아니라, 이익의 많은 부분을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또는 빈곤한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사용하기도 한다. 이렇게 ‘공유경제’는 모든 경제 주체들과의 연대와 나눔을 통하여 효율성을 제고하려한다. 그러한 기업들은 인간 존엄성과 인류 공동체를 존중하는 가운데 자본을 축적하고 이윤의 증대를 도모하는 경영방식을 취한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3) ‘공유경제’에 참여하는 기업은 고용주와 피고용자들 사이에 긴밀한 일치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치 안에서 기업의 내부와 외부에 긍정적인 상호 인간관계가 형성된다. 그리고 기업 활동에 있어 인간관계는 모든 경영활동에서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공유경제’의 기업들은 노사 간의 화해와 일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창의력 증진, 생산기법 및 기술혁신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하여 비용절감과 높은 효율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4) ‘공유경제’는 무미건조한 물질생활을 역동적이고 도덕적인 경제생활로 전환시키고 있다.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일용품, 식품, 서비스 등과 대면하고, 교환 수단인 돈과 관계하면서 물질적인 것에 지나치게 예속되는 경향을 갖는다. 이런 태도와 자세는 타인을 늘 부정적 경쟁자로서 보거나 제거되어야 할 상대로 간주한다. 그러나 ‘공유경제’에 참여하는 기업의 경영자들과 노동자들은 현대 경제학의 원리나 관행과는 다른 새로운 경제문화의 원리에 의해서 경제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것은 곧 소유 문화가 아닌 공유의 원리에 의한 경제활동이다. 자신의 소유 재물을 이웃에게 내어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한 표현이다. ‘주는 문화’는 개인적이거나 집단적이라는 개념이 아닌 공유의 개념이다. ‘주는 문화’는 개인주의에서 유래한 자선사업의 형태나 복지 분배방식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 존재의 본질을 공유하는 것이며, 인간의 존엄성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인간 존엄성은 인간이 지닌 가장 고귀한 선이다. 인간은 지상에 존재하는 만물의 중심이고 정점이다.³⁸³⁾ 그러므로 한 인간의 가치는 모든 물질세계를 초월한다. 인간의 가치는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소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무엇이나 하는 존재가치에서 나온다. 세상의 어떠한 가치도 인격 그 자체인 인간의 가치를 능가하지 못한다. 주는 삶의 선택은 존엄한 인간의 가치를 공유하려는 태도이다.

383) 참조: 사목현장, 12항.

(5) 내어주는 모든 행위가 ‘주는 문화’를 만드는 것은 아니다. 다른 사람을 지배할 욕심으로 줄 수도 있고, 주는 행위를 통하여 개인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경우도 있다. 실상 그것은 진정한 나눔이 아니라 주는 사람의 이기적인 표현이며 받는 사람에게는 모욕과 멸시가 될 수도 있다. 사람들을 기회주의적으로 또는 편의주의적으로 이용하려는 행태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진정한 나눔이란 상호간에 깊은 존경심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하여 ‘공유경제’는 개인적인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정당한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가난한 사람들의 고유한 인간적 가능성을 계발시켜 스스로 일어서도록 도와주고, 그들에게 고용기회를 제공하면서 그들의 삶의 조건이 향상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공유의 원리로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약간의 자선행위를 통해서 빈곤한 사람들을 단순히 돕는 자가 아니다. 그들은 자신의 기업 전체의 이익을 공동으로 자유롭게 내어놓는 삶을 구현하고 있다. 그들은 서로 상대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구체적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 ‘공유경제’의 근본적인 목적은 보다 전인적 복지의 차원에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는데 있다. ‘공유경제’는 오늘날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소유 문화’에 대응하여 ‘주는 문화’ 곧 사랑의 문화를 확립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공유경제’는 주는 삶에 바탕을 두며, 그러한 삶은 자유로운 선택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공유의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보다 평화롭고 번영하는 세계가 보장될 것이다. ‘공유경제’는 모든 노동과 경제활동의 결실을 함께 일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경영인으로서의 능력을 발휘하여 생산성 있는 기업체를 설립하며, 거기서 나오는 이윤을 자신의 기업에만 재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한다면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도와주는 데에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공유경제’는 이익을 축적하기보다는 자신의 경제활동을 ‘주는 문화’에 중점을 두도록 하는 것이며, 그러한 삶이 강제가 아닌 자유로운 선택에 의존한다는데 ‘공유경제’의 의의가 있다.³⁸⁴⁾ ‘공유경제’는 경제 주체들이 시장경제 질서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여 경제활동을 하는 것과는 다르다. ‘공유경제’에서는 다른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내어 주는 삶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자유로운 선택이라야 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공유경제’에 대한 제안은 곧 하느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의 초청이다. 그러한 선택은 곧 하느님을 선택하는 것이고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384) 참조: 국제마리아의 사업회, 그물, 1995(11), 6.

며,³⁸⁵⁾ 그러한 삶의 선택은 기업 경영에 있어 하느님 나라를 구현하고자 하는 태도이다.³⁸⁶⁾ 이러한 점에서 ‘공유경제’는 기존의 경제와는 출발과 그 과정이 대단히 상이하다.³⁸⁷⁾

1.5. 연구 동향

뜻있는 일부 경제학자들이 ‘공유경제’의 원리가 오늘날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경제이론의 근본적 바탕인 개인주의적 구조를 탈피하여 주도적 공헌을 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개인주의적 구조들은 사회 경제적 생활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공유경제’에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참여하여 그들이 ‘공유경제’의 이론적이고 실질적인 적용을 시도해야 한다. ‘공유경제’는 공유의 원리에 바탕을 둔 경제 사상을 가진 새로운 학문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많은 학술 논문들이 발표되고 있다.

발표된 경제학적 논문들은 ‘공유경제’에 대한 새로운 사상들을 발전시키고 있다. ‘공유경제’가 대두된 이후 1993년에 2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그 중 하나는 이태리 말파 대학에서 “나눔의 경제와 사업체 안에서의 적용에 관한 논문”³⁸⁸⁾라는 논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공유경제’는 나눔의 경제이며 나눔의 경제인 ‘공유경제’를 어떻게 사업체 안에서 적용시킬 것인가에 대하여 논하였으며, 또 다른 하나는 독일에서 베아테 노박(Nowak Beate)이 “실질적인 업무 안에서 ‘공유경제개념’에 따른 대안”(Konzeptionelle Ideen gemaess der Idee ‘Die Wirtschaft der Gemeinschaft’ anhand der Arbeit in der Praxis)이라는 논문을 발표하였다.³⁸⁹⁾

1994년에는 6편, 1995년에는 5편, 1996년에는 7편, 1997년에는 18편, 1998년에는 15편, 1999년에는 15편, 2000년에는 21편, 2001년에는 14편, 2002년에는 32편, 2003년에는 34편, 2004년에는 35편, 2005년에는 27편, 2006년 8월까지 7편 등 세계 공유경제 사무국에 집계된 논문은 총 238편이다.

영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등 여러 언어권에서 발표된 이 논문들

385) 참조: 같은 책, 17.

386) 참조: 국제마리아의 사업회, 그물, 1995(11), 8.

387) 참조: 같은 책, 8.

388) Maria Rita Baldaccino, Economy Sharing and its implions on corporate reporting, The university of malta, 1993.

389) 참조: <http://www.ecodicom.net/>

은 현대 경제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진정한 경제활동이 되도록 해야 하며, ‘공유경제’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더욱 많이 육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유경제’는 기존의 경제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원리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유경제’를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대 경제학의 틀 안에서 ‘공유경제’의 적용과 실행을 상세하게 설명해야 할 것이다.

기존의 경제 이론들은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인간에 대한, 그리고 사회에 대한 개인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 또한 그것은 일반적으로 어떤 것이 선택된 이유가 아니라 방법에 관심을 두고 있다. 즉 그것은 가치와 동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점에 대하여 ‘공유경제’는 인간 상호관계와 구성원간의 동기 유발에 대한 질적 가치에 우선권을 두고 있기 때문에, 공유원리를 따라 전개되는 경제활동들은 기존의 경제활동과는 상이할 수밖에 없다. ‘공유경제’는 필연적으로 사업이나 생산의 분야에서만이 아니라 경제생활의 모든 면에서 중요시된다. 그것은 또한 필연적으로 모든 사람을 중요하게 여긴다. 기업가들이나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어떤 상품을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구매자들 까지도 ‘공유경제’의 정착을 위해 초대받고 있다.

또한 ‘공유경제’는 일반적인 경제학, 사회학, 정치학 등의 분야에서도 연구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세계적 차원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환전(換錢)관리에 관한 법 등에 대해서도 연구해야 한다. 저개발지역에 있는 회사를 돕기 위해 한국에 있는 회사가 다른 국가에 있는 회사로 자금을 보낼 필요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공유경제’는 실현 불가능한 이상향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설득하기 위하여 경제 전문가들의 연구가 요청된다. 경제 전문가들은 ‘공유경제’에 대한 직감, 희망, 예상, 분석에 의한 해답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01년도에 세계 ‘공유경제’ 사무국³⁹⁰⁾에서는 이태리 로카 디 빠빠(Rocca Di Papa)에서 ‘공유경제’ 탄생 10주년을 맞이하여 ‘공유경제’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 세미나에서는 소유 문화에 기초를 둔 소비주의 경제와는 달리 ‘공유경제’는 함께 소유물을 나누는 문화에 바탕을 둔 경제임을 강조하였다.

‘공유경제’는 어렵고 험난하며 영웅적인 행위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사랑이신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된 모든 인간은 내어주고, 사랑하는 것에서 자아실현을 이루기 때문에 ‘나눔의 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은 인간의 당연한 의무에

390) 세계 ‘공유경제’사무국 주소: Via Frascati, 306, 00040 Rocca Di Papa, Roma,

속한다. 특히 각 개인의 인격은 남들에게 개방적이며 동시에 남에게 선물이 되는 과정을 통해서 발전한다. ‘공유경제’에 관한 연구 논문들은 이 방향을 주목하고 있으며, 상응한 주제에 관한 논문, 예를 들면 경제에 있어서의 인간 상호관계의 역할이라든가 신용에 관해서, 또한 행복과 이익에 관한 것과 같은 심도 있는 연구 논문들이 발표되어야 하겠다. 공유경제에 대한 올바른 연구를 위해서는 다양한 영역의 학자들이 교류하면서 바람직한 결과물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2. ‘공유경제’에 대한 가톨릭교회의 가르침

‘공유경제’의 근거는 성경과 교회문헌, 특히 역대 교황들의 사회회칙에서 발견된다. 본란에서는 ‘공유경제’의 근거와 배경이 되는 성경과 교부문헌, 그리고 교회문헌 등의 가르침을 살펴보고자 한다.

2.1. 성경과 교부들의 가르침

구약성경에는 재화와 부(富)에 대하여 두 가지 태도가 발견된다. 우선적으로 물질적 재화는 삶에 필요한 것이기에 부유하거나 사치스러운 것이 아닌 한 물질적 풍요는 하느님이 내려주신 축복이다. 다른 한편 지혜문학적 관점에서 보면 가난은 우매함 또는 근면성 부족 등의 부정적 결과로 묘사되기도 한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사기, 고리대금업, 착취, 추잡한 부정을 비난한다. 구약성경의 전통에서 비록 억압받고 약하고 빈곤한 처지가 악으로 간주되기도 하지만, 세상 사물을 인간에게 선물로 주신 하느님 앞에서 인간은 재화를 관리하고 나누어야 할 의무를 지닌다. 가난은 창조의 질서를 받아들이고 인식하기 위한 길을 열어준다. 그러나 부유한 사람은 그의 믿음을 하느님이 아닌 물질적 소유욕 안에 두기 쉽다. 겸손한 태도로 하느님 안에서 믿음을 가질 때 인간은 비로소 그 모든 소유물들의 첫 번째 주인이 하느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하여 그들의 경제적 소유물을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데 사용하게 된다.

예수께서는 재물의 사용에 있어서 구약의 전통을 따른다. 그분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의 왕국을 건설하고, 정의, 우애, 일치 그리고 나눔 속에서 인간사회 생활의 새로운 모습을 소개한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한 자들을 돕고, 억압받는 자를 해방시키고, 괴로워 우는 자를 위로해야 할 소명을 수행해야 한다. 한 인간이 하느님께 선물로 받은 물질적 재화를 선하게 관리하는 것은 자신과 모든 이에게 정의를 실천하는 일이다. 달란트의 비유(마태, 25, 14-30)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달란트는 올바르게 보존되고, 활용되며, 증식되어야 한다. 경제활동은 인간과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이러한 활동은 보다 인간적인 사랑과 결속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고, 다가올 세상을 예견하는 새로운 인간성을 성숙시키는데 공헌할 수 있을 것이다.³⁹¹⁾ 예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 믿는 자들

은 하느님 앞에서 풍요로워질 것이라고 가르친다.(마르코, 11, 23-24) 경제는 인간과 사회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발전의 도구로서 활용될 때 유익한 것이다.

한편 인간이 경제적 재화를 합법적으로 소유하고 있더라도 그것은 항상 보편적 목적을 갖는다. 모든 소유물은 하느님의 것이기에 그분의 뜻대로 관리하고 궁극적으로 그분께 돌려드려야 하는 보편적 목적을 갖는다. 재물만을 위해 사는 일은 모든 악의 근원이다. 교회의 교부들의 사상에서 볼 때 인간은 하느님께서 위탁하신 재화의 관리자이다. 알렉산드리아의 성 클레멘스는 “만약 우리가 아무 것도 소유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웃에게 좋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³⁹²⁾라고 했다. 요한 금구 성인은 “부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부를 나눔으로 해서 공덕을 얻을 수 있다.”³⁹³⁾고 말했다. 부에 대한 무절제한 애착과 축적은 죄악의 근원이다. 성 바실리오스는 “부는 샘에서 흘러나오는 물과 같은 것이기에, 부자들은 그들의 창고 문을 열라. 물을 자주 빼내면 빼낼수록 더욱 샘물은 맑아지고, 샘을 사용하지 않은 채로 두면 오염될 것이다.”³⁹⁴⁾라고 하였다. 성 그레고리오는 “부유한 자는 단지 그가 소유한 것의 관리자일 뿐이다. 궁핍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야말로 겸손하게 수행해야 할 과업이다. 재화는 그것들을 분배하는 사람에게 속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혼자만을 위해 부를 보유하는 사람은 옳지 못하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은 빛을 갚는 것을 의미한다.”³⁹⁵⁾고 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상의 모든 소유물은 관리하고 나눔을 갖도록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러므로 모든 경제활동과 물질적 진보는 인간과 사회를 위하여 봉사해야 하며, 삶의 질을 발전시키는 도구로서 활용되어야 한다. 봉사와 나눔을 위하여 부여받은 소유물을 올바르게 활용하고 보존하며 증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부를 소유한 사람은 그 소유한 것의 관리자일 뿐이다. 따라서 그것을 필요로 하는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 이 세상의 모든 소유물들은 그 주인이신 하느님으로부터 인간에게

391) 참조: 노동하는 인간, 25-27항.

392) Clement of Alexandria, Homily what rich man will be saved?, 9.

393) Saint John Chrysostom, Homiliae XX I de Statuis ad Populum Antiochenum Habitaе, 2, 6-8.

394) Saint Basil, The Great, Homilia in Illud Lucae, Destruam Horrea Mea, 5. 31, 271.

395) Saint Gregory, The Great, Regula Pastoralis, 3, 21. "Quomodo admonendi qui aliena non appetunt, sed sua retinent; et qui sua tribuentes, aliena tamen rapiunt".

위탁되어 관리되고 있는 것이며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것이 공유의 원리이다.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의 첫 그리스도 공동체가 재물을 공유하였다고 소개한다. “신도들의 무리는 한 마음 한 정신이 되었고 아무도 자기 재산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사실 누구든지 밭이나 집을 소유한 사람은 팔아서 그 대금을 가져와 사도들의 발치에 놓았다. 그리고 그것은 저마다 필요한 만큼 각자에게 나누어졌다.”(사도행전 2, 42. 44-45; 4, 32. 34-35; 5, 4.) 예루살렘의 초대 공동체는 이처럼 재물을 공유하였다. 그들은 사회적 이상을 실현하였고, 아무도 자기 재산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공동체는 회개한 신자들이 성령을 받고 성체성사의 신비를 깊이 깨달아 친교와 사랑의 실천으로 이룬 것이다.(사도행전 3, 42.)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재물을 소유하고 있지만 자신은 그 재물에 대한 관리자요 운영자 일뿐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단지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사회의 특징인 평등을 수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그 재물을 서로 나눌 자세가 되어 있었다. 그들은 공동체 일원들 간에 있는 완전한 일치, 한 마음과 한 정신으로 존재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가난하게 살고자 재물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형제들이 부족하게 살지 않도록 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재물을 포기한 것이다. 또한 그들은 가난한 것을 원해서 그들의 재물을 나누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 사이에 아무도 궁핍한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다. 이것은 그들 사이에 형제애를 실천하려는 마음에서 나온 결과이다.³⁹⁶⁾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리스도인의 재물의 공유는 재물에 대한 올바르게 배나 가난에 대한 문제의 해결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신앙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형제들로 구성된 가족처럼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려고 하였다는 점이다. 그래서 그 사회 안에서는 자신의 재물을 나누어주는 부자와 받는 가난한 자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정신적, 물질적 선물을 상호 교환하여 주고받았던 것이다. 사도 바오로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누리는 풍요가 그들의 궁핍을 채워 주어 나중에는 그들의 풍요가 여러분의 궁핍을 채워준다면,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2코린 8, 14.)라고 하였다. 루카는 재물의 공유에 대한 종말론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그들 가운데에는 궁핍한 사람이 하나

396) 참조: J. Dupont, 같은 책, 512.

도 없었다.”(사도행전 4, 34.) 이것은 마지막 날에 실현될 현실인 “너희 가운데에는 가난한 이가 없을 것”(신명기 15, 4)이라는 말씀을 상기시킨다. “예루살렘 초대교회공동체의 모습은 미래의 그리스도 공동체의 모델이다.”³⁹⁷⁾ 사도행전에 언급된 확고한 사실들은 부의 공유가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모두 자유의지 속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보여준다.(사도행전 5, 4.) 예수께서는 재물이 부자의 마음을 닫게 하고 하느님 나라와 타인의 필요를 받아들이는 것을 방해하므로 구원에 장애가 된다고 말한다. 회심한 사람은 소유한 재산으로 사람들을 일치시키고 서로 친구가 되게 하며, 사회적으로 평등한 사회를 지향하고 있다.(사도행전 4, 34.)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공동체가 실천한 재물의 공유는 자발적으로 생겨난 것이다. 예수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타인에게 내어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직체가 필요했다. 그래서 공동체에 돈을 기부하고 싶은 사람은 사도들 앞에 재물을 가져다 놓았다고 루카는 말한다.(사도 4, 35.) 사도들은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재물을 나누어주었으며, 공동체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활동을 하였다. 사도 바오로에게 있어서 복음을 받아들인 부자는 자신의 집을 교회의 모임 장소로 내어주는 것과 공동체의 궁핍한 사람을 돕는 것, 이익에 관한 대립이 있을 경우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는 자세를 갖는 것은 당연한 일로 생각하였으며,(1코린 6,7.) 예루살렘의 가난한 사람을 위해 재물을 공유하도록 하였다.(2코린 8, 13.)

사도 바오로는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조건 부를 완전히 포기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남는 것을 이웃을 위하여 내어주라고 요청한다. 그는 평등이라는 용어로 표현한 코이노이아(koinoia) 즉 친교를 원한다.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하는 것은 사랑의 복음에서 나온 나눔과 봉사정신이다. 사도 바오로가 말했듯이 “내 모든 재산을 나누어주고 내 몸까지 자랑스레 넘겨준다 하여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1코린 13, 3.)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공동체가 행한 재물의 공유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사랑을 기반으로 하였으며,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베풀어주신 회심에 의한, 하느님을 선택하는 근본적인 선택에 의한 것이었다. 이렇게 오늘날의 ‘공유경제’의 원리가 사도시대에 있어 나눔의 문화 또는 사랑의 복음정신을 이어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97) G. Rossè, Nuova umanità, 1991, 75-76, 30.

2.2. 현대교회 문헌의 가르침

「새로운 사태」(Rerum Novarum)란 이름으로 교황 레오 13세가 1891년에 반포한 ‘노동헌장’은 근대 교회역사상 첫 사회회칙이며, 지금까지 사회교리에 관한 교회의 후속 회칙이나 문헌의 기초가 되었다. 이 문헌 이후 계속해서 「40주년」(Quadragesimo Anno, 비오 11세, 1931), 「어머니요 스승」(Mater et Magistra, 요한 23세, 1961), 「지상의 평화」(Pacem in Terris, 요한 23세, 1963), 「제 2차 바티칸 공의회 사목헌장」(Gaudium et Spes, 1965), 「민족들의 발전」(Populorum Progressio, 바오로 6세, 1967), 「80주년」(Octogesima Adveniens, 바오로 6세, 1971), 「노동하는 인간」(Laborem Exercens, 요한 바오로 2세, 1981), 「사회적 관심」(Sollicitudo Conscientia, 요한 바오로 2세, 1987), 「백주년」(Centesimus Annus, 요한 바오로 2세, 1991)이 반포되었고, 성경의 가르침과 함께 이러한 사회교리의 문헌들은 1991년 ‘공유경제’가 세상에 탄생하게 된 배경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공유경제’는 성서와 가톨릭 사회교리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는 가톨릭 사회교리의 관점에서 경제의 도덕적 질서를 규정하고자 하며, 이는 결국 ‘공유경제’가 추구하는 도덕적 질서와 동일한 궤도상에 있는 것이다. 가톨릭 사회교리는 경제가 가진 도덕적 함의를 강조한다. 특히 회칙 「사십주년」에서 교황 비오 11세는 경제와 도덕성의 관계에 대해 경제학과 윤리학이 각각의 원칙을 가지고 있지만, 경제적 질서와 도덕적 질서가 서로 무관하지 아니하다고 언급하였다.³⁹⁸⁾ 오히려 도덕성과 경제학 사이의 관계는 필연적이고 본질적이다. 경제적 활동과 도덕적 행위는 서로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다. 도덕성과 경제의 구분이 필연적이라 하더라도 이는 두 분야의 분리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다. 양자는 필연적인 긴요한 상호관계를 갖는다. 마치 윤리분야에서 경제에 관한 논거와 필요조건들을 설명해야 하는 것처럼, 경제 분야도 윤리 분야의 요구에 대하여 개방적이어야 한다. “경제적·사회적 영역에서도 인간의 존엄성과 온전한 직업 그리고 전체사회의 복지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고 증진되어야 한다. 모든 경제적·사회적 삶의 원천, 중심 그리고 목적은 인간이기 때문이다.”³⁹⁹⁾ 경제의 도덕적 차원에서 볼 때, 경제효율과 인간개발은 양자택일적인 두 개의 목표가 아니라 단일한 하나의 목표이다. 경제활동과

398) 참조: 사십주년, 191항.

399) 사목헌장, 63항.

도덕성은 서로 반대되는 것도 아니고 중립적인 것도 아니다. 도덕성은 경제 그 자체 내의 사회적 효율성의 한 요소이다. 그러므로 빈곤한 사람들 또는 그 사회 집단을 희생시키면서 경제 성장을 이루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경제활동의 도덕성은 반드시 사회와 인류를 위한 것이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통하여 자국(自國)의 발전과 전 인류가족의 진보에 따른 경제활동에 참여해야 한다.⁴⁰⁰⁾ 한 인간이 다른 이에 대해 물질적 나눔을 갖는 것은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것은 연대와 정의에 대한 의무이며, 모든 인류에게 경제적 진보를 가져다주는 최선의 방법인 것이다. 그러므로 경제활동을 도덕적으로 실천하는 것은 각자 개인들의 연대감을 구체화하는 길이며, 그것은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이웃들과의 영적 친교를 돈독히 하는 일이다.⁴⁰¹⁾ 보다 공평한 사회와 더욱 인간적인 세상을 조성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도전이지만, 경제 부문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경제학 연구에 연관된 사람들의 본분이기도 하다.⁴⁰²⁾

경제활동이 인간의 전반적 발전과 성실하게 생활하고 노동하는 사회의 발전을 지향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도덕적으로 올바른 것이다. 경제적 재화의 축적 그 자체는 비록 그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진정한 인간의 행복을 가져오기 위한 충분조건은 아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가톨릭 사회교리는 특정 사회 집단의 이익을 위한 재화의 지나친 유용성과 쉽게 인간을 소유욕의 노예로 만들고, 일시적 만족의 노예로 만드는 경제적 발전 속에 숨겨진 기만을 경고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소비문화 혹은 소비자 중심주의 문화이기 때문이다.⁴⁰³⁾

가톨릭 사회교리는 시장경제 또는 단순히 자유경제에 대하여 도덕적인 평가를 한다. “만일 자본주의가 기업, 시장, 사유재산의 기본적이고 긍정적인 역할 그리고 경제부문에서 인간의 자유로운 창조성뿐만 아니라 생산수단에 대한 결과적 책임을 인식하는 경제체제를 의미한다면 그 대답은 분명히 긍정적이다. 그러나 만일 자본주의가 경제부문의 자유를 총체적 인간의 자유에 봉사하는 그리고 윤리와 종교의 핵심인 자유를 확립하는 강력한 법률 체계 안에 한정시키지 않는 체제라고 한다면 그 대답은 분명히 부정적일 것이다.”⁴⁰⁴⁾ 이처럼 가

400) 참조: 사목헌장, 65항.

401) 참조: 백주년, 41항.

402) 참조: John Paul II, Message for the 2000 World Day of Peace, 15-16.

403) 참조: 사회적관심, 28항.

404) 백주년, 42항.

톨릭 사회교리의 관점에서는 경제활동에 대한 사회적·정치적 환경에 관해서 그것의 규칙뿐만 아니라 그것의 도덕적인 본질과 의미에 대해서 분명한 가르침을 주고 있다.

「새로운 사태」반포 이후의 모든 사회교리 문헌들은 앞에서 지적한 자본주의와 자유주의가 가져온 여러 가지 병폐를 지적하는 동시에, 개인의 자유와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무신론적 계급투쟁을 통한 노동자들의 혁명을 주장하는 공산주의 경제관의 오류도 주의 깊게 비판한다. 한편 모든 사회교리 문헌들은 개인 재산의 인정과 자연 재화와 은총의 공유, 인간 존엄성, 절약과 애덕 실천을 통한 계층 간의 갈등해소, 인류의 공동선을 실현하고 이 세상으로부터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느님의 구원계획에 충실한 복음적 방도를 추구한다. 그 결과 사회교리의 정신에 충실한 ‘공유경제’가 나타난 것이다.

3. ‘공유경제’의 원리인 ‘주는 문화’

‘공유경제’는 성경과 가톨릭 사회교리를 바탕으로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에 대응하고 현실의 경제 환경을 복음정신으로 쇄신하여 그것을 세계적으로 확산해 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공유경제’는 앞서도 기술하였듯이 ‘주는 문화’를 기반으로 하며, 따라서 ‘공유경제’의 질서를 성공적으로 확립해 나가려면 그 복음적 원리인 ‘주는 문화’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본란에서 ‘주는 문화’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3.1. ‘주는 문화’에 대한 이해

오늘날 세계는 심한 불평등 경제구조를 갖고 있다. 몇몇 부국들은 물질적 욕망을 부추기는 소비문화에 빠져있고, 인간존재의 본질보다 오히려 소유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하여 가난한 국가들은 극심한 빈곤과 기아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경제현실에서 ‘주는 문화’는 생명의 문화이며 이는 곧 복음의 문화이며, 성경에 기초한 문화이다. “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다.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 너희 품에 담아 주실 것이다.”(루카, 6, 38.)라는 성경말씀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만일 인간들이 이러한 정신으로 생활한다면 오늘날 빈곤과 불평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실현될 것이다.

주는 문화란 누가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가 아니라, 이웃을 위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얼마나 내어 주느냐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이다. 인간은 누구나 이웃을 사랑할 때 선물을 하고 싶어 한다. 인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주고 타인들과 나누고 싶어 하는 본능도 가지고 있다. 그 본능은 하느님이 인간에게 주신 것이며 따라서 ‘주는 문화’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곧 온 세상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하느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것이다. 그렇다고 나누는 모든 행태가 무조건 공유원리의 바탕이 되는 것은 아니다. 거기에는 다른 사람을 지배할 욕심으로 주는 경우도 있다. 또한 주는 행위를 통해서 개인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행태도 있다. 사실상 그것은 이기적 표현이며 받는 사람에게는 모욕이며 멸시이다. 또 편의주의나 기회주의에 근거하는 행태도 있다. 그것은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이다. 그것은 주는 행위를 통해서 이익을 얻으려는 행태이다.

성 바실리오스는 “당신이 쌓아둔 그 빵은 배를 굶는 사람의 것입니다. 당신이 옷장에 보관하고 있는 그 외투는 헐벗은 사람의 것입니다. 당신이 숨겨둔 그 돈은 가난한 사람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줄 수 있었던 사람의 수만큼 당신은 불의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⁴⁰⁵⁾라고 가르쳤다.

성 토마스 데 아퀴노는 “부자들이 자신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가난한 사람들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을 여분의 것이라고 소비한다면, 그것은 가난한 이들을 강탈하는 것입니다.”⁴⁰⁶⁾라고 하였다. 요컨대 ‘주는 문화’란 그리스도의 사랑의 문화이다.

3.2. ‘공유경제’와 ‘주는 문화’의 관계성

‘공유경제’는 자선 활동이 아니라 ‘주는 문화’에 기초하는 경제활동에 관한 새로운 계획이며 체계이다. ‘공유경제’는 기업 경영에 있어서, 또는 자본, 저축, 이윤의 사용, 기술이전 등에 있어서, 특히 협동조합 형태의 서비스나 생산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주는 문화’에 바탕을 둔 새로운 자세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공유경제’의 원리는 기존의 경제학적 관점에서 탄생된 것이 아니라, ‘절대적 휴머니즘’⁴⁰⁷⁾이라고 말씀하였던 교황 바오로 6세의 인간 개념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공유경제’는 일정한 틀을 가지고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정황을 반영하는 가운데 세계의 곳곳에서 확산되어 가고 있다.

아직은 미미하지만 ‘주는 문화’에 기초하는 ‘공유경제’에 대한 많은 경험들이 축적되어가고 있다. ‘공유경제’는 인간의 생활수준을 평등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며, 각 사람의 개인적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정당한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의 고유한 인간적 가능성을 발전시키도록 도와주고, 그들에게 일자리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그들의 삶의 조건을 향상시키도록 도와준다. ‘공유경제’의 발전은 자신이 소유한 부를 ‘주는 문화’와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는 것을 기본 바탕으로 하고 있다.

‘공유경제’는 궁핍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공유경제’는 기업과 관련한 사람들을 참여시키려고 한다. ‘공유경제’에 충실하다면, 여분으로 가진 것뿐 아니라, 자신에게 꼭 필요한 것까지 내어

405) C. Lubich, L'economia di comunione - storia e profezia, 42.

406) 같은 책, 43.

407) 민족들의 발전, 42항.

주어야 하며 이런 내어 줌은 무한한 이자를 낳는다는 생각으로 가지지 못한 이들에게 주도록 해야 한다. ‘주는 문화’는 복음의 문화요, 복음 자체이다. ‘주는 문화’는 단순히 이익을 주는 것이나 보석과 땅과 집 등 무언가를 주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는 문화’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사람과 기업의 생활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 ‘공유경제’의 원리로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약간의 자선 행위를 통하여 가난한 이들을 위한 삶을 살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업이나 회사 전체의 이익을 자유롭게 공동으로 내어놓는 삶을 선택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돈을 기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부를 생산하기 위해 공유경제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경제적 관계는 기업의 재능과 능력, 전문성이 공동의 선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공유원리는 모든 사람들의 자유로운 양심 속에서 성숙되어야만 성공을 거둘 수 있다.

‘공유경제’의 근본적인 목적은 경제 현실보다 더 나은 세상을 건설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공유경제’는 오늘날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경제의 모습인 소유의 문화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우는 문화, 즉 사랑의 문화를 발전시키고자 한다. 사랑의 문화는 복음적인 사랑의 문화이며,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 그리고 성경의 요약인 복음을 실천할 때에만 가능하다. 한마디로 ‘공유경제’는 ‘나누는 경제’이다. 소유의 문화에 바탕을 둔 소비주의 경제와는 달리, ‘공유경제’는 ‘나누는 경제’이다.

‘공유경제’의 실현을 통해서 경제의 도덕성 내지 인간성을 개선할 수 있다. 또한 이것의 확산으로 사회적 상황을 새롭게 전개하며, 쇠신된 도덕성과 사회 환경은 다시 ‘공유경제’의 발전을 견인하는 두 가지 동력으로 작용한다. 우선 사람들은 ‘공유경제’를 체험하면서 경제와 인간의 관계를 생각하게 되고 도덕적 양심에 자극을 받는다.

공유경제의 경험을 통해 기업인들은 생산 활동을 하는 가운데 새로운 체험과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어, 부지불식간에 물질적 노예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로부터 해방되도록 한다. 이러한 효과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양한 방식으로 인간을 위한 경제 만들기에 동참하게 한다. 공유경제의 원리를 체험한 이들은 적극적으로 공유원리를 전파하기 위하여 가정과 학교에서 교육 활동을 할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공유경제’의 실현과 정착을 위해 애쓰고 있다. ‘공유경제’의 원리를 처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어주기 시작한다. 그들은 자신의 삶과 직업 그리고 회사를 공유원리의 방식으

로 운영하면서 소유하고 있는 재물을 공유원리의 방식으로 활용한다. 빈곤한 사람들도 고유한 창조력을 발동하여 자신을 내어놓는다. 이렇게 ‘공유경제’는 경제활동을 통하여 도덕성 내지 인간성을 성장하도록 자극한다. 특히 ‘공유경제’는 인간의 한 측면인 경제활동을 통하여 인간 존재 전체의 새로운 조화를 도모해 나간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마태오, 6, 24.)고 가르친다. ‘공유경제’는 인간이 물질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하느님을 향한 순례자로서 걸어가야 할 삶의 방식이다.

한편 ‘공유경제’는 경제영역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할 뿐 아니라 사회영역으로 확산되어 인간관계를 개선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며, 동시에 ‘주는 문화’를 통하여 쇠신된 인간관계는 ‘공유경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 발판이 된다. ‘공유경제’는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 관계를 맺어 재물을 서로 나누고, 일에 협력하기 위해서 서로 동업자가 되고, 타인에 대한 예민한 감응력으로 일상생활에서 균형을 맞춘다.

또한 ‘공유경제’의 정신에 따라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타인과의 연대와 ‘새로운 사람들’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게 될 이익의 일부를 내어놓겠다는 것을 미리 선서하고 경제활동을 시작한다.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생산활동을 하거나 일상용품들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사람과 물건과 돈의 관습적인 관계가 형성되고, 그런 가운데 비인격적인 무미건조한 사회상황이 조성되면서 인간 상호간의 존재가 희미하게 인식된다.⁴⁰⁸⁾

그리하여 서로 이해관계가 발생했을 때 상대방이 부정적인 존재가 되거나, 사업상의 경쟁자를 짓밟아서 제거하기까지 한다.⁴⁰⁹⁾ 물론 그것이 오늘날 경제사회가 그런 경향을 갖고 있으며, 사회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러하다. 그러나 ‘공유경제’는 그러한 무미건조하고 관습적인 일상의 경제생활을 역동적으로 전환시키면서 도덕적 인간관계를 가지고 살도록 강조한다.

408) 참조: T. Sorgi, Zaghi, 내어주는 문화, 새인류, 115-120.

409) 이런 측면에서, 경쟁자를 경제적으로 제거하려는 경향이 있는 경쟁의 소모적인 정신을 일부 범죄 활동(마약거래, 공갈, 납치, 입찰을 받기 위한 방법 등) 같이 생각할 수도 있다. 이것은 도덕적, 법률적 측면 외에도 상호 인간적 부정적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이 부정적인 측면은 특히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타인의 신변에 영향을 미치고, 도구화하고, 제거하는 것을 지향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4. ‘공유경제’가 제시하는 경제활동

그리스도교인은 이 세상의 경제·사회생활을 통하여 확신과 긍지와 용기를 가지고 그리스도 왕국을 건설해야 한다. 엠마우스의 제자들이 빵을 쪼개는 나그네의 모습을 보고 주 그리스도임을 깨달았듯이, 오늘날 사람들도 현대의 경제생활 안에 부를 생산하고 이를 분배하고 소유하며 소비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현존을 깨달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현대의 경제 및 사회발전에 적극 참여하여 정의와 사랑을 위해 투쟁해야 하고, 자신이 인류의 행복과 세계 평화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음을 확신해야 한다. 또한 그들은 이 같은 활동에 있어서 개인적으로나 단체적으로 빛나는 모범을 보여주어야 하고,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얻어, 그리스도와 복음에 충실하여 현세 활동에 있어서 바른 질서를 보존하고 개인적 내지 사회생활 전체가 진복팔단의 정신, 특히 청빈의 정신으로 충만해야 한다.⁴¹⁰⁾ 여기서는 ‘공유경제’가 제시하는 경제활동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4.1. 공유경제 실천방법

재물을 공유하고자 하는 사고방식이 ‘공유경제’를 탄생시켰다.⁴¹¹⁾ 재물을 공유하는 목적은 무엇보다도 먼저 재물을 공유하는 것은 이웃을 돕기 위해 재물의 사용을 포기하는 것이다. 즉 재물의 공유는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재물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기 위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포기하고 공유의 삶을 살려는 것이다. 사도행전 4장에 서술된 초대 교회 공동체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내어놓았다. 그들은 재물의 공유를 통하여 그들 가운데 가난한 이들이 없도록 하는 본보기를 보여주었다. ‘공유경제’는 초대교회 공동체의 본보기를 오늘날의 사정에 맞게 자유스럽게 받아들인 것이다. 이러한 본보기는 ‘서로 사랑하라’는 새로운 계명을 실현하는 것이다.

그리고 재물을 공유하는 것은 재물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재물을 공유함으로써 재물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이며 그리고 조직적으로 나눔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재물을 주는 것으로 만

410) 참조: 사목현장, 72항.

411) 참조: T. Sorgi, Zaghi, 내어주는 문화, 60.

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교 복음을 실천하며 살고자 하는 생각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또한 재물을 공유하는 것은 사회적 균형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공동체적인 삶을 살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재물의 공유는 ‘공유경제’라는 특별한 것으로 발전되었다.⁴¹²⁾ 이 ‘공유경제’를 통해 형성된 자본을 하느님의 자본으로 여기고 큰 관대함을 가지고 그것을 내어주는 것이다. 이러한 재물의 공유는 경제행위의 더욱 명확한 형태와 실체를 볼 수 있게 한다. 자신의 재물을 공동의 몫으로 내어놓는 것은 재물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더욱 적극적으로 그것을 사용하기 위함이다. 분배의 측면에서 볼 때 재물은 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재물을 많이 생산해야 한다. 따라서 새로운 측면에서 공동의 몫으로 놓았던 재물의 결실로 또 다른 부를 생산하고, 더 많아지도록 하기 위해 내어놓는 것이다.

‘공유경제’가 시작된 이래 재물의 공유를 실천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였으며, 공유된 재물은 ‘공유경제’의 기초가 되었다. 특히 재물의 공유는 ‘공유경제’의 정신을 신장시켰다. 그 정신은 재물의 사용에 대한 복음적 삶에 대한 응답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재물에 대하여 자유롭지만 근본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루카 14, 33) 사람들은 재물에 대하여 두 가지 서로 다른 자세를 취한다. 어떤 사람은 받을 확실하게 버리는 행위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재물을 사람들의 선익을 위하여 운영해야 하는 하느님의 재산으로 인식하여 받 가운데에 그들의 마음을 놓는다.⁴¹³⁾

이 두 자세는 모두 다 예수 말씀의 영역 안에 있다. 예수께서는 레위와 자캐오에게 각각 다른 것을 청한다. 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버리고 당신을 따르라고 하고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새로운 경제활동으로 회심하라고 한다.

이지노 조르다니(Igino Giordani)는 사회적 관계의 측면에서 자본주의의 뿌리인 자유주의에 반대되는 복음적인 삶의 행위를 분석하면서 “예수는 재물을 갖는 것에 대하여 단죄하지 않는다. 그들의 남용을 단죄한다.”⁴¹⁴⁾고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재물에 대한 애착이 구원에 이르는데 장애물이 된다.’고 하며 재물을 우상화하는 것을 단죄하였고, 마음으로 가난하게 살도록 권유하였다.

412) 참조: Pino Quartana, *Leconomia di comunione nel pensiero di Chiara Lubich*, Città Nuova, Roma, 9-20

413) 참조: C. Lubich, *L'economia di comunione - storia e profezia*, 53.

414) I. Giordani, *IL messaggio sociale del cristianesimo*, Città Nuova, Roma 1963, 214.

(참조: 마태 5,3; 루가 6,20) ‘공유경제’의 원리에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은 재물을 공유하면서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자한다.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어놓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각자의 경제활동을 통해 재물을 내어 놓는 사람들도 있다. 이것은 자신의 가능성과 형제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고려하면서 자신의 양심을 섬세하게 만드는 것이며, 가정의 의무와 사회적 책임을 염두에 두고 각자가 자유롭게 정한 수준으로 ‘공유경제’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것 역시 부분적으로나마 재물을 공유하는 것이며, 그러한 모습은 재물이나 자신을 내어주는 여러 형태를 취하게 된다.

재물을 공유하려고 할 때 자유 안에서 내어 주어야 하며, 남는 것이라는 개념보다는 깊은 의미를 가진 나누는 행위가 되어야 한다.(루카 11,41) 그것은 명확하게 드러나는 공동체적인 의미의 주는 행위이며, 양심적이고도 적극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타인의 필요에 의해 남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요구되었을 때, 가능하다면 자신의 재물 전부를 내어 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개발도상국들을 돕기 위해서는 각자 가지고 있는 지적 재능이나 노동력 그밖에 모든 실현 가능한 형태의 것들을 제공하는 것을 통하여 자기 자신의 재산을 내어 주어야 한다. 이 모든 것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정신과 완전히 부합하는 의향을 가지고 행해져야 한다. 성경에서 예수께서는 자신에게 맡겨진 달란트를 땅에 묻지 않고 더 불어나게 만들어 결실을 풍성히 한 사람들을 칭찬한다.(마태 25, 14-30; 루가 19, 12-27) 그리고 예수께서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이웃 사랑을 하기 위하여 물질적 재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칭찬한다.(루카 16, 8-9)

재물의 공유는 예수로부터 복음적 칭찬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실천한다. 사도 바오로는 데살로니카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리스도인의 임무 중에 노동을 강조하였으며,(참조: 1데살 4, 11; 2데살 3, 7-12) “자기 손으로 애써 좋은 일을 하여 곤궁한 이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에페 4, 28)라고 하였다. 바오로 사도의 이 말씀은 노동은 개인의 의무이며, 먹는 권리가 노동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또한 이 말씀 안에는 노동에 대한 엄하고 활동주의적인 생각이 들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정직한 경제활동에 대한 개인적 임무와 경제활동 안에서 표출해야 할 기업성과 획득해야 할 생산성 그리고 경제활동에 영감이 될 사회적 목적에 대해 명확하게 지적한다.

재물을 공유하려는 이러한 정신은 모든 이들을 위하여 재물이 불어나게 하고 생산적 노동과 임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바로 이러한 정신은 ‘공유경제’를 움직이게 한다.

‘공유경제’는 그리스도의 정신을 실천하여 얻은 경험과 함께 사회, 경제, 문화적 상황들 안에 이러한 정신이 적용되도록 한다. 그러므로 ‘공유경제’의 원리로 활동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경제적 신자유주의로 활동하고자 하는 기업과 노동자들 속에 침투한다.

‘공유경제’의 원리로 기업을 하는 목적은 기업의 자원을 서로 나누고 계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함이다. 그 기업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결속을 보여주는 능력을 갖춘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공유경제’는 공동체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마련하고자 하며, 사유재산, 개인적 활동에 대한 권리, 모든 사람들의 선익을 위해 예정된 자원을 창출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제적 생산과 재물의 세계적인 나눔을 실천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공유경제’는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에 대한 대안 경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공유경제’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실행되는 곳에 가난이 끝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곧 각자의 노동의 존엄성이 유지되고 개인적 자유가 침해받지 않으면서 모든 사람과 정의로운 방법으로 재물을 분배하는 가운데 구매력이 도덕적 요구에 따라 사용되는 경제원리라고 할 수 있다.

‘공유경제’의 원리를 실천하는 시도들은 지금은 가난하지만 가능성을 가진 인간을 찾아 그 사람의 삶이 더 나아지고 노동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경제발전과 청빈의 조화, 금전사용에 있어서 신앙인들은 갈등을 겪을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청빈의 본질은 하느님이 주신 물질적 선물을 경시하고 이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하느님의 선물인 지상의 부를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잘 활용하는 것은 하느님의 창조적 원의이다. 그러나 지상의 부는 그 자체가 수단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목적을 망각하여 근본을 소홀히 하는 것은 부가 지닌 위험이다. 이러한 사실을 깊이 인식하여, 그리스도인은 재물만을 쫓는 일이 없도록 끊임 없는 노력을 해야 한다. 재화를 이용해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인류애와 그 의를 추구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청빈의 본질이다. 그래서 진실로 청빈한 자는 인류의 경제적·사회적 발전을 이기적 욕망의 도구로 이용하는 대신에, 하느님의 선물로 받아들여 모든 사람이 그 이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 힘을 다한다.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먼저 하느님의 나라를 찾는 사람은 누구나 보다 굳세고 보다 순결한 사랑을 받아 제 모든 형제를 도와주고 사랑의 충동으로 정의의 사업을 완성하게 될 것이다.”⁴¹⁵⁾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보다 굳세고 보다 순결한 사랑으로 모든 형제를 도와주고 사랑의 충동으로 정의의 사업을 완성하라고 말한다. 사랑이야말로 정의를 수립하는 힘이다. 사랑이 순수하고 강할수록 정의의 수립이 보장된다. 사랑은 물욕에 빠진 마음에는 타오르지 않으며, 오히려 꺼진다. 복음을 충실히 따르며 복음에서 힘을 얻는 신자들은 정의를 사랑하고 모든 사람과 일치하여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하느님께 이 과업에 대한 결산 보고를 바쳐야 할 것이다.⁴¹⁶⁾

4.2. 공유경제의 분배와 소유

인간이 경제활동에서 생산자로서 노동에 의하여 위대함을 발휘하는 것처럼 분배와 소유에 있어서도 인간의 위대함을 발휘하고 추구해야 한다. 곧 경제활동에 있어 정의를 추구해야 한다.

특히 그리스도교 신자는 하느님이 베푸시는 잔치에 동등한 자격 곧 하느님의 아들로써의 자격을 가지고 참석하여, 다 함께 형제적으로 하느님의 선물인 사랑의 잔치에 참여하는 가장 높은 모습을 지니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상의 모든 부는 창조주가 모든 인간을 위해 내어 준 선물로서 모든 사람이 이를 향유하고 나누고 이용하면서 그 소명을 실현하도록 주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선물인 생산된 물품은 그것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분배되어야 하며, 그렇게 하는 것이 분배의 정의에 맞는 것이고, 이 정의는 하느님의 창조적 원의에 응답하는 것이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정의로운 분배원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하느님께서서는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모든 사람과 모든 민족이 이용하도록 창조하셨다. 따라서 창조된 재화는 사랑을 동반하는 정의에 입각하여 공정하게 풍부히 나누어져야 한다. 민족들의 소유권의 형태가 어떠하든 재화의 이 보편적 목적만은 언제나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러므로 재화를 사용함에 있어 합법적으로 소유하는 외적 사물을 사유물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공유

415) 사목현장, 72항.

416) 사목현장, 93항.

물로도 여겨야 한다. 자신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유익하도록 사용하라는 뜻이다.”⁴¹⁷⁾ 부의 분배양식, 소유형태는 모든 사람이 부를 사용하여 하느님의 창조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변화되어야 한다.

하느님의 창조적 원의는 오직 모든 사람이 재물을 나누어 소비하는 것만이 아니다. 하느님의 물질적 선물인 재화는 이를 끊임없이 증식함으로써 끊임없이 태어나는 인류, 끊임없이 증가하는 인류의 수요를 충족해야 한다. 따라서 ‘공유경제’는 하느님의 선물을 끊임없이 더욱 증식하기 위한 자본을 필요에 따라 축적하고, 이를 토대로 물자 생산을 증대시키고자 한다.

그러므로 경제생활에서 자본축적과 투자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경우 의를 추구하고 빛나게 해야 한다. 자본축적과 투자는 모든 사람들이 하느님의 아가페에 참여할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여기서 모든 사람들이란 오늘 살아 있는 사람뿐 아니라 내일 살 사람, 계속 태어나는 사람들도 포함된다.

그러므로 오늘 살고 있는 사람이 내일을 예견치 못하고 하느님의 선물을 소비하는 행위는 불의이다. 그래서 “투자는 오늘과 내일의 국민을 위하여 충분한 노동기회와 수익을 보장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투자계획을 결정하는 사람은 개인이건 집단이건 국가이건 중책을 자각해야 한다. 즉 한편으로 개인과 공동체에 요구되는 생활필수품을 제공하도록 배려할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 미래를 예견하여 개인과 집단을 위한 현재 소비의 요청과 다음 세대를 위한 투자의 필요 사이에 올바른 균형을 발견하도록 해야 한다.”⁴¹⁸⁾

오늘날 발전한 부국들은 오직 자국의 현재 내지 장래만을 생각지 말고, 세계자본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경제의 혜택을 별로 받지 못하는 국가의 국민을 위하여 아낌없이 재화를 사용하는 것이 절실하다.

“저개발국가와 지역의 긴급한 요청도 항상 고려해야 한다.”⁴¹⁹⁾ 투자와 자본축적에 있어서 경제활동에 수반하여 지극히 큰 영향력을 가지는 것은 화폐이다. 때때로 국제통화가 불안하여 세계경제가 동요함으로써 경제적 아가페를 파괴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통화행정에서 자국과 타국의 이익이 저해되어서는 안 된다. 경제적 약소국가들이 화폐의 가치변동으로 부당한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⁴²⁰⁾

417) 사목헌장, 69항.

418) 사목헌장, 80항.

419) 사목헌장, 70항.

420) 사목헌장, 70항.

그러므로 하느님의 선물인 재물에 대한 분배는 만인의 아가페, 만인의 공유를 그 근본원리로 해야 하며, 부의 소유 또한 그 근본원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가톨릭교회는 사유가 인간의 존엄성에 합치되고 이를 빛내는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한다.

“사유재산이나 외적 재화에 대한 일정한 지배권은 개인과 가정의 자립을 위해 절대로 필요한 생활권을 제공하는 것이며 인간 자유의 연장으로 간주해야 한다. 그것은 또 의무와 책임을 실천케 하는 자극제이므로 시민적 자유의 한 가지 조건도 된다.”⁴²¹⁾

이는 인간의 자유와 책임에 의한 존재적 아가페가 경제의 본질이어야 함을 단정하는 것이다. 인간은 타자로부터 강요되어 부를 생산하고 강요되어 나누어주고 강요된 물품을 소비하는 대신에, 자주적으로 책임을 가지고 부를 생산하며 자주적으로 책임을 가지고 생산한 부를 기꺼이 나누어주고 자유로이 선택한 물품을 자기의 개인적 요구에 합당하게 소비할 때 그 위대함과 행복을 인간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4.3. 공유경제의 저축과 소비

공유경제로 기업하는 이들은 이익의 3분의 1은 실제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고용된 자들에 대한 급여 등 기업에 재투자하고, 3분의 1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3분의 1은 ‘주는 문화’를 위해 일할 ‘새로운 사람들’을 양성할 기관을 위하여 할당하도록 하였다. 초기 그리스도 공동체와 같이 이익의 3분의 1은 그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며, 3분의 1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을 창출하기 위해서이고, 3분의 1은 복음화 된 ‘새로운 인간’ 없이는 새로운 사회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공유경제’를 실현시켜 가기 위한 ‘새로운 인간’을 양성하기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⁴²²⁾

대개의 경우 생존단계 이상의 광범위한 구매력을 가진 소비자들은 그들의 돈을 저축할 것인지 또는 소비에 충당할 것인지에 관한 자유로운 결정에 의해

421) 사목현장, 71항.

422) 참조: C. Lubich, *Conversazione citata in A.A., V.V. Come un arcobaleno*, Roma, 1999, 53-54. <http://www.focolare.or.kr/primaex.htm>

경제적 실체에 중대한 영향을 행사한다. 그리고 저축과 투자는 경제 메카니즘을 통하여 작용하는 가운데 그 금융자원의 활용을 위한 평가는 예상 수익(expected return)이나 상대적 위험에 기초할 뿐 아니라 투자 사업에 대한 가치 판단에 의존한다.

구매력은 반드시 정의와 연대라는 도덕적 요구와 사회적 책임의 맥락 속에서 사용되어야 하며, 사랑의 의무를 잊어서는 안 된다. “사랑의 의무란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에 필수적인 무언가를 제공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넘치는 풍요를 나누어주어야 하는 의무, 그리고 때때로 누군가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나누어주어야 하는 의무”⁴²³⁾이다. 이러한 의무는 구매될 물건의 가격과 품질뿐 아니라 자연환경의 보호, 노동환경의 상태 등을 배려하는지에 대한 개인적 또는 집단적 선호에 영향을 주게 되고, 그러한 영향은 소비자로 하여금 생산자의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소비주의(consumerism) 현상은 존재보다는 소유의 성격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한다. 이러한 현상은 “성숙한 인간성 형성에 방해가 되는 인위적인 욕구와 새롭고 차원 높은 형식의 인간욕구를 정확하게 구별하는 기준”⁴²⁴⁾을 혼란스럽게 한다. 이러한 현상에 대항하기 위해서, “진리와 미와 선의 추구와 공동 발전을 위한 다른 사람들과의 친교가 소비, 절약 그리고 투자의 선택을 결정하는 생활양식을 만들 필요가 있다.”⁴²⁵⁾ 다양한 소비주의적 생활 방식이 소비, 저축 등의 경제적 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오늘날 소비주의가 취하고 있는 문화적 도전에 대하여, 장차 지나치고 무질서한 소비주의에 의해 약탈당한 자연 환경에서 위험하게 살게 될 미래의 세대를 고려할 때, 반드시 큰 결단을 내려야하는 상황이다.⁴²⁶⁾ 이렇게 볼 때 ‘공유경제’는 현대의 소비주의와 경제적 신자유주의에서 오는 심각한 문제점들을 잘 인지하고 있고, 가톨릭 사회교리의 정신에 충실한 ‘공유경제’야말로 새로운 시대를 위한 복음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423) 백주년, 36항.

424) 백주년, 36항.

425) 백주년, 36항.

426) 참조: 백주년, 37항.

5. ‘공유경제’의 전망과 과제

앞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제적 신자유주의는 세계화에 의해 광범위하게 지지를 받고 있는 반면, 선·후진국을 불문하고 반대의 소리 또한 세력을 더해가고 있다. 반대의 목소리 중에서 그 논점과 접근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현실 문제를 크게 중시하는 비판세력과 이론문제를 중시하여 논의하는 세력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전자는 이론적 설득력이 약하고 후자는 실행 가능한 구체적 정책 제언을 하지 못하는 약점이 있다. 특히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빈곤문제와 불평등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의 대안으로 제시된 ‘공유경제’의 전망과 과제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5.1. 전망

지금 세계는 시장경제의 영역 안에서 자유경쟁이라는 냉정한 법칙 아래 다수의 사람들은 가난하고 소수만이 부자라는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최근 공산주의 경제체제가 몰락한 이후, 일부 경제, 금융의 권력가들은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가 승리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제적 신자유주의는 모든 계층의 공동선을 조성하는데 필수적인 경제적 조화에 도달하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으며, 시장경제에 대해서도 더욱 모호한 방식으로 언급한다. 시장경제의 절대적인 원칙에 대한 비판은 더 이상 마르크스주의 이론가들로부터만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사회교리도 최대의 권위를 가지고 비판하고 있으며 전통적 경제학자들의 비판도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공유경제는 사회경제적 추상적 이론의 결과물이 아니라,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마르 12, 31)는 계명에 투철한 신앙적, 사회적 경험에서 나온 결론이다. 이것은 인류에게 모호한 이론이나 이념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실행이 가능하며, 또 이미 실행되고 있는 확고한 경제원리를 제공하려는 것이다. 여기서는 ‘공유경제’의 전망은 어떻게 나누는 문화와 소도시들을 형성하며, 양성학교를 통하여 새로운 사람들을 어떻게 양성하느냐에 달려 있음을 살펴보게 될 것이다.

5.1.1. 주는 문화를 형성해야 한다.

‘공유경제’는 하나의 특별한 문화, 곧 친교와 일치의 문화 안에서 새로운 세상을 꿈꾸며 새로운 백성을 이루도록 도와주는 사랑의 문화를 지향한다. 이 문화를 ‘나누는 문화’라고 하는데, ‘나누는 문화’는 특히 경제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불평등 분배에 대하여 해답을 주고 있다. 그것은 이미 종교적 활동과 문화적 결속의 많은 형태 안에 존재한다. 또한 민족 간의 일정한 관계 안에 존재한다. 자연 재해가 발생했을 때 도움을 주는 것, 기아와 질병으로 죽어 가는 민족들에게 이윤을 바라지 않고 도움을 주고 있다. 이윤 없이 주는 것도 경제활동에서 가능하다. 그런데 ‘공유경제’는 코페르니쿠스적인 개혁을 실현하는 경제활동을 이루고자 한다. 그것은 인간이 경제의 중심이라는 것이다. ‘공유경제’에서 말하는 인간은 어떤 인간을 말하는가? 그것은 복음에서 말하는 이웃이요 형제이다. 어렵고 영웅적인 것으로 보일 수 있는 이 ‘주는 문화’야말로 ‘공유경제’의 실체와 그것의 세계적인 전파를 위한 희망의 기반을 제공한다. 사실 나누는 것은 하느님의 모상을 본 딴 인간 본성의 가장 심오한 욕구에 응답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은 주는 것인데, 주는 것에서 인간의 자아실현을 이루게 된다.”⁴²⁷⁾

‘공유경제’는 단지 사람들 사이에 주는 것과 사랑하는 것만이 아니라, 민족들 간에 주는 것과 사랑하는 것을 강조한다. 인간은 주면서 자아실현을 한다. 존재하기 위해 주는 것이다. ‘새로운 인간’은 이것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실천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성숙하게 된다. 민족들도 줌으로써 성숙할 수 있으므로 한 민족이나 국가는 다른 민족이나 국가를 향하여 줄 수 있을 때 성숙해 진다. ‘공유경제’는 ‘주는 문화’를 올바로 실천할 때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5.1.2. ‘소도시’를 형성해야 한다.

‘공유경제’는 ‘소도시’들을 중심으로 형성되어야 한다. ‘공유경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업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하여 기업을 운영하는 경제원리이기 때문에, ‘공유경제’로 운영되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새로운 경제활동을 이끌어갈 중심점인 ‘소도시’들 주위에 집중되어 있다. 이 ‘소도시’들은 이

427) C. Lubich, Conclusioni del documentario-intervista del novembre. 20.

미 이루어진 사회적 연관 관계를 무시하지 않으며, 다른 사회와 단절되지 않는 평등한 사회를 건설하고자 한다. 이 ‘소도시’의 최종 목표는 모든 인류가 일치된 세계를 건설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⁴²⁸⁾

지금까지 이런 소도시들은 아라첼리(Araceli, 브라질), 오히긴스(O’Higgins, 아르헨티나), 로피아노(Loppiano, 이태리), 폰템(Fontem, 카메룬), 루미노사(Lumonosa, 뉴욕), 타카이타이(Tagaytay, 필리핀), 몬테(Montet, 스위스)에 건설되었다. 1991년 5월에 세워진 아라첼리 소도시는 모범적인 공유경제 단지이다.⁴²⁹⁾ 이 소都市는 브라질의 여러 지역 안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는 회사들의 이익금으로 건설되었으며, 공업, 수공업, 농업, 축산학, 상업, 다른 종류의 서비스 활동을 유치하기 위하여 체계화되었다.

아르헨티나의 오히긴스(O’Higgins) 소都市는 일부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소都市’의 도움으로 건설되었으며, 그 후 동유럽의 소都市들을 포함한 다른 12개의 소都市들이 건설되었다. 이 소都市 안에서 작지만 매우 광범위한 시도들이 시작되었다. 이런 시도들은 단순히 저금이나 부업을 하는 활동에서부터 시작하여 수공업적 차원이거나 그 이상의 규모의 개인적, 협동조합적 회사들이 생겨났다. 이 회사들 중에는 이윤을 서로 주고받는 체계화된 회사도 있고, 소都市에 지사를 세우는 회사도 있으며, 새로 생겨나는 회사들도 있다. 그러나 공유경제의 정신으로 운영되는 기업들은 ‘소都市’들 안에서 서로 연계성을 갖고 있으며, 공유경제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 이처럼 ‘공유경제’가 올바르게 형성되기 위해 ‘소都市’를 더 많이 건설해야 할 것이다.

5.1.3. 새로운 사람을 양성해야 한다.

‘공유경제’는 ‘새로운 사람’이 이끌어 가는 경제활동이다.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사람’이란 복음정신에 따라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다. ‘새로운 사람’은 구체적인 생활 안에서 복음정신에 따라 살며 서로간의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다주는 친교의 영성을 살고자 하는 사람이다. 만일 ‘공유경제’를 실천하고자 하는 새 사람들이 없다면, ‘공유경제’로 하는 기업들이 탄생할 수도 없고, 제대로 가동될 수도 없다.⁴³⁰⁾ 새 사람이 없으면 새로운 경제도, 새

428) C. Lubich, Alla Segreteria Centrale del Movimento Umanita 3, 1992, 1.

429) C. Lubich, Una cittadella pilota, intervista a cura di G. Boselli, Città Nuova 13, 1991, 33.

430) V. Araújo, Una economia per uomini nuovi, in Città Nuova 15/16, 1991, 36-39

로운 정치도, 새로운 과학도, 새로운 의학도 이를 수 없으므로 ‘공유경제’를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람’이 있어야한다. 이미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가와 경제학자, 경제학 교수와 학생들, 기업체의 구성원들을 ‘새로운 사람’으로 양성해야 한다. ‘공유경제’를 자유로이 받아들인 사람들은 경제활동을 통하여 이윤창출과 분배가 분리될 수 없음을 잘 이해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윤리 도덕적인 관념들이 경제적인 요구에 도움이 된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 자율 및 정의 등의 가치에서 창출되는 결과와 무관하게 이 가치를 믿거나, 또는 이와 반대되는 결과에서 나오는 위험성에 대하여 감내할 수 있게 된다.⁴³¹⁾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과 같이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시대에 ‘공유경제’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기업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느냐고 의문을 제기한다. 그런데 이 기업들은 인간적인 조직관계를 방해하거나 마비시키는 내부의 대립을 극복하도록 도움을 주며, 나아가 고객과 납품업자와 투자자들로 하여금 신뢰와 호평을 갖게 함으로써, 더 많은 발전이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최근 여러 해 동안 ‘공유경제’가 발전하도록 하는 본질적인 요인은 ‘공유경제’의 원리로 운영되는 기업들이 구체적인 경제활동에 있어서 하느님의 섭리를 위한 공간을 남겨두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보통의 사업 관행으로는 있을 수 없는 시대사조를 거스르는 선택을 할 때마다 기대하지 않은 수입이나, 예상치 못한 기회, 새로운 협력의 제안, 성공을 기약하는 새로운 제품 아이디어 등을 경험하곤 한다. ‘공유경제’는 오늘날 경제학을 지배하는 신자유주의적 경제활동 방식을 뛰어넘는 일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열쇠가 될 것이다.⁴³²⁾

특히 ‘공유경제’는 세계화의 물결에 의하여 지배되는 현실 앞에서 경제활동을 통해 인류애를 실천함으로써 새로운 변화의 물결을 조성한다. 또한 ‘공유경제’는 자유경쟁을 쫓기보다 오히려 사회적 평등과 정의사회를 구현하고자 노력하기 때문에 21세기의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경제 모델이며, 현시대 경제주류에 의하여 과소평가 되고 있는 도덕성, 인류복지, 인간 존엄성, 공동선, 환경의 생태학적 균형 및 사회적 조화를 환기시키기 때문에 오늘날 새로운 경제의 복음화를 실천하고 있다.

431) 참조: <http://www.focolare.or.kr/primapagina.htm>

432) 참조: C. Lubich. L'economia di comunione storia e profezia, 35-36.

5.2. ‘공유경제’의 과제

‘공유경제’는 가장 합리적인 경제활동을 추구해야 한다. ‘공유경제’의 기업은 그 지역문화에 따르는 기회와 요구사항들에 대한 인지능력, 진지함, 준비, 기술적 기업적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모든 시도들은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의 조언과 공동체의 도덕적, 실질적 지지와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개별적으로 ‘공유경제’를 따르고자 하더라도 세계적인 경험 안에서 조화를 이루며 ‘공유경제’의 원리를 따라 시도하는 다른 사업체들과 서로 연결되어야 한다. 이 원리로 하는 모든 기업들은 전 세계에 산재해 있는 사회적 문제를 형제적 사랑으로 함께 해결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공유경제’의 과제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공유경제’는 경제에 대한 새로운 전망과 희망, 기업 경영의 새로운 노선, 노동에 대한 영적인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야 하며, 양성학교를 통하여 새로운 사람들을 양성하고, 친교의 공동체를 건설하면서 ‘복음적인 삶과 나눔’이 계속해서 실현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5.2.1. 경제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국제적 경제문제들을 포함하는 경제활동의 기본적인 과업은 인류를 위하여 연대성을 갖는 통합적 발전을 성취하는 것이다. 적어도 그 과업은 모든 사람과 인류 전체의 이익을 증진시켜야 한다.⁴³³⁾

이 과업을 성취하려면, 국제적 수준에서 공평한 자원분배를 보증하는, 그리고 상호의존의 인식에 공명하는, 현대인을 경제적·정치적 및 문화적으로 결합시키는, 그리고 윤리적 필연성에 의해서 그것들을 연계시키는 경제에 관한 비전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⁴³⁴⁾

5.2.2. 새 기업경영의 노선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

‘공유경제’는 ‘새로운 사람’이 이끌어 가는 경제활동이기 때문에, 이 원리를 실천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기업경영의 새로운 노선을 요구한다. 그것은 복

433) 참조: 민족들의 발전, 14항.

434) 참조: 가톨릭교회교리서, 2437-2438.

음적 사랑에 반대되는 행위들을 피함으로써 인간과 인간관계를 그 중심에 두도록 하는 것이다. 고객과 납품업자와 공공기관과의 관계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인간의 윤리 도덕을 존중함으로써 법을 지키도록 요구하며, 근로환경과 자연환경 존중에 관심을 갖도록 요구한다.

5.2.3. 양성학교를 통한 새사람을 양성해야 한다.

공유경제는 다른 기업이나 사회적인 현실과의 협력이 잘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면서, 구체적인 경제활동에 있어서는 하느님의 개입과 그분 섭리의 여지를 남겨두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공유경제’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정책을 이끌고 실현해 갈 ‘새로운 사람’이 있어야 하며, 그러한 정책에 따라 기업을 운영할 사람들을 교육할 양성학교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 양성 학교들은 기업과 기업의 모든 구성원들이 세상에서의 어려움을 이기고 굳건히 남아 있을 수 있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최근 몇 해 동안 태어난 학교들은 많은 결실을 맺고 있다.⁴³⁵⁾ 이는 그리스도교 정신에 의한 경제적 행위의 본보기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갈 것이며, 이 길은 자유로이 선택하게 될 친교의 길이기 때문에, 이는 미래의 희망이다. 그동안 ‘새사람’ 양성은 ‘소도시’에 있는 회사와 여러 학교를 통하여 공부하면서 노동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공유경제’가 올바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양성학교를 많이 세워서 가능한 한 ‘새로운 사람’을 많이 배출해야 할 것이다.

5.2.4. 노동에 대한 영적인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

‘공유경제’는 영신적인 현실일 뿐만 아니라 매우 구체적인 현실이며, 인간적인 활동이다. ‘공유경제’가 구체적인 인간적인 활동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구체적인 일을 해야 한다. 이 때문에 ‘공유경제’를 활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공유경제’가 하느님의 사업이기 때문에,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세계에서 보다는 영적이고 종교적인 측면에서 일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하느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여러 해 동안 사생활을 하셨을 때, 혼자 외딴 곳으로 가서

435) 전 세계 33개의 ‘소도시’ 들에서 지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공유경제’에 관한 교육과 세미나를 실시하고 있다. (참조: http://www.edc-online.org/uk/_idea.htm - News & Event.)

묵상하고 기도만 하신 것이 아니고 노동자의 신분으로 생활하셨다. 그분이 이를 선택하신 사실은 인간 생활에서 노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이해하게 한다. 하느님 편에서 볼 때도 노동은 인간 생활에 있어 너무도 중요한 측면이기 때문에 인간에게서 노동을 박탈한다면, 인간존재의 참 의미가 실종될 것이다. 특히 인간은 노동을 통해 스스로를 완성하게 된다. 인간은 노동을 함으로써, 그리고 노동에 수반되는 노고를 견뎌냄으로써 창조주와 구세주의 사업에 동참하게 된다.⁴³⁶⁾

제2차 바티칸공의회는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자연과 우리 노동의 모든 좋은 결실들을 주님의 성령 안에서, 주님의 법칙에 따라, 땅 위에 전파시킨 다음, 우리는 그것들을 다시 찾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때에는 모든 더러움이 정화되고, 빛을 받고, 변화된 것을 다시 찾게 될 것이다. 이 때 그리스도께서는 다시금 영원하고 보편적인 나라를 하느님께 드리게 될 것이다.”⁴³⁷⁾ 그러므로 ‘공유경제’에 속한 사람들도 가능한 한 능동적으로 훌륭하게 노동을 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을 활용하여 정확성, 질서, 조화의 걸작품을 만들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여 좀 더 잘 일함으로써 스스로를 완성시켜 가야 한다는 사실을, 고유한 연구를 통해서도 자신의 직업을 완성해야 한다는 것을 항상 생생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공유경제’의 정신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일을 함으로써 하느님의 뜻을 완성한다고 느껴야 한다. 그러므로 비록 결과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게 된다 할지라도 그저 돈을 벌기 위해서만 일을 해서는 안 되며,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일을 해야 한다. 그 다음 자신이 해야 하는 일 뒤에는, 자기가 맡은 힘든 일 너머에는, 자신에 의해 작동하고 있는 그 기계 뒤에는, 자신이 포장하고 생산하는 상품들 너머에는, 자신이 한 일의 결실을 누리게 될 마지막 단계에는 형제들이 있음을 잊자 말아야 할 것이다.

‘공유경제’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또한 자신들의 봉사를 받게 되는 개인이나 집단과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자신의 일을 잘 함으로써 소비자, 고객, 동료, 책임자에 대한 경청, 개방, 환영, 주의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태도를 키워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태도는 여러 직업의 전형적인 도구와 함께 참된 가치와 진정한 덕을 포함한다. 그리하여 성화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 ‘공

436) 참조: 노동하는 인간, 25-27항.

437) 사목현장, 39항.

유경제'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맡겨진 과업이 무거울 때, 대인관계가 어려울 때, 그들이 만날 수 있는 모순 속에서, 그들은 자신의 전형적인 고통과 고뇌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5.2.5. 친교의 공동체를 건설해야 한다.

‘공유경제’의 정신으로 기업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활의 기초에서부터 모든 측면에 이르기까지 서로간의 사랑으로 친교의 공동체를 건설해야 할 것이다. 일치된 형제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모일 때 부활하신 분이 거기에 현존하신다.(마태 18, 20) 이는 ‘공유경제’의 기업체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그룹의 특징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공유경제’의 정신으로 기업을 하려면, 모든 구성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도록 노력해야 하며, 항상 서로 간의 사랑으로 그들 사이에 예수의 현존을 새롭게 의식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공유경제’ 안에서 하느님과 형제에게 봉사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노동은 이런 가치를 지닌다. 따라서 기업주에서 모든 직원에 이르기 까지 이 분야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간의 사랑을 유지하면서 일을 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모든 구성원이 함께 노동하며, 계획에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경영의 조직 형태를 찾게 될 것이고, 그들 가운데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기업체를 새롭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 기업체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친교의 모델이 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공유경제’의 기업체들은 인간들 사이에 머무시는 하느님의 집이 되게 해야 할 것이다.

5.2.6. 지속적인 ‘복음적인 범람’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람들이 복음을 생활한 결과로 복음이 말하는 생명수가 솟구쳐 올라(요한 4, 14) 다양한 인간 생활 안으로 흘러넘치고 있다. 즉 경제활동에 복음의 정신이 침투하여 ‘복음적 정신’이 살아 움직이고 있다. 이 ‘복음적 활화산’은 실제로 경제계에서 학문과의 사이에 많은 대화를 통해 이루어졌고, 전문가들이 뛰어난 경제학자들과 여러 차례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 ‘복음의 불길’이 계속 퍼져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⁴³⁸⁾

결국 ‘공유경제’는 하느님의 사업이므로, ‘공유경제’에 기여하도록 부르심을

438) 끼아라 루빅, “공유경제의 새로운 전망”, 공유경제대회, Castel Gandolfo, 2004, 9.

받은 사람은 하느님의 도구가 되어야 하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동료들과 고객들을 사랑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직접 일하시도록 해드려야 한다. 사실 세계를 위협하는 테러의 깊은 원인들 중의 하나는 부유한 나라와 가난한 나라 사이의 극심한 불균형에 있다. 이 불균형은 원한, 증오, 복수를 낳으며, 이렇게 해서 과격파들은 보다 쉽게 이 같은 토양에 뿌리를 내리게 된다. 이 세계가 재난과 공포, 증오, 그리고 전쟁의 바다에 빠져들지 않으려면 형제적 유대와 연대가 시급한 과제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공유경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될 수 있으며, 다른 선의의 세력들과 함께 폭력의 행사와는 다른 평화와 공존의 풍조를 조정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세상은 보편적 형제애를 향해 나아가야 하며, 이를 기초로 할 때 높은 수준의 공유경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6. 요약

지금까지 경제적 신자유주의정책에 관한 대안경제로서의 ‘공유경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1991년에 브라질에서 시작된 ‘공유경제’는 회칙 「백주년」의 영향을 받았으며, 초대교회처럼 철저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그래서 자본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이윤을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내어놓는다. 그런데 ‘공유경제’는 경제적 신자유주의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기본 권리인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와 자유 시장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는 진리를 존중하기 때문에, 경제적 신자유주의정책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는 경제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공유경제’는 재산을 축적하지 아니하고 ‘나누는 문화’를 기본 바탕으로 하여 가난한 이들과 함께 공유하기 때문에 경제 문제에 있어서 하나의 새로운 도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공유경제’는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이윤을 내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공유경제’의 지상목표는 가난이 끝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각 사람의 개인적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모든 사람과 정의로운 방법으로 재물을 나누는 길이다. 그러므로 ‘공유경제’는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 원리이며 재화를 공동 소유하고자 한다.

‘공유경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음으로써 모든 사람들 사이의 일치와 형제애를 지향한다. 또한 구성원 각자가 경제활동을 통해 재물의 공유를 실천함으로써, 모든 사람의 선익을 위해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재원을 마련하여 지역적, 국가적, 세계적인 나눔을 실천한다. 한국 상황에서 ‘공유경제’가 반드시 실현해야 하는 과제이다. ‘공유경제’는 긴 기간 동안 활동해야하기 때문에, ‘공유경제’의 원리에 따라 적은 자본으로 처음으로 시작되는 중소기업은 다소 어려움을 겪게 되겠지만, 꾸준히 운영하다보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확신한다. 복음과 사회교리를 바탕으로 한 ‘공유경제’는 오늘날 경제적 신자유주의의 폐단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느님의 계획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III. 결 론

본 논문은 인간의 존엄성이 파괴되고 빈부격차로 인한 양극화 현상이 빚어지고, 점점 더 불평등한 세상이 되어 가는 오늘날의 사회현상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대안 경제를 제시하였다. 왜 이 세상은 점점 더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불평등하게 되어 가는가에 대한 질문은 여러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겠지만, 논자는 한 나라의 국경을 넘어 인류전체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경제적 신자유주의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경제적 신자유주의는 경제적 자유와 시장경쟁을 통하여 자원배분을 최적화하고 저비용-고효율을 지향하며 이윤 창출과 재화의 소유를 최고 목표로 삼는다. 그리하여 노동자의 인권이나 가난한 사람들의 인간적 존엄성, 사회복지에 관해서는 상대적으로 무관심할 수밖에 없다. 시장경제의 우상화로 인한 무한경쟁 속에서 부유한 이들은 점점 더 소유하게 되고, 가난한 이들은 점점 더 소유할 수 없게 되어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지역 간, 계층 간, 국가 간에 불평등이 심각한 세상이 되었다.

신자유주의의 정책들은 경쟁력이 있는 이들에게만 유리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는 사람들은 이 경제정책 앞에서 인간의 존엄성마저 상실하게 된다. 물론 이 정책들은 경쟁력을 키우고 보다 더 잘 사는 사회를 건설하는 데 적지 않게 이바지하는 면도 있다. 하지만 이 정책들은 경제규제 형태를 심하게 파괴하기 때문에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유리한 기업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그렇다면, 점점 더 빈부격차가 벌어지게 하고, 불평등한 세상이 되게 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시키는 경제적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은 무엇일까? 경제적 신자유주의는 자유화, 세계화, 물신화 현상으로 자신의 내면을 드러낸다. 자유화는 국가가 경제활동을 위하여 규제했던 어떤 조치들을 완화하거나 또는 철폐하고자 한다. 이로써 경쟁력이 없는 가난한 이들은 빈곤한 상황에 처해지는 결과를 낳게 된다. 마찬가지로 민영화도 경쟁력이 있는 이들에게만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는 형국을 만들고 있다. 구조조정이나 긴축재정 그리고 노동의 유연화 정책도 경쟁력이 있는 이들에게는 유리한 조건이 되지만 경쟁력이 없는 이들에게는 불리한 조건이 된다. 경쟁력이 없는 사람들은 이러한 자유화로 인하여 인간으로서의 대접도 받지 못하게 되고 점점 더 어려운 처지에 처하게 되어 인간 이하의 삶을 살게 된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자유화 정책으로 말미암아 자본과 노동과의 관계 속에서 삶의 기본적인 요소들을 위협받고 있다. 더욱이 자본과 자본 간의 관계 속에서 많은 이들이 자본의

노예로 종속되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무시당하면서 무한경쟁 속에서 상품처럼 사고 팔리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신자유주의의 자유경쟁이라는 상황 아래서 경쟁력이 있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무한경쟁의 논리 때문이다.

경제적 신자유주의의 또 다른 현상인 세계화는 전 세계적으로 자본력이 튼튼한 국가와 국민들은 더 잘 살게 만들지만 자본이 부족한 빈한한 나라와 그 국민들은 점점 더 살기 어렵게 만든다. 자본이 모든 것을 지배하게 되고, 자본이 없는 국가와 그 나라의 국민들은 자본이 있는 국가와 그 나라의 국민들에게 종속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본이 없는 국가의 국민들은 수입품의 범람과 외채의 압박아래 인간의 존엄성을 상실당한 채 고통을 당해야 한다. 이러한 현실은 신자유주의의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는 폐단에서 오는 현상이다. 결국 세계화도 부유한 이들을 위한 것이며, 빈곤한 국가와 그 노동자들의 인간적 존엄성마저 빼앗으려하는 신자유주의의 경제정책임이 드러난다. 결국 경제적 신자유주의는 자본과 시장경제에 대한 물신숭배로 이어져서 인간의 삶을 비참하게 만든다.

이러한 현실 때문에 교회는 인간의 존엄성을 위협하는 자유주의 경제체제를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자유주의 사조에 대해서 지혜로운 판단을 내려야 한다. 교회가 가르치는 공동선은 부당한 자유경쟁을 피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교회는 자유경쟁과 경제적 독점은 일정하고 적절한 한계 내에 묶여 있어야 하며 국가의 권한에 속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공권력의 효과적인 통제 하에 있어야 한다고 본다. 국가의 공공기관은 모든 인간사회가 공동선의 요청, 즉 사회정의의 규범에 합치하도록 그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가톨릭교회는 신자유주의 물신숭배현상에 대하여 정확히 판단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시켜야 할 것이며, 시장의 논리에 따라 철저하게 희생당하는 인간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하여 투신하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이에 교회는 도덕적인 문제에 관련된 모든 사회 문제에 대하여 분석하고 비판하며, 공동선을 지향하는 정의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교육할 임무를 가지고 있으므로, 도덕적으로 잘못된 경제문제에 대하여 교회는 침묵을 지켜서는 안 된다. 가장 현실적으로 인간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의 윤리 도덕적 문제에 관하여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판단하고 가르쳐야 하는 것이 교회의 권리와 의무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신자유주의에서 수반되는 현상들인 자유화세계화 물신화 과정이 진행된다면, 그리스도교 교회의 본질적 소명인 복음화는 단지

무신론과의 투쟁이 아니라 물신화와의 투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싸움은 결코 단순한 것이 아니라, 우상숭배와의 싸움이 된다. 왜냐하면 현대의 물신화는 손에 잡히거나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도 오늘날 세계화된 매스미디어와 정보(IT)산업을 통해 남녀노소 모두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래서 논자는 인류 공동선과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경제적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대안으로서 ‘공유경제’를 제시하였다. ‘공유경제’는 복음과 현대교회의 사회교리를 배경으로 하여 개인의 완전한 자유의사로 이루어지는 경제 원리로서 서로 돕고, 인간의 존엄성과 공동선을 되살리는 경제 원리이기 때문에,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에 관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공유경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정신에 일치하는 ‘주는 문화’에 기반을 두고 있고, 먼저 공동체에서 그 다음으로 세상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공핍과 빈곤이 사라지도록 노력한다. 이런 ‘주는 문화’는 한정된 자연의 재화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인류에게 골고루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보존하고, 공동선을 지향하는 나눔을 위해 각 사람과 각 회사들이 절약하고 각자에게 필수적인 것들만 개별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윤은 동냥하는 것처럼 분배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부를 분배된다. 또한 ‘공유경제’는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이윤을 내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그들의 가난한 조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윤을 내는 것이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과 같이 자본과 시장경쟁을 중시하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시대에 ‘공유경제’로 운영되는 기업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한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공유경제’가 실천 불가능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공유경제’의 형성과정과 발전현황에서 살펴보았듯이, 실제로 그 정신을 실천하고자하는 기업들이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왜냐하면 ‘주는 문화’는 경제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불평등 분배를 없앨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공유경제’가 추구하는 재물의 공유는 오늘날 경제학을 지배하는 신자유주의적 접근 방식을 뛰어넘어, 현대 세계가 가장 절실히 염원하는 인류 공존과 평화를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열쇠로 부각된다. 따라서 ‘공유경제’는 경제적 신자유주의의 폐해에 대한 대안일 뿐만 아니라, 수많은 가난한 노동자들의 외침이 담긴 시대의 요청이며 가톨릭 사회교리에 따라 도출된 의미심장한 정신인 것이다. 세상과 교회의 과제는 이 공유경제를 복음 선포와 같은 맥락에서 확산시키는 일이다.

『참 고 문 헌』

I. 교회 문헌

- 레오13세, 새로운 사태(Rerum Novarum), 1891, 최영철(역),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4.
- 비오11세, 사십주년(Quadragesimo Anno), 1931, 오경환(역),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4.
- 요한23세, 어머니요 스승(Mater et Magistra), 1961, 강대인(역),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4.
- 요한23세, 지상의 평화(Pacem in Terris), 1963, 이용훈(역),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4.
- 제2차바티칸공의회문헌, 사목헌장(Gaudium et Spes), 김남수(역),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4.
- 바오로6세, 민족들의 발전(Populorum Progressio), 1967, 김남수(역),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4.
- 바오로6세, 팔십주년(Octogesima Anno), 1971, 김남수(역),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4.
- 요한바오로2세, 노동하는 인간(Laborem Exercens), 1981, 범선배(역),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4.
- 교황청 신앙교리성, 자유의 자각(Libertatis Nutius), 1986, 강대인(역),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4.
- 요한바오로2세, 사회적 관심(Sollicitudo Rei Socialis), 1987, 성염(역),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4.
- 요한바오로2세, 백주년(Centesimus Annus), 1991, 김춘호(역),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4.
- 가톨릭교육성, 사제양성,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3.
- 요한바오로2세, Ecclesia in America, 1999.
- 요한바오로2세, 아시아 교회(Ecclesia in Asia), 2000, 김웅태(역),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0.
- 요한바오로2세, 가톨릭교회교리서(Catechismus Catholicae Ecclesiae), 주교회의교리교육위원회(역),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4.
- 간추린사회교리(Compendium of the Social Doctrine of the Church), Pontifical Council for Justice and Peace, 2004.

II. 국내 단행본

- 강내희, 신자유주의와 문화 : 노동사회에서 문화사회로, 문화과학사, 2000.
- 강봉균, 한국경제 발전전략, 박영사, 2001.
- 강상구, 신자유주의의 역사와 진실, 문화과학사, 2000.
- 강수돌, 노동의 희망, 이후출판사, 2001.
- , 경영과 노동, 한울 아카데미, 2002.
- 구재운 외, 시카고학파의 경제학 : 자유, 시장 그리고 정부, 민음사, 1994.
- 김균 외, 자유주의 비판, 풀빛, 1996.
- 김균·박순성, 김대중 정부의 경제정책과 신자유주의, 사회비평사, 1998.
- 김광수, 고전학파, 아세아문화사, 1992.
- 김만권, 자유주의에 관한 짧은 에세이들, 동명사, 2002.
- 김석진·박민수 엮음,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비판을 위하여, 과천논문실, 공감, 1998.
- 김성구·김세균외 지음, 자본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문화과학사. 1998.
- 김수행 편저, 청년을 위한 경제학 강의, 한겨레신문사, 1998.
- 김종수, 전태일을 따르는 민주노조운동연구소(편역), 신자유주의와 세계민중운동, 한울, 1998.
- 김준보, 경제학의 기초-물신성과 인간 소외, 한길사, 1991.
- 김호기 외 편역, 포스트 포드주의와 신보수주의의 미래, 한울, 1995.
- 김춘호, 가톨릭 교회와 사회변혁, 분도출판사, 1998.
- 노명식, 자유주의, 종로서적, 1983.
- , 자유주의의 원리와 역사, 민음사, 1991.
- 노명식 외, 시민계급과 시민 사회, 한울 아카데미, 1995.
- 박길성, 세계화:자본과 문화의 구조변동, 사회비평사, 1995.
- 박장환, 경제사상사의 이해, 학문사, 2000.
- 박준식, 세계화와 노동체제, 한울 아카데미, 2001.
- 서기원 외, 경제학설사, 문영사, 2000.
- 성정모·김향섭 옮김, 인정 없는 경제와 하느님, 가톨릭출판사, 1995.
- 신윤창, 자본주의와 복지국가론, 법문사, 2001.
- 안병영, 임현백,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나남출판, 2001.
- 원윤수, 진정한 세계화의 모색,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 이가옥, 고철기, 공동체경제를 위하여, 녹색평론가, 2001.
- 이근식, 자유주의, 한길사, 1999.

이근식, 황경식, 자유주의란 무엇인가, 삼성경제 논문소, 2001.
 이해주, 조준현, 근대 사회 경제 사상의 이해, 신지서원, 2000,
 이천표, 한국의 외환자유화와 자본자유화, 경문사, 1997.
 임창진, 기업가의 사회적 책임, 세광문화, 1994.
 임현백, 시장. 국가. 민주주의, 나남출판, 2001.
 정갑영 외 3인, 민영화와 기업구조, 나남 출판, 1996.
 정성진 외 11인, 신자유주의 구조조장과 노동체제의 변화, 경상대학교 사회과
 학 논문원, 한울 아카데미, 2002.
 정향선, 자유주의와 그 문제, 선일문화사, 1985.
 정하권, 성숙한 신앙, 가톨릭신문사, 2001.
 조명래, 포스트포디즘과 현대사회 위기, 다락방, 1999.
 조순 외, 하이에크 논문, 민음사, 1995.
 한국사회경제학회, 신자유주의와 국가의 재도전, 풀빛, 1999.
 허창수, 자본주의의 도덕성과 비도덕성, 분도출판사, 1996.
 최논문, 세계화와 읽기, 한울, 2000.

III. 국외 번역 단행본

Baker Ernest, 로크의 이해(*Ear-nest Barker*), 강정인·문지영(편역), 문학과
 지성사, 1995.
 Bernard Haring, 자유와 충실(*Free and Faithful in Christ*), vol. 3, 소병욱
 (역), 바오로 딸, 1996.
 Callinicos, Alex, 반자본주의 선언(*An Anti-Capitalist*), 정성진, 정진상(역), 책
 갈피, 2003.
 Chris Haman, 신자유주의 경제학 비판(*Economics of the Madhouse*), 심인
 숙(역), 책갈피, 2001.
 Daniel Singer, 누구를 위한 세계화인가? (*Whose millennium? Theirs or
 ours?*), 윤길순(역), 살림, 2000.
 Donal Dorr, 가난한 이를 위한 선택(*Option for the Poor*), 오경환(역), 분도
 출판사, 1987.
 Douglas Meeks, M, 하느님의 경제학(*God the Economist*), 홍근수. 이승무
 (역), 한울, 1999.
 Franz J. Hinkelammert, 물신 (*Las Armas Ideologicas de la Muerte*), 김
 향섭(역), 다산글방, 1999.

- Giddens, 제3의 길(*The Third Way: The Renewal of Social Democracy*), 한상진 외(역), 생각의 나무, 1998.
- Hans Peter Martin & Harald Schumann, 세계화의 덫(*Die Globalisierungsfalle*), 강수돌(역), 영림카디널, 1997.
- Hobbbhouse, 홉하우스의 자유주의(*Liberalism*), Oxford University Press, 최재희(역), 삼성문화재단, 1974.
- Immanuel Wallerstein, 자유주의 이후(*After Liberalism*), 강문구(역), 도서출판 당대, 1996.
- Jean Yves Calvez, 교회와 경제 자유주의(*L'Eglise devant le liberalisme économique*), 추교윤(역), 가톨릭 출판사, 1997.
- Jeremy Brecher, (아래로 부터의)세계화(*Globalization From Below*), 이덕렬(역), 도서출판 이이필드, 2003,
- John Stuart Mill, 자유론(*On Liberty*), Indianapolis, Hackett, 1977.
- Kavanaugh, John. F. 소비사회에서 그리스도 따르기(*Following Christ in a Consumer Society*), 오장균(역), 도서출판 지평, 1998.
- Lausur, A, 사회라는 울타리(*Katholische Soziallehre in Text und Kommentar*), 홍종남(역), 한국가톨릭사회과학논문회, 분도 출판사, 1994.
- Lokce, J, 통치론(*The Second Treatise of Government*), 이극찬(역), 세계사상전집, 제34권, 삼성출판사, 1997.
- Lowell Bryan, 세계화 이후의 세계화(*Race for the world*), 황진우(역), 세종서적, 2000.
- Ludwig Von Mises, 자유주의(*Liberalism*), 이지순(역), 한국경제논문원, 1995.
- marx, K, 자본론 제1권(*Das Kapital, Kritik der politischen Oeconomie*), 김수행(역), 비봉출판사, 1996.
- Michael Novak, 가톨릭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The Catholic Ethic and the Spirit of Capitalism*), 허종열(역), 한국경제신문사, 1994.
- Noam Chomsky, 그들에게 국민은 없다(*Profit over people : neoliberalism and global order*), 강주현(역), 1999.
- Oswald Von Nell-Breuning, 자본주의론(*Kapitalismus*), 김종민(역), 분도출판사, 1986.
- Pablo Richard, 죽음의 우상 생명의 하느님(*The Idols of Death and the God of Life*), 기춘 옮김, 가톨릭출판사, 1993.

- Peter Singer, 세계화의 윤리(*The Ethics of Globalization*), 김희정(역), 아케넷, 2003.
- Richard Appignanesi, 촘스키와 세계화(*Chomsky and Globalisation*), 이도형(역), 이제이북스, 2001.
- Richard Sennett, 신자유주의와 인간성의 파괴(*The Corrosion of Character*), 조용(역), 문예출판사, 2002.
- Robert Heilbroner, 고전으로 읽는 경제 사상(*Teachings from the Worldly Philosophy*), 김정수, 이현숙(역), , 민음사, 2001.
- Smith, Adam, 국부론(*An Inquiry into Nature and Causes of Wealth of Nation*), 김수행(역), 동아출판사, 1992.
- Touraine, Alain, 어떻게 자유주의에서 벗어날 것인가?(*Comment Sortir du Libe'ralisme?*)고원(역), 당대, 2000.
- Ulrich Duchrow, 성서의 정치 경제학(*Alternativen zur Kapitalistischen Weltwirtschaft : Biblische Erinnerung und politische Ansätze zur U*), 손태규 옮김, 도서출판 한울, 1997
- Werner Bonefeld, 신자유주의와 화폐의 정치(*Global Capital. National State and the Politics of Money*), 이원형(역), 갈무리, 1999.

IV. 국외 단행본

- Andrew Glyn, *Social Democracy in Neoliberal Times*,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 Arthur Macewan, *Neo-Liberalism or Democracy?*, Zed Books Ltd, New York, 1999.
- Avid Held and Anthony McGrew, *Globalization/Anti-Globalization*, Polity Press, 2003.
- Avital Simhony and D. Weinstein, *The New Liberalism*,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 Coleman, John A, S.J. *One Hundred Years of Catholic Social Thought*, Orbis Books, Maryknoll, NY, 1991.
- Demarartino, G. F, *Global Economy, Global Justice, Great Britain, George Soros, The Crisis of Global Capitalism*, Public Affairs, 1998.
- Friedman M. and Friedman, Rose D, *Capitalism and Freedom*,

- University Chicago, 1962.
- Henry Veltmeyer, Anthony o'Malley, *Transcending Neoliberalism*, Kumarian Press, 2001.
- Keynes, J,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 London, Macmillan, 1936.
- Korrner, Kirk F, *Liberalism and its Critics*, Croom Helm, London, Sydney, 1985.
- Leo Strauss, *Liberalism Ancient and Modern*, Cornell University Press, 1988.
- Michel A. Peters, *Postructuralism, Marxism, and Neoliberalism*, Rowman, littlefield Publishers, INc. 2001.
- Steger, Manfred B, *Globalism*, Rowman, littlefield Publishers, INc. 2002.
- William Roberts Clark, *Capitalism, Not Globalism*, The University of Michigan, 2003.
- Wim Dierckxsens, *The Limits of Capitalism*, Zed Books, London/New york, 2000.

V. ‘공유경제’ 참고도서

- Alberto Ferrucci, *Per una Globalizzazione solidale verso un mondo unito*, Città Nuova, 2001.
- Angelo Comastri, *L'uso del denaro nella vita cristiana*, Rinnovamento nello santo, 2001.
- Chiara Lubich, *L'economia di comunione*, Citta Nuova, 2001.
- Luigino Bruni, *Il prezzo della gratuità*, Città Nuova, 2006.
- Luigino Bruni, Vittorio Pelligra, *Economia come impegno civile*, Città Nuova, 2002.
- Nuova umanità*, 80/81, 105/106, 110, 119, 125, 126.
- Vito Moramarco e Luigino Bruni, *L'economia di Comunione*, Vita e pensiero, Milano, 2000.

ABSTRACT

A Study on a Social Doctrine Plan as an Alternative to Economic Neo-Liberalism

- with Focus on the Economy of Communion -

Why is there such a noticeable distinction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and why does the gap seem to be widening and developing into very unequal worlds? I believe the answer is in one word, economic neo-liberalism which wants to give people unlimited wealth as its ultimate goal. "Who can possess the greatest fortune?" As the rich take a larger piece of the pie and the poor get a smaller piece, an unequal world results. There are, of course, contributing aspects of the economic policy of neo-liberalism that promote competitiveness in economy and built up a much more materialistic community. As the economic policies of neo-liberalism have broken the restrictions of economy, everything is favorable for those who can compete while those who cannot compete always face trouble. Accordingly, it is said that there are no alternatives in the economic policy of neo-liberalism.

In this thesis, the way economic neo-liberalism has destroyed human dignity and the way economic neo-liberalism has led to the widening of the gap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are researched and an alternative to economic neo-liberalism is suggested. Economic neo-liberalism would have all social interests restructured to the benefit of a market economy or subordinate them to relationships with a market economy, requiring non-regularization, flexibility, the privatization of government enterprises, and the abolition of government involvement in public welfare sectors. All this would prevent the interference of the government, because the intervention of the government in the field of economic relations reduces economic efficiency, So it is that many people are threatened in the fundamental area of human life, namely in the connection between capital and labor, by the policy of liberalization in economic neo-liberalism.

The Catholic Church opposes the policy of neo-liberalism, as liberal competition makes overall economic circumstances difficult and unstable. So we, as Christians, have to interpret the trend toward liberalism carefully. Christians cannot agree with a liberalism that praises individual freedom to the highest degree. In fact, many have been extorted in today's industrial system; they live in a circle of poverty, since they can't compete with the products produced from the new method and for the new needs. Therefore the Catholic Church, first of all, should reform itself internally and dedicate itself to those people who are being sacrificed to the principles of the market. In order to overcome economic neo-liberalism, we must firmly implant the spirit of catholicism in the world and this spirit can reform the order of the present time. Moreover an economic policy of communion can be an alternative policy to replace the economic policy of neo-liberalism. The economic policy of communion is one in which people help each other and build up a world where people live well together. It is a policy that leads individuals to act freely on the basis of Christianity and Biblical history. The economic policy of communion respects the right of private property and the free-market in the same way as the policy in neo-liberalism; but it simultaneously looks for other ways to respect the concept of social justice.

The purpose of the economic policy of communion is to help everyone get out of poverty. It is based on the concept of a giving culture. People set forth a policy of using only necessary things individually and in a company. Profit is not distributed as if to beggars, but as a social subsidy it is distributed as a sharing in the wealth of the nation.

The economic policy of communion is not to make a profit for the individual but to make a profit to relieve conditions of poverty by providing jobs for as many people as possible. The policy of communion is not utopian. It places people at the center of economy as brothers. In fact, giving things is a response to the most profound desire of human nature created in the image of God. Although many ask if a company managed according to the policy of communion can survive in an era of

globalization and neo-liberalism, there have been many witnesses to this. Especially, the concept of property in an economy of communion is a new key to make it possible to surpass the approach of neo-liberalism dominant in today's economics.

Finally, I am sure that the economic policy of communion is an alternative to the economic policy of neo-liberalism that focuses on capital in a spirit of competition. Although there are a lot of difficulties in carrying out an economic policy of communion in the circumstances of Korea, if we run a company according to the policy of communion, good results will come out.